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정책보고서 2007-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정경희 최현수 이현주 방효정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06. 11. 1)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6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머리말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소득수준의 저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이며 그로 인한 빈곤은 노후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적 아젠다가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내적 충실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형식상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빠짐없이 구비하였으나 제도의 성숙 및 내실화는 여전히 불충분한 실정이다. 그 결과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세대 노인들에게 있어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대부분이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의 개편이 논의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요한 판단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경험적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17,000명의 노인이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재산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노후소득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결과 보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실태를 제시함으로써 경로연금제도의 개편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제도설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으며, 원내의 이현주 부연구위원, 최현수 부연구위원, 방효정 연구원과 협동연구진으로는 한림대학교의 석재은 교수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 해주신 본 원의 김안나 연구위원과

오영희 부연구위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원활한 노인소득·재산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7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4
제2장 경로연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38
제1절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및 특성	38
제2절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간의 관계	46
제3절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56
제4절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74
제3장 노인의 소득재산 실태조사자료 기초분석	77
제1절 자료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77
제2절 개인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93
제3절 가구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105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설계상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124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특성	124
제2절 정책대안의 선택 기반	127
제3절 대상자 선정 기준	135
제4절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의 규모	155
제5절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159
참고문헌	166
부 록	169

표 목 차

〈표 2-1〉 경로연금의 수급자격: 2007년 기준	40
〈표 2-2〉 경로연금의 지급현황	42
〈표 2-3〉 경로연금의 지급수준	44
〈표 2-4〉 현행 우리나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구성	49
〈표 2-5〉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수급자와 사각지대(2005. 12)	51
〈표 2-6〉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54
〈표 2-7〉 교통수당 수급자 현황(2007)	56
〈표 2-8〉 영국의 공적연금의 성별·연령별 수급현황(2004년 3월 31일)	58
〈표 2-9〉 NICs 소득별 기여율(2003. 4. 6일 개정)	59
〈표 2-10〉 영국의 기초연금 급여수준	61
〈표 2-11〉 Income Support 수급현황(2003년~2004년)	63
〈표 2-12〉 보증크레딧(guarantee credit) 산정시 소득범위	65
〈표 2-13〉 추가비용별 금액	65
〈표 2-14〉 연금크레딧의 기준금액	66
〈표 2-15〉 저축크레딧(savings credit)의 급여액	67
〈표 2-16〉 연금크레딧 유형별 수급현황(2003년~2004년)	67
〈표 2-17〉 연금크레딧 유형별 평균 급여현황(2003년~2004년)	67
〈표 2-18〉 기초연금(OAS) 및 보충적 보증소득(GIS) 급여(2007년 1-3월 기준)	70
〈표 2-19〉 호주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현황 및 2050년 추계	72
〈표 2-20〉 호주 AP 소득조사: 2주당 소득기준(2006. 12)	73
〈표 2-21〉 호주 AP 자산조사 기준(2006. 12)	73
〈표 3-1〉 데이터 종류별 변수목록	79
〈표 3-2〉 원시자료 기준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81
〈표 3-3〉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근로소득/사업소득 항목별 보유실태	83
〈표 3-4〉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별 보유실태	84
〈표 3-5〉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건축물/토지 항목별 보유실태	85

〈표 3-6〉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자동차/임차보증금 항목별 보유실태	86
〈표 3-7〉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금융재산/동산 항목별 보유실태	87
〈표 3-8〉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부채 항목별 보유실태	88
〈표 3-9〉 실사 전후 소득재산 항목별 통계적 차이 검증: 원표본 노인(N=15,411)	90
〈표 3-10〉 실사 전후 소득재산 항목별 통계적 차이 검증: 전체 가구원(N=22,644)	91
〈표 3-11〉 성별 분포	93
〈표 3-12〉 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94
〈표 3-13〉 연령별 분포	95
〈표 3-14〉 연령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96
〈표 3-15〉 시·도별 분포	97
〈표 3-16〉 시·도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98
〈표 3-17〉 지역별 분포	102
〈표 3-18〉 지역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103
〈표 3-19〉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분포	104
〈표 3-20〉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104
〈표 3-21〉 성별 구성 분포	106
〈표 3-22〉 성별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107
〈표 3-23〉 가구 구성 분포	108
〈표 3-24〉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109
〈표 3-25〉 가구 형태 분포	110
〈표 3-26〉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111
〈표 3-27〉 연령 구성 분포	112
〈표 3-28〉 연령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113
〈표 3-29〉 연령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114
〈표 3-30〉 연령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재산 및 부채	115
〈표 3-31〉 시·도별 분포	116
〈표 3-32〉 시·도 구분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117
〈표 3-33〉 지역별 분포	120
〈표 3-34〉 지역 구분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121

〈표 3-35〉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분포	122
〈표 3-36〉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123
〈표 4-1〉 방법별 파악이 가능한 소득원	137
〈표 4-2〉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138
〈표 4-3〉 자료파악 방법별 근로소득	139
〈표 4-4〉 국세청 근로소득 보유여부별 실사자료 실태	140
〈표 4-5〉 자료파악 방법별 사업소득	141
〈표 4-6〉 국세청 사업소득 보유여부별 실사자료 실태	141
〈표 4-7〉 자료파악 방법별 재산소득	142
〈표 4-8〉 국세청 이자소득 보유여부별 실사자료 실태	143
〈표 4-9〉 국세청 임대소득 보유여부별 실사자료 실태	143
〈표 4-10〉 자료파악 방법별 공적 소득	144
〈표 4-11〉 자료파악 방법별 건축 관련 재산실태	145
〈표 4-12〉 주택의 방문조사결과의 행정자료 여부별 재산가치 실태	146
〈표 4-13〉 자료파악 방법별 토지관련 재산실태	147
〈표 4-14〉 자료종류별 유무에 따른 토지 가격	147
〈표 4-15〉 자료파악 방법별 선박, 항공기, 자동차	148
〈표 4-16〉 자동차의 정보종류별 파악유형에 따른 평균가격	149
〈표 4-17〉 자료파악 방법별 임차보증금	149
〈표 4-18〉 임차보증금의 자료파악 실태별 가격	150
〈표 4-19〉 자료파악 방법별 금융재산	150
〈표 4-20〉 예적금의 자료파악 실태별 가격	151
〈표 4-21〉 자료파악 방법별 부채	151
〈표 4-22〉 재산의 소득환산율별 대상자 선정 기준	154
〈표 4-23〉 차등지급 여부별 소요재원 규모 비교	157
〈표 4-24〉 차등지급 방법별 소요재원 추계(재산소득환산율 5% 기준)	158
〈표 4-25〉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과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감안한 추가예산(2007년 기준)	160
〈표 4-26〉 시·군·구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2006년)	165

그림 목 차

[그림 2-1] 경로연금의 성격	39
[그림 2-2] 현행 우리나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구성	49
[그림 2-3]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현황(2005. 12)	52
[그림 2-4] 현행 경로연금 개편방안	75
[그림 3-1] 조사 흐름에 따른 자료유형	77
[그림 4-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상의 절차	131
[그림 4-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달체계에 따른 행정적 필요 조치	164

Abstract

On How to Improve Old Age Allowance System for Enhancing the Financial Security of Older Persons

For the past few years, intensive discussions have been carried out regarding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older persons left outside the public income maintenance system. Bringing evidence-based changes to Old Age Allowance System is viewed as one of the policy options to enhance the financial security of older persons.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income and assets of older persons, based on 'Income and Assets Survey' conducted in August, 2006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ver a sample of 17,000 older person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Subsequently, this study examines a range of policy options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Old Age Allowance System.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looks into Old Age Allowance System and similar policy measures of other countries and draws up ways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The second part is a profile of the income and assets of older persons by groups. Third, and last, issues are thought through and suggestions provided in the event of the introduction of Basic Old Age Pension(a changed Old Age Allowance System) in 2008.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경로연금의 확대개편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제도개선 의 모 색을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 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 빈곤 해소 효과와 현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확대·개편하는 효과를 가짐.
- ☐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 ‘소득·재산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노인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관련된 분석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적 성격과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제도설계에 기여하는 정책대안 모색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2. 연구방법 및 내용

- 무작위 추출된 17,000명의 노인이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06년 8월 14일~9월 8일간 조사된 가구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 자료 분석
- 경로연금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유사 제도의 검토에 기초하여 경로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제시
-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둘러싼 쟁점을 제시하고, 쟁점별 대안과 대안별 자료 분석 결과 제시
 -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고려해야할 이슈들의 제시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음.

II. 경로연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 1998년에 공적소득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현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경로연금제도는
 - － 적용대상 선정기준의 합리성, 적용대상과 포괄성, 급여수준과 적절성, 관리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 대하여 노령으로 인한 추가지출소요를 충당하는 부가급여적 성격과
 - －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노인 중 차상위저소득노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조하는 무각출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경로연금과 유사한 외국의 제도로는 영국의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캐나다의 OAS(Old Age Security)와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제도, 호주의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 등이 있음.
- 경로연금의 부가급여적 성격의 부문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따라 생계급여로 흡수하거나 혹은 별도의 제도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임.
- 무각출연금적 성격의 요소의 경우는 첫째, 경로연금이 공적연금제도 미숙기간을 보완해주는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의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

되, 공적연금성숙기까지의 보완적 노령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보다 충실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

- 즉, 국민연금의 ‘미성숙기’에 발생하는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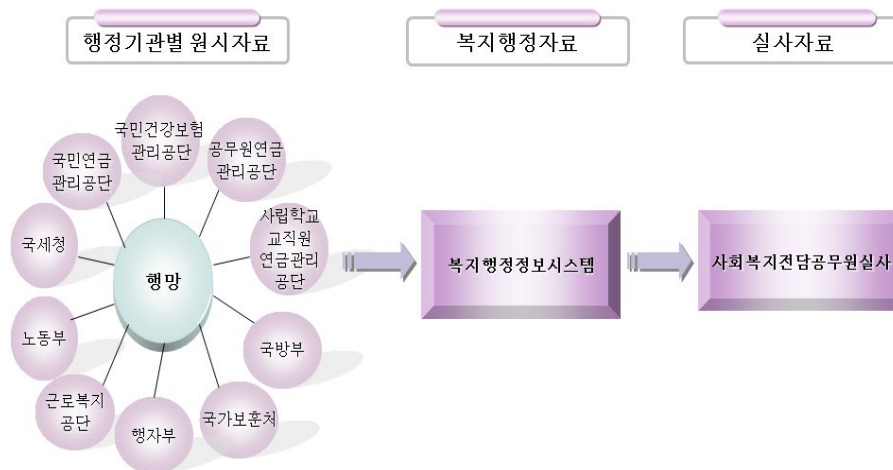
□ 둘째, 경로연금이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이후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도 아닌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 탈락자의 안전망으로서 영구적인 노령소득보장제도로 재편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음.

- 즉, 국민연금 성숙과 관계없이 ‘미성숙기’ 혹은 ‘성숙이후’에도 여타 공적 소득보장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소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임.
- 국민연금 성숙과 관계없이, 또한 국민연금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노인 소속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빈곤한(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정액의 노령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임.
 -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연금보험료 각출 회피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연금제도와의 충돌이 크지 않을 것임.
- 현재에도 상당 규모의 노후소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납부 예외자 및 보험료체납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공적연금수급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갖고 있더라도 연금액의 규모가 적어 빈곤을 경험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민연금 성숙과 관계없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게 될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개편방안의 모색이 적절할 것임.
 - 즉, 이유를 불문하고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Ⅲ. 노인의 소득·재산 실태조사자료 기초분석

1. 자료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 조사 흐름에 따른 자료유형



- 원시자료: 10개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득재산 항목들로 구성
- 복지행정자료(복지DB):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의 기본양식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된 자료

- 실사자료: 복지행정자료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사 후 수정 보완한 자료

□ 세 가지 자료유형별로 노인의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보유비율 및 평균)를 비교 분석

- 분석대상: 원표본 노인(15,411명)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전체 가구원(22,644명)
- 원시자료 (20개 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15개 항목
 - 재산 - 토지, 자동차 등 5개 항목

- 복지행정자료 / 실사자료 (40개 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17개 항목
 - 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28개 항목
 - 부채 - 일반부채, 의료비부채, 주거비부채 등 5개 항목
- 분석방법: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비율, 전체 평균, 보유자 평균

□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보유비율은 4.2%, 국세청 소득유형별 합계 기준으로 원표본 노인의 약 10%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
-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의 경우 국세청 근로소득 보유비율보다 약 1%p 낮은 3.3%
- 원표본 노인의 국민연금급여 보유비율은 12.3%로 보유자의 월평균 연금급여액은 약 15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보훈연금,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보유비율은 1% 내외지만 보유자 평균소득은 국민연금에 비해 크게 높음
- 행정자치부 지적자료의 토지 보유비율은 약 26%로 소득유형별 보유비율에 비해 높음

□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 임시 및 일용 근로소득의 보유비율은 실사 후 약 2배 정도 높아졌으며, 보유자의 평균소득은 임시직의 경우 감소하였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사 후 높아짐
- 총 근로소득의 경우 실사를 통해 보유비율이 5.3%에서 6.1%로 높아졌으며, 국세청 근로소득 보유비율 4.2%에 비해 약 2%p 높은 것임
- 농업소득의 경우, 실사 후 보유비율은 약 3배 정도 높아졌으며, 평균소득도 증가
- 이전소득 중 실사자료의 사적이전은 복지행정자료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함
- 토지와 달리, 건축물은 모든 항목에서 실사에 의해 보유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유자 평균 역시 크게 높아짐
- 자동차는 복지행정자료의 경우 약 9%로 원시자료와 비슷한 수준
- 행정자료에 의해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월세를 중심으로 실사에 의해 보유비율이 약 2배 증가하여 원표본 노인의 5.5%가 보유
- 항목별 부채 보유자의 비율은 실사자료가 복지행정자료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실사 전후 소득재산 항목별 통계적 차이 검증

- 분석방법: 대응표본(Paired Sample) t-test

- 실사자료와 복지행정자료에서 각각 대응되는 소득재산 항목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
- 실사 전후 항목별 차이의 유의미성 검증은 어떠한 소득재산 항목에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사가 효과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결과
- 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기타자영업 분야의 사업소득,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실사자료와 복지행정자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임시 및 일용직 근로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뚜렷한 증가를 보임
- 재산의 경우, 건축물, 토지, 자동차 관련 모든 항목에서 실사자료와 행정자료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임차보증금 중 전월세를 제외한 금융재산, 동산 등 기타 재산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부채의 경우, 의료비 부채를 제외한 일반 부채와 주거비 부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개인총소득,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소득과 재산, 부채별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각 항목별로 실사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사가 노인의 소득재산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에 비해 수급대상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만큼의 행정비용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2. 개인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 원표본 노인(15,411명)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전체 가구원 22,644명에 대한 노인개인의 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실사자료 기준으로 살펴봄.

□ 성별

-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38.7%가 남성, 61.3%가 여성, 원표본노인의 경우 38.4%가 남성, 61.6%가 여성
- 전반적으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비율 및 보유자 평균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인총소득은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소득이 높았음.
- 이전소득의 경우, 남성노인의 52.1%가, 여성노인의 45.8%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자 평균 소득은 남성노인 약 39만원, 여성노인 약 13만원이었음.

□ 연령

-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71.95세, 64세 이하 7.7%, 65~69세 노인 35.1%, 70세 이상 노인 57.5%였음. 원표본 노인의 평균연령은 이보다 높은 73.08세였음.
- 상시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개인총소득, 재산항목 중 건축물, 토지, 자동차의 경우 65~69세의 보유비율이 높았음.
- 사적이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유비율이 높아져 64세 이하 0.7%, 65~69세 3.3%, 70세 이상 5.3%의 보유비율을 보였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64세 이하 약 41만원, 65~69세 약 34만원, 70세 이상 약 30만원으로 나타남.
- 건축물의 경우 64세 이하 7.2%, 65~69세 노인 16.2%가 70세 이상 노인 14.4%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유자 평균소득수준은 64세 이하는 약 1억 8천4백만원, 65~69세 노인 약 1억 3천 4백만원, 70세 이상 노인 약 1억 7백만원임.
- 임차보증금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유비율이 높아져 64세 이하의 0.4%, 65~69세 노인의 4.1%가 70세 이상 노인의 5.0%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보유자 평균 소득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

-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중 16.5%가 서울지역에, 16.4%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3%의 노인은 경북지역에, 7.3%는 전북지역에 거주하였음(분석대상의 약1/3이 수도권에 거주함).
- 울산과 제주에는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1.1%, 1.4%가 거주
- 전반적으로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와 경기도는 그 외 8개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성을 보임.
- 상시·임시일용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경우, 서울의 10.6%,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4.0%(광주)~7.7%(경기)의 보유비율을 나타냈고, 8개 자치단체의 경우 제주지역

(5.2%)을 제외하면 약 3~5%의 수준을 보임.

- 보유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2.9%,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4.0%, 보유자 평균소득은 서울이 약 157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약 53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 농림어업소득·기타 자영업에 포함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지역은 4.0%~8.0%의 보유율을 보였으나 그 외의 8개 자치단체 보유비율이 9.1%~18.8%로 나타남.
 -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지역(18.8%), 광역시 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0%)이었음. 그러나 보유자 평균소득수준의 경우 전남지역 약 36만원, 울산 약 55만원임.
 - 제주의 경우 보유비율은 9.1%에 그쳤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8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약 139만원으로 나타남.
- 토지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의 보유비율 범위가 18.8%(인천)~30.8%(광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지역의 보유비율 범위는 32.3%(강원)~42.2%(전남)로 광역시, 수도권과 기타 도시지역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음.
 - 보유자 평균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약 2억 2천만원, 보유비율 20.9%)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약 4천 8백만원, 보유비율 42.2%)으로 나타남.

□ 지역

- 앞서 살펴 본 시·도 구분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대도시로, 도의 '시'지역을 중소도시, 도의 '군'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전체 분석대상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 전체 분석대상 가구의 39.1%가 대도시지역에, 40.5%는 중소도시 지역에, 20.4%의 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함.
 - 원표본 노인의 경우, 39.3%가 대도시지역에, 40.6%는 중소도시 지역에, 20.0%의 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은 보유비율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유자 평균 소득수준도 대도시 약 193만원, 중소도시 약 112만원, 농어촌 65만원임.
- 사업소득은 보유비율이 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보유자 평균

소득수준은 근로소득과 같은 경향을 보여 대도시 약 117만원, 중소도시 약 79만원, 농어촌 약 57만원이었음.

- 재산소득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전소득과 개인총소득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보유비율은 높으나 보유자 평균금액은 낮게 나타나는, 사업소득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재산항목 중 토지, 금융재산, 동산의 경우는 보유비율이 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보유자평균가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순이었음.
 - 토지의 경우, 농어촌의 보유비율이 43.9%, 평균가액 약 6천 3백만원인 반면, 대도시는 보유비율은 21.6%로 농어촌지역의 약 절반이지만, 평균가액 약 1억 6천만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7.3%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92.7%는 비수급자로 나타남.
 - 원표본 노인은 8.6%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91.4%가 비수급노인이었음.
- 전반적으로 수급대상노인의 경우 그 특성에 의해 임시일용근로소득, 공적이전·사적이전 등 이전소득 등의 보유비율이 높았음.
 - 임시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보유비율 6.0%로, 비수급자의 보유비율인 1.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약 17만원으로 비수급 노인 약 42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역시 수급대상노인의 보유비율은 80.4%, 12.7%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유자평균소득은 각각 약 8만원과 10만원으로 비수급 노인 약 24만원, 36만원에 비해 훨씬 낮았음.

3. 가구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 원표본 노인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15,404가구를 대상으로 성별구성, 가구구성, 가구형태, 연령구성, 시·도, 지역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분석

☐ 성별 구성

- 대부분의 소득항목에서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금액 모두 ‘노인부부 > 남성 노인단독 >

여성 노인단독'의 경향을 보임.

- 반면에, 이자소득과 사적이전의 경우 여성 노인단독의 보유비율이 오히려 높았으나 이 경우에도 평균소득은 남성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재산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과 개인총재산에서 '노인부부 > 남성 노인단독 > 여성 노인단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토지의 경우 남성 노인단독의 보유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가구 구성

- 대부분의 소득항목에서 '노인부부(64세 이하 배우자) > 노인부부(65세 이상 배우자) > 노인단독'의 순서로 나타남.
- 재산과 부채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재산항목과 개인총부채의 보유비율 및 평균가액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임.

□ 가구 형태

- 가구형태에 따라 소득항목에서 대체로 '노인부부가구 >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 > 노인단독가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소득과 이전소득의 경우 다른 경향을 나타냄
- 재산과 부채항목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지만,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음.

□ 연령 구성

-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64세 이하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70세 이상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재산항목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항목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남.

□ 시·도

- 소득재산 항목에 따라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와 경기도가 그 외의 8개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특성을 나타냄.
-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서울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소득 중 농림어업 소득의 경우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서울과 광역시 지역은 1~2%대로 매우 낮은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유비율이 10%를 상회

- 토지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보유비율이 25~35%인 반면 나머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4.3%~57.7%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도 보유자 평균가격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부동산가격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역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면, 상시 근로소득과 총 근로소득의 경우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농림어업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자영업 사업소득과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어 농어촌 지역이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건축물은 보유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평균가액은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토지의 경우 보유비율에 있어서는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가액에서는 대도시 지역이 농어촌보다 3배 정도 높았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수급가구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임시일용 근로소득,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등 이전소득에서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임시 및 일용직의 근로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은 7.2%로 비수급가구에 비해 약 3배 높았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약 18만원으로 비수급가구 4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모두 보유비율은 월등히 높지만, 평균소득은 오히려 낮은 수준임.

IV. 기초노령연금 설계상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1. 기초노령연금의 기본특성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경로연금의 확대개편적 성격을 갖고 있음.

- 경로연금의 수급비율이 65세 이상 노인의 13~14% 수준인데 비하여 기초노령연금

은 노인의 60%가 수급하도록 하고 있어 경로연금이 갖고 있는 선정대상의 포괄성을 대폭 개선한 제도임.

- 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액은 경로연금 급여액 35,000~50,000원 보다 높은 80,000~90,000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경로연금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기존의 기초보장제도나 경로연금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노인과 그 배우자라는 부부단위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큰 차이점을 가짐.

- 즉 사적인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제도임.
 - 단, 부부단위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이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지급액에 있어서도 부부가 대상자일 경우는 각각의 연금액의 16.5%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현행 경로연금에서도 부부일 경우 생활비 절감 등의 근거에 의하여 부부가 동시지급대상일 경우 감액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임.

□ 아래에서는 실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검토사항을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 및 급여액 지급 방법, 그에 기초한 소요예산을 추정해봄으로써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

- 현실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써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제도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기반마련 방안, 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2. 정책대안의 선택 기반

□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그 목적과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행적 정책수단의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며 그 선택을 위한 분석에서는 현실적 집행가능성, 행정적 기반을 우선 고려하고, 그 가능성이 인정된 선택대안에 대한 수월(殊越性) 또는 지배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정책대안의 선택에서 가장 앞서 검토하는 영역은 실행가능성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실

행가능성은 행정적 기반, 행정적 집행가능성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자산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 과정은 일선 담당자의 가구방문과 실사를 전제로 할 경우, 매우 큰 규모의 전담공무원 확충이 필요함.
 - 그러나 당장 필요한 공무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므로,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설계에서 자산조사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져야만 할 것임.
 - 그 방법은 현장 사무소 담당자의 신청 가구방문과 실사를 매개하지 않고 행정자료만으로 자산조사를 수행하는 것임.
- 행정자료의 활용으로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한다 하여도 이러한 방식의 조사가 갖는 한계-조사의 정확성 부족-에 대한 보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행정자료의 불완전성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장치의 강화가 요구됨.
 - 하나는 이의신청과정을 두어 행정자료의 불완전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다른 하나는 엄정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행정자료의 불완전성에서 초래되는 부당이익을 막는 것임.

□ 근로동기의 제고여부와 형평성

- 사회구성원 중 노인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들의 근로활동은 더 할 수 없이 중요하므로, 노인들의 근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선택되어야 하며
 - 노인들이 자산을 처분하는 등 자산형성을 저해하는 행태로 적응하지 않도록 대안이 설계되어야 함.
 - 파악하는 소득의 범위는 너무 넓지 않게 한정하여 신고소득과 재산중심으로 설계한다면 농어민 노인의 근로활동과 도시의 비공식부문의 노인 근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소득인정액의 설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어 일정 수준까지의 자산보유자들이 자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고액재산가들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등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노인들은 청장년층과 달리 소득은 거의 없지만 재산을 축적한 경우가 적

지 않으므로 이러한 고려가 특히 필요함.

□ 수급대상자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

- 정책적 대안 선택의 전제 중 하나는 정책단위가 가구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은 주로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차이반영과 관련됨.
 - 독거노인에 비하여 부부노인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2배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자산조사의 기준과 급여지급액 설계에서 <독거노인 : 부부노인 = 1 : 2>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음.
- 결국 수급대상노인의 가구형태 별 적정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액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방식은 부부노인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차감을 적용하는 것임.
 - 실제 외국의 경우에도 노인들의 소득보장관련 제도에서 단독노인가구와 구별하여 부부의 급여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됨.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선정 기준 경계선 바로 위의 집단 간의 급여지급 후 생활격차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만약 수급자와 기준 바로 위의 비수급자가 급여수급여부로 큰 생활상의 차이를 갖게 되고 이로써 비수급자의 제도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준의 주변에 있는 계층에 대한 단계적 급여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국민연금가입 및 기타 사적인 저축동기의 저하유발에 대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자격요건이나 급여수준이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저하시키고 개인적인 노후 준비동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대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3.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이며, 둘째, 노인이 다른 인구집단과 달리 갖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임.

- 기본방침으로는 행정자료를 통해서만 파악하고, 노인의 근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 이자 등)·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고,

-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 기타재산(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됨.

□ 모든 재산은 동일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도록 함.

- 적용가능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각각 5%, 6%, 7%, 8%를 검토하였으며 소득환산율이 높아질수록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 위의 소득 및 재산의 정의와 각 소득환산율을 본 조사결과에 적용해본 결과 노인단독의 경우는 140,000원, 160,000원, 180,000원, 200,000원의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이 도출되었으며
 - 부부노인의 경우는 226,800원, 259,000원, 291,600원, 324,000원의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이 도출되었음.

□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역진이 발생할 경우 선정기준 부근의 비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이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일부 노인들 사이에 소득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서도 선정기준 부근의 소득역진 현상 방지를 위한 가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차등지급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차등지급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함.

- 차등여부는 소득역진발생가능성과 지급액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등지급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노인들의 불만방지 중 어떠한 측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정책적 결정사항임.
- 차등지급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임.
 - 첫째는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A값의 5%)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감액하는 방법임. 이런 경우 이론적으로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되는 액수가 최대 A값의 5%에서 최소 1원까지 다양할 수 있음.
-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는 경우 차등구간을 미설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계단식 차

등구간을 도입하는 경우 소요예산의 규모는 94.5%에 달하여 4.5%포인트의 절약효과가 있음.

- 보충급여식 차등구간을 설정하는 경우는 소요예산의 규모는 91.0%로 9.0%포인트의 절약효과가 있음.
- 보충급여식 차등구간의 경우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연간 총급여액은 계단식 차등구간을 설정하는 경우의 96.3%의 규모임.

4.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제도의 발전 방향

□ 교통수당

-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60%를 제외하고 교통수당을 기존대로 지급하는 방안
- 둘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60%와 국민연금 및 공적직역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약15%를 제외하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 세째, 교통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 네째, 교통수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60%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기존수급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과 국민연금 및 공적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기존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안

□ 기초보장제도

- 첫째, 원칙대로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을 정하는 방안
 -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4,341억원의 예산절감이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기존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구분하여, 기존수급자는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자연증감분을 합하여 경로연금액만큼을 유지하고, 신규수급자는 원칙대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을 정하는 방안

□ 연금제도

- 첫째, 단기적으로는 연금소득이 노후소득상태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금 및

여타 소득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선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연금비수급권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부동산 및 동산) 소유자를 제외시키고, 근로사업임대소득과 금융재산을 연금화한 소득을 합하여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선별하고 감액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둘째,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소득만 감안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10년 미만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평균소득의 5%(기초노령연금액) 미만인 경우 부족한 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감액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평균소득의 10% 미만인 경우 부족한 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평균소득의 20% 미만인 경우 부족한 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 경우, 최소 소득기준 가입자는 본인 소득을 넘어선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최소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성 있음.
- 셋째, 연금수급권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수 및 지급액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추계결과에 따라 연금 비수급권자의 지급대상자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총기초노령연금 대상자수가 노인의 60% 수준을 유지토록 함.
 - 장기적으로는 연금소득만 조사하여,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비수급권자는 평균소득의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장하고, 연금수급권이 있되 그 수준이 평균소득의 20% 미만인 경우 부족한 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최저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5. 행정적 기반마련 방안

-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중앙센터를 설치하여 소득·재산관련 원자료를 확보하고 가공하여 시군구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의 표준화 지향.
 -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중앙의 정보시스템과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간의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의 신속성 제고.
-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면밀한 협의와 동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소득수준의 저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이며 그로 인한 빈곤은 노후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노인의 약 1/5만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노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사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지원이다(정경희 외a, 2005).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정책적 아젠다가 되어 있기도 하다(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06).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내적 충실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형식상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빠짐없이 구비하였으나 제도의 성숙 및 내실화는 여전히 불충분한 실정이다. 그 결과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세대 노인들에게 있어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대부분이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정경희 외b, 2005),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1차 안전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제도이다.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공적인 보호망의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제도에 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 사학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직역연금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어야 하는 1차 안전망은 장기재정불안정 문제와 함께 적용을 받고 있는 노인인구가 전체 노인인구의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갖고 있다(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06).

한편, 공적 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최종안전망으로는 경로연금과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최종안전망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인은 약 14%이다.

경로연금은 1998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선별주의적 성격을 가진 노령수당제도로 영구적인 요소인 부가급여적 성격과 한시적 요소인 무각출 연금적 성격을 갖고 있어, 성격의 명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급여수준이 낮고 대상규모가 적어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정경희 외b, 2005).

최종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공적 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빈곤 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적부조 수급자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26.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 중 국민기초보장 급여 수급자는 4.8%인데 비하여 노인 중 국민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8.4%로 2배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노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선정기준을 만족시키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각 노후소득보장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어떤 공적제도로부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한동안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의 논의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4년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연금은 물론 경로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의 개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현세대 노인계층의 빈곤문제 해결과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경로연금제도의 개편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경로연금이 제대로 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액 인상은 물론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경로연금제도를 개편하여 적용 범위와 지급액을 증대시킴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경로연금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요한 판단근거가 부족하였다. 즉,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어느 정도인지, 즉 구체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보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였다. 정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5년 실시한 ‘차상위계층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전체 노인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이 약 33.5%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합할 경우 전체 노인의 절반 정도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경로연금개편 방안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료, 즉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는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소득·재산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노인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결과 보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실태를 제시함으로써 경로연금제도의 개편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¹⁾.

두 번째 목적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관련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제도설계를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경로연금제도를 개편방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며, 이는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의 대상의 규모와 지급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경로연금제도를 흡수·개편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현세대 노인의 빈곤해소가 가능해질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경로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과 최종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과정은 부록1에 정리되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급속한 고령화 대비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공공부조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을 확대 (대상자 및 지급금액) 개편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진행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그림 1-1 참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내용을 마련하는데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방법 및 설계에 참여하였다. 설계된 방법에 따른 조사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자에 의하여 실시되었고, 취합된 자료의 분석은 본 연구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노인소득재산실태조사’의 설계와 분석은 본 연구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설계에 의한 실제적인 자료 수집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노인소득재산실태조사’의 조사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개요

- 조사기간 : ‘06. 8. 14~9.8 (4주)
 - 1차 조사(전산망에 의한 조사)
 - 조사의뢰(8.14)→ 조사입력(8.28~30) → 조사집계(8.31)
 - 2차조사(방문조사 후 변경사항 기재)
 - 방문조사(8.14~9.8) → 자료입력(9.1~9.8) → 조사집계(9.8~9)
- 조 사 자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조사대상 : Random Sampling된 노인(7.18, 65세) 17,000명이 속하는 가구

-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 조사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조사내용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에 의한 소득·재산(부채 포함)

나. 조사 방법

- 조사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2편 조사』 기준
 - 조사대상 노인이 속하는 가구단위 조사 : 전산 및 방문조사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개인별 소득·재산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사
 - 부양가족 : 전산조사
 - 조사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지 아니한 부양가족(배우자 및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전산조회를 통해 공부상 소득·재산만 조사
- 조사방법
 - 조 사 표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시·군·구 복지행정전산망상)
 - 전산조사 : 기본적인 재산·소득은 시·군·구 복지행정전산망 활용
 - 소득·재산관련 자료(국가기관 및 지방) 모두를 체크하여 자료화
 - 방문조사
 - 소득조사 : 실제소득을 파악하여 기재
 - 금융재산 : 지역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회

※ 방문 조사시 거부율 감소를 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인 경우 '07년 제도 도입시 본 자료를 활용하고, 거부자는 『상담란』에 기재
- 자료 입력
 - 1차 조사(전산망에 의한 조사) : 8.14~8.30
 - 자산자료 요청시 7일이 소요됨으로 공문접수 즉시(8.16(수)까지) 요청
 - 전산자료 체크(입력)기간 : 8.28~8.30
 - 보건복지부에서 집계처리 8.31
 - 2차 조사(방문조사 후 변경사항 기재) : 9.1~9.8

- 방문조사에 의한 자료 보완·수정은 9.8 18시까지 전산처리
- 보건복지부에서 집계처리 : 9.8 20:00 이후
- ※ 공부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산망 조사와 실제 생활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조사를 1, 2차로 나누어 입력, 집계

○ 자료집계

- 별도의 집계 프로그램(스크립트)을 만들어 시·군·구 복지행정전산망에서 조사완료와 동시 2차에 걸쳐 보건복지부에서 집계

본 연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된 조사자료의 분석 외에도 문헌고찰, 외국사례 검토, 전문가 회의 등이 활용되었다.

2.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²⁾. 제2장에서는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전신인 경로연금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경로연금의 개편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제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갖는 위상과 제한점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며,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을 위한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이 명확해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로연금의 현황과 특성을 정리하고,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간의 관계 및 외국의 유사 제도를 검토 한 후, 이에 기초하여 경로연금의 개편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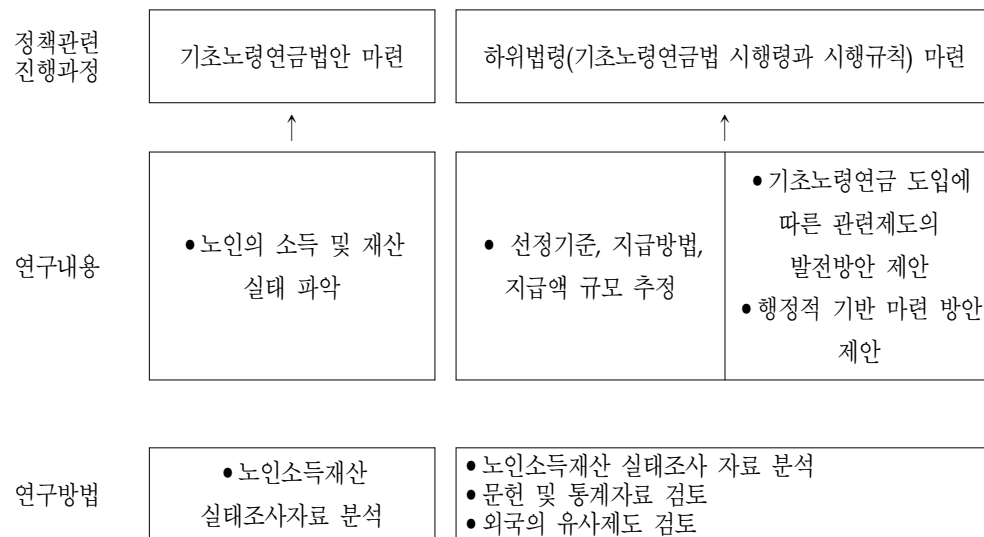
제3장에서는 소득·재산실태조사의 3종류의 자료별로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를 제시하고 노인의 제특성별 및 자료종류별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조사보고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SPSS를 이용한 기초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제4장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제 실행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본 연구는 경로연금제도를 확대·개편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도입에 필요한 자료분석과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즉 기결정된 정책대안의 구체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인 보고서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책적 선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대안의 모색 등의 작업은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을 정리하고자 한다. 즉,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둘러싼 쟁점을 제시하고 쟁점별 대안은 무엇인지, 대안별 자료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진행도



제2장 경로연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본 장에서는 경로연금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경로연금의 개편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로연금의 현황과 특성,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 간의 관계 및 외국의 유사 제도의 검토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도출된 경로연금의 개편방안 마련의 기본방향 또한 제시될 것이다.

제1절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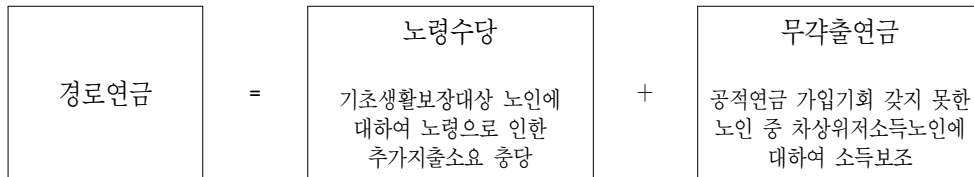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 7월 공적소득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현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다.³⁾ 경로연금은 기존의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제도⁴⁾를 흡수·통합하여 공공부조 수급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의 성격과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현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의 보완적인 무각출연금제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석재은, 2002).⁵⁾

3) 경로연금제도는 1996년 3월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시 노인에 대한 특별소득보장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으며, 1997년 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기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노인 복지법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여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의 30%를 포괄하는 수준의 경로연금을 구상하였으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원과의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 규모가 2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경로연금으로 탄생하게 됨. 또한 경로연금 급여수준도 당초 구상보다 현저히 작은 2만원(차상위저소득노인계층)으로 결정됨.

4) 노령수당제도는 당시 노인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1년 생활보호대상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됨.

5) 석재은,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0호, 2002.9

[그림 2-1] 경로연금의 성격



1. 적용대상 선정기준과 합리성

현행 경로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공공부조 수급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적 성격은 지속되지만, 공적연금의 보완적인 무각출연금제도 기능은 국민연금의 제도성숙에 따라 점차 소멸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경로연금의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저소득 노인으로 1998년 7월 기준 65세 이상(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이다. 2007년 6월 현재 차상위저소득 노인의 경로연금 수급가능 연령기준은 만 73세이며, 7월에는 만 74세로 될 것이다.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차상위저소득) 소득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의 65% 이하인 자로 규정(2001년 60%에서 65%로 변경)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적용된 소득기준은 618천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약 142% 수준이다.

〈표 2-1〉 경로연금의 수급자격: 200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노인
연령기준	65세 이상	73세 이상(7월 이후 74세 이상)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1인가구 435천원	1인당 618천원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평균소득의 65%)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액의 175%)

주: 소득 및 재산조사시 금융자산 조사는 신청자 및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부양의무자는 제외
토록 하며, 출가한 딸은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소득조사만 실시

재산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합계액을 가구수를 나눈 금액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기본재산액의 175%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현재 적용되는 재산기준은 시가기준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독신가구(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해당 노인가구의 재산기준액을 50% 추가하여 인정하며,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노인가구의 재산기준액은 3세대 가정은 100% 추가, 4세대 이상 가정은 150%를 추가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로연금 선정기준에서 제도도입 이후 매년 1세씩 수급자격 연령이 상향조정되도록 하고 있는 연령기준이 본래 제도목표대로 노령으로 공적연금의 가입기회에서 배제된 노인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검토해볼 때, 연령의 지속적 상향조정으로 인한 경로연금의 소멸속도가 공적연금의 성숙속도보다 더 빨라 공적연금과 경로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저소득 노인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⁶⁾

소득 및 재산기준은 200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합리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전에는 재산기준의 경우 경로연금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재산기준 이하인 자로 설정되어 있어서 부양의무자 가구수가 많

6) 이 문제는 적용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을수록 불리한 비합리적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이후에는 총재산의 합을 부양의무자 가구수로 나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로 개정함으로써 부양가구수에 따른 비형평적 선정기준 적용을 개선하였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평균소득의 65%로 설정하고 있으나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유사한 차상위 저소득층 개념이라도 각 제도마다 상이한 기준자료를 적용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⁷⁾

2. 적용대상과 포괄성

2007년 현재 기준으로 경로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3.6%인 65만 4천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노인 수급자가 40만 6천명으로 약 62%, 차상위저소득노인 수급자가 24만 8천명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8년 경로연금 도입당시 기초생활보장노인 수급자의 비중이 약 40%이고, 차상위저소득노인 수급자의 비중이 약 60%였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제도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노인 수급자는 점차 증가해 왔으나, 차상위저소득노인 수급자는 수급연령 상향조정으로 점차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경로연금의 제도목표는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공적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로연금의 공적연금의 보완적 기능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로연금의 사각지대는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수급자격 부여하는 현행 제도들의 범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7) 경로연금은 매년 소득에 대한 조사통계자료가 생산되는 것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라는 점 때문에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삼고 있는 반면, 타제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별도 조사를 통하여 매년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표 2-2〉 경로연금의 지급현황

(단위: 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A)	623,479	574,700	565,898	583,755	585,000
기초생활보장노인	248,764 (39.9)	288,303 (50.2)	333,561 (58.9)	345,769 (59.2)	339,000 (57.9)
저소득노인	374,715 (60.1)	286,397 (49.8)	232,337 (41.1)	237,986 (40.8)	246,000 (42.1)
A/65+노인(%)	20.4	18.0	16.7	16.4	15.5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A)	619,592	618,531	619,385	612,736	654,227
기초생활보장노인	346,113 (55.9)	360,360 (58.3)	378,149 (61.1)	387,286 (63.2)	406,488 (62.1)
저소득노인	272,479 (44.0)	258,171 (41.7)	241,236 (38.9)	225,470 (36.8)	247,739 (37.9)
A/65+노인(%)	15.6	14.9	14.2	13.4	13.6

주: 2007년은 계획치임.

현행 경로연금은 노령으로 공적연금제도의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요구받고 있는데,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속도보다 경로연금의 소멸 속도가 더 빠르게 진전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경로연금 제도의 설계에 따르면, 경로연금제도 수급연령이 75세가 되는 2008년경이면 차상위계층의 수급대상자는 거의 소멸하고 공공부조 수급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적 성격만 남게 된다. 국민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 시점은 전국민 연금화가 달성되고 가입자의 50% 이상이 가입기회를 갖게 된 199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경로연금의 수급기회가 1999년 당시에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1939년생까지는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나, 현재는 1998년 7월 기준 65세 이상인 1933년생으로 한정되어 6년간의 연령적 괴리가 사각지대로 남게된다.

한편, 현행 경로연금은 어떤 이유에서든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공적연금의 적극적 보완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연금의 가

입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들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보험료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미납자가 전체 가입자의 45.5%에 이르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출방식에 입각한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완전고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최근 경제의 세계화(globalisation)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과정에서 완전고용의 신화는 붕괴된지 오래이고,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임시직, 시간제, 계약제 등 불안정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안정된 각출이 보장되는 완전고용하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위험방어 기능을 현저히 축소시키고 있다. 즉, 변화된 노동시장 여건에서 각출에 기반한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보편적인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업과 불안정고용을 반복하는 상당수 계층은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임시직·시간제 등 불안정고용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혼율이 증가하고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7년여 더 길어 노년기에 저소득이면서도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성숙 이후에도 장기실직 및 미취업 등의 이유로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아닌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경로연금의 위상 재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3. 급여수준과 적절성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의 특별노령연금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국민연금 최저표준소득등급(22만원)의 최저가입기간(5년) 충족자의 특별노령연금 급여수준은(노령연금 6.4만원+가급연금 1.6만원) 약 8만원 수준이다. 2007년 현재

경로연금 급여수준은 기초생활보장노인 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 65~79세 노인은 4.5만원이며, 차상위저소득노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3.5만원, 부부수급시에는 각각 3.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이 차상위저소득계층의 경우 3.5만원으로 너무 낮아 각출에 기반한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5~6만원 수준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3〉 경로연금의 지급수준

기초생활보장노인		저소득노인	
65~79세	80세 이상	단독수급	부부수급(배우자)
45,000원	50,000원	35,000원	30,630원

4. 관리운영의 효율성

경로연금의 선정 및 관리는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정책상 경로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해도 일선에서 경로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경로연금의 차상위저소득계층 수급자의 연령이 매년 상향조정됨으로 인하여 65~72세 노인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도시지역의 경우 경로연금의 재산기준이 너무 낮아 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셋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급여규모가 비교적 적은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작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여진다.

경로연금 급여지출 예산은 2006년의 경우 수급자 62.5만명을 기준으로 총예산은 3,142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2,153억원(68.5%), 지방비부담이 989억원(31.5%)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8) 경로연금 재원조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70%: 30%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50%: 50%임.

이와 같은 경로연금의 급여지출 규모는 노인복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 등 타 공적노령소득보장제도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이다. 그런데 경로연금의 경우 10배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개별급여수준도 10배 가량 차이나는 공공부조와 동일하게 복잡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편익에 비해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5. 타공적소득보장제도와 역할분담의 적절성

현행 경로연금은 공공부조 수급 노인에 대한 추가지출소요에 대한 부가적 급여(노령수당)의 성격과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현 노인 중 차상위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각출연금제도의 성격이 복합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고 향후 제도의 발전방향과 위상의 수립에 혼란을 주고 있다.

현행 경로연금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공적연금의 보완적인 역할로서의 차상위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각출연금제도 기능은 소멸되고, 공공부조 수급 노인에 대한 부가적 급여(노령수당)로서의 기능만 남게 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여 노령소득보장제도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해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공공부조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모두 제외되면서도 저소득인 차상위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이 현행과 같이 한시적·경과적 제도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존속하여 노령소득보장체계의 2차 안전망으로서 공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보충급여시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경로연금을 최저생계비 이상의 과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가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수당이 도입된 1991년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하지 않던 상황이고 노인빈곤이 특히 심각하였기 때문에 극빈층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의 도입이 설득력이 있었으나, 보충급여의 실시로 생계급여 수준이 현실화된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노인의 경우 타연령계층에 비하여 보건의료지출은 높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타연령계층보다 소비지출성향이 낮아 노인이 보편적인 추가지출소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⁹⁾ 이와 같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 원칙에 기반하여 최저 생활의 100%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연금은 중복급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별도의 보장장치(장기요양급여 등)를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간의 관계

1. 우리나라의 노령소득보장체계

우리나라의 노령소득보장체계는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와 사적 소득보장제도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경로연금이 있으며, 사적 노령소득보장제도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개인연금 등이 있다.

[그림 2-2] 는 현행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설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

9)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소요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수당은 분명한 지급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적 성격의 경로연금은 생계급여의 수준이 현실화된 현재에 있어서는 그 지급근거가 분명치 않음. 석재은·김태완(2000)이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기반하여 연령계층별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노인의 평균소비수준은 50대 근로계층의 60% 수준이며, 소득항목별로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등에서 현격히 감소된 소비지출을 보인 반면, 보건의료비에서는 근로계층보다 훨씬 높은 소비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비지출이 근로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부양가구원 규모의 축소, 인생주기상 연령에 따른 욕구의 상이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각각 소득효과, 가구규모효과, 연령효과로 명명함.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소득의 제약 없이 노령으로 인한 자연스런 지출변화를 감안한 노인의 필요소득이 적정필요소득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보고, 적정필요소득을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와 가구규모효과만을 감안하여 노인의 필요소득을 산출하였음. 그 결과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마이너스(-)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임을 발견함. 또한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임을 발견함. 이와 같이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1분위를 제외하면 50대 근로계층 가구주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소비수준은 70~80%로 나타남. 한편, 소득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50대 근로계층 가구주 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소비수준은 평균 50.8%이며, 소득계층별로 45~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도로 되어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 제도로써 피용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으며, 특수직역종사자의 경우 퇴직수당이 연금제도내에 있으며, 모든 국민은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통하여 추가적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에는 보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1차 안전망으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1층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직역연금제도가 도입·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를 통하여 마침내 전국민 연금화를 달성하였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부터 실시되어 이미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3개 공적직역연금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급여산식과 급여율, 보험료율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45%이며 공적직역연금의 급여율은 70%이다.¹⁰⁾ 한편,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역사가 짧아 65세 이상 노인 중 연금수급자가 12.4%에 불과하며, 공적직역연금은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대상이 작기 때문에 노인 중 2.8%에게 노령연금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수급받는 노인은 15.2%에 불과하여, 현단계에서 공적연금을 노령소득보장제도의 주축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둘째, 공적 노령소득보장체계의 보완적 최종안전망으로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0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의 형태로는 2000년 10월부터 생활보호제도에서 명칭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

10) 국민연금 급여산식: $[2.4(A+0.75B) \times p1/20] + [1.8(A+B) \times p2/20 \times (1+0.05n)]$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전체가입기간의 평균표준소득월액

p1: 1998. 12. 31 이전 가입연수

p2: 1999. 1. 1. 이후 가입연수

n : 20년 초과 가입연수

공적직역연금 급여산식: $W \times (0.5 + 0.02n)$

W : 퇴직전 최종3년간 평균보수월액

n : 20년 초과 가입연수 단, $n \geq 13$

호제도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확인된 모든 국민들에게 보충적 생계급여를 통하여 빈곤선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하여 노인이 아직도 주요한 빈곤계층이므로, 공공부조 수급자 중 노인의 비중이 29%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 중 공공부조 수급자는 8.4%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제도는 일반적인 사후적 소득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와 같이 0층의 노령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경로연금제도는 특별히 노령의 위험에 대한 제도로서 노령수당적 성격을 가지지만,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노인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경로연금제도는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공공부조 수급자인 노인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생계급여에 더하여 부가급여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동시에, 노령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차상위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는 무각출 연금제도의 성격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경로연금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13~14%에게 지급이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사적 소득보장제도로는 각 기업의 관장하에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1994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저축·보험상품이 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1년 근무자에게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8.3%의 적립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기도 하나 노사간에 의견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림 2-2] 현행 우리나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추가보장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금 (or 기업연금)	퇴직수당
1차 안전망	1층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최종안전망	0층	경로연금	
		(빈곤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표 2-4〉 현행 우리나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층		체계	사회위험	표적계층	수급자(혹은 가입자)
0 층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빈곤	저소득층	· 140백만(빈곤선이하계층) · 이 중 65세이상 노인은 406천명 -기초보장 수급자의 29% -65세 이상 노인의 8.4%
	무각출연금	· 경로연금	· 노령 & 빈곤	저소득 노인	- 654천명 -기초보장수급자 406천명 -차상위저소득층 247천명
1층 (사회보험)		· 국민연금	· 노령 · 장애 · 사망	일반국민	· 가입자: 모든 국민 (실질적으로 18~59세 경제활동참가자)
		· 공적직역연금	· 노령 · 장애 · 사망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가입자: 모든 공적직역 종사자
2층 (법정퇴직금)		· 법정퇴직금제도	· 퇴직	피용근로자	· 1년 이상 근로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3층 (자율 개인연금)		· 자율 개인연금	· 노령	임의적용	· 임의적용

2. 국민연금과의 관계¹¹⁾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9년을 경과하고 있으나, 전가입자의 50% 이상이 8년전인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적용을 통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 노인 중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계층은 많지 않다. 제도적으로 초기가입자를 위하여 특례노령연금을 통하여 5년만 가입하여도 연금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노인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05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은 약 54.2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2.4%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20.6%인 36.3만명, 여성노인의 6.8%인 17.9만명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9%, 사학연금 0.2%, 군인연금 0.7%로, 공적직역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2.8%인 약 12.4만명 수준이다.

국민연금 및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5.2%인 66.6만명이며, 이중 남성노인이 48.0만명, 여성노인이 18.6만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남성노인의 27.3%, 여성노인의 7.1% 수준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 수혜로부터 배제된 규모는 372만명으로, 노인의 84.8%가 공적연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72.7%, 여성노인의 92.9%가 각각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11) 석재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 제53호. 2003.; 석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향” 2007년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표 2-5>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수급자와 사각지대(2005. 12)

(단위: 명, %)

		65세 이상 공적연금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성별 65세 이상 인구(b) 기준 사각지대
		소계(a)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5세 이상 수급자	남	480,238 (72.1)	362,553 (66.9)	78,762 (94.1)	10,049 (92.0)	28,874 (99.0)	1,279,483 (34.4)
	여	185,513 (27.9)	179,437 (33.1)	4,912 (5.9)	872 (8.0)	292 (1.0)	2,437,922 (65.6)
	전체	665,751 (100)	541,990 (100.0)	83,674 (100.0)	10,921 (100.0)	29,166 (100.0)	3,717,405 (100.0)
65세 이상 수급자	남	27.29	20.60	4.48	0.57	1.64	72.7
	여	7.07	6.84	0.19	0.03	0.01	92.9
	전체	15.2	12.4	1.9	0.2	0.7	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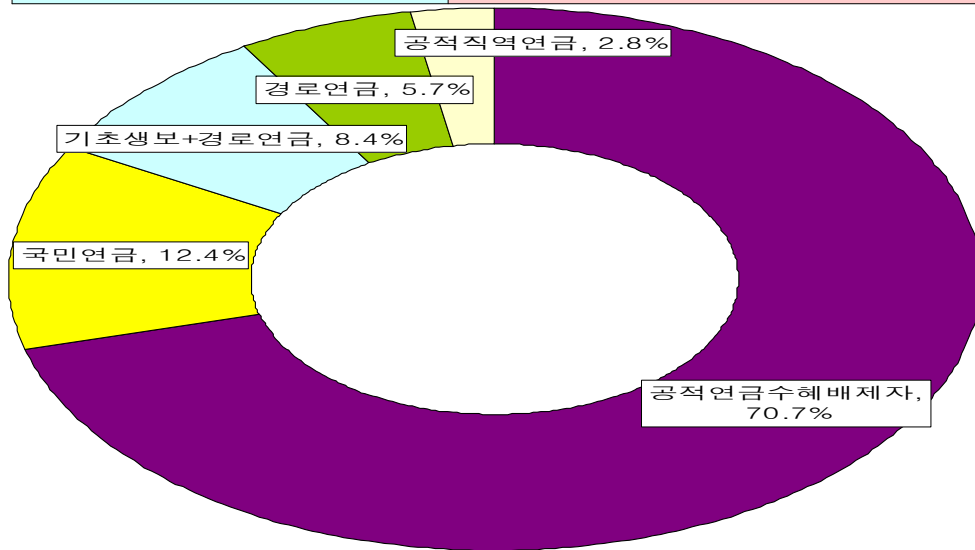
주: 2005년 기준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6,296,712명, 남성 노령인구는 2,675,029명, 여성 노령인구는 3,621,683명임. 군인연금은 2002년 자료로 여성가입자는 수급자의 1%로 가정한 것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05;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3;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석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향” 2007년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에서 재인용.

공적연금 이외에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 등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 중 61.8만명으로 14.1%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6.8만명이고, 경로연금만 수급하는 차상위저소득 노인이 25만명으로, 각각 8.4%와 5.7% 수준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438만명의 노인 중 공적연금 수급자 15.2%,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 등 공공부조 수급자가 14.1%로, 총 29.3%인 128만명만이 공적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을 뿐이며, 나머지 70.7%인 310만명의 노인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부터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은 아직 노령소득보장제도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미성숙한 상태이다.

[그림 2-3]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현황(2005. 12)

65세 이상 총인구 4,383천명 (100.0%)				
국민연금 수급자 542천명 (12.4%)	공적 지역연금 수급자 124천명 (2.8%)	공적연금 사각지대 3,717천명 (84.8%)		
공적연금 수급자 666천명 (15.2%)	기초생활 보장+경로 연금 368천명 (8.4%)	경로연금 250천명 (5.7%)	(기초+차상위) 618천명 (14.1%)	경로연금총수급자 공적소득보장 비수급자 3,099천명 (70.7%)
공적소득보장 수급자 1,284천명 (29.3%)		공적소득보장 비수급자 3,099천명 (70.7%)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05;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5;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통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석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향” 2007년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재인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노인 소득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노인의 빈곤율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인데 비하여 기초보장 수급자 대비 노령인구 점유율은 29%로 노령인구의 기초보장 수급자 확률이 3배를 넘고 있다. 그러나 빈곤한 노인이 많아 최종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에 노인 수급자가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4% 수준으로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수의 노인은 국민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도 아닌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목표나 작동원리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근로연령기 연금보험료 각출에 기반하여 노령기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최소 10년)의 각출과 60세 이상이라는 연령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근로연령기에 비교적 충실히 소득활동을 하고 노령기를 맞은 노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지만, 근로연령기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연금수급조건에 부합하는 일정기간 각출을 하지 못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자의 근로연령기 소득대체라는 본래 제도의 목적에 따라 소득활동을 충실히 한 노인에 대해서는 1차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어떤 이유에서든 소득활동이 충실히 못했던 노인은 1차적 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 탈락하여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산조사에 의거하여 ‘빈곤’함이 입증되면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제공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누구도 최저생활 미만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빈곤’계층의 최종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표 2-6〉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위험	노령/장애/사망시 소득상실	빈곤
제도목표	노인 소득보장 - 노령기 빈곤방지 - 근로연령기 생활수준 유지	최저생활보장
제도기능	1차적 안전망	최종 안전망
수급조건	최소 10년간 각출 60세 이상 노령(최소 55세 이상)	자산조사 / 빈곤 연령 관계없음
재원	연금보험료	조세

노후 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이 1차안전망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안전망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잔여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이하에 놓여진 사람들만을 수급대상으로 함으로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보완적 제도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양 제도 모두의 비수급자가 상당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선대안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효과가 클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이 감소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것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역할은 감소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표적계층이 저소득계층일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노인에게 수행해 왔던 역할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여부에 따라 현금급여인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주거,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현물급여 수급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국민연금 혹은 노령수당 수급에 따라 더 이상 빈곤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서 많은 현물급여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된 의료, 교육, 주거, 장기요양서비스 등 현물급여가 욕구의 개별성에 맞추어 수급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급여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4. 교통수당과의 관계¹²⁾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경로우대의 일환으로 노인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하에 운영되는 교통수당제도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9,800~28,500원 수준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80년에 경로우대를 위해 도입된 「노인승차권」 지급제도가 발전한 것으로 1994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즉 경로우대 차원에서 노인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요금 지원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수당으로 도입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대상자 선정원칙은 신청주의로 65세 이상자로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자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노인의 98.7%가 교통수당을 신청하고 있으며, 6,603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매달 해당지역(시·군·구)의 버스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별로 버스요금이 상이하고 지급 매수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저소득노인, 일반노인 등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받는 경우는 대전지역의 기초수급자로 월 28,500원이며, 가장 적은 액수가 지급되는 밀양 등의 경우 9,8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군지역의 5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제주 군지역 노인이 18,700원을 수급받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1인당 교통수당 평균급여액은 월 11,847원이다.

교통수당 재원은 지자체 전액부담으로, 지자체내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차간 분담비율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광역시는 광역 대 기초의 비율을 살펴보면 50:50이며, 도지역은 대부분 15:85의 분담비율을 갖고 있지만 강원도는 20:80, 제주도는 광역단체가 100% 부담하고 있다. 또한 충북의 경우는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15% 중 13%는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12) 석재은·정경희·김용하·이윤경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 석재은(2007),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경로우대제도 방향정립: 노인교통수당 및 교통이용지원제도” 노인정책포럼 발표자료에 기초하여 있음.

〈표 2-7〉 교통수당 수급자 현황(2007)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지급대상노인	지급계획 대상자				지급액(연)
		계	기초수급노인	저소득노인	일반노인	
계	4,706,936	4,644,446	406,488	247,739	3,991,219	660,299
서울	788,025	778,085	47,915	7,552	722,618	121,566
부산	339,958	333,000	30,000	-	303,000	42,120
대구	213,915	212,374	17,749	5,513	190,112	28,085
인천	199,564	195,749	15,566	4,012	176,171	29,509
광주	113,589	113,589	9,897	6,169	97,523	14,517
대전	106,339	110,343	8,787	-	101,556	15,336
울산	64,366	64,873	4,804	1,463	58,606	8,878
경기	828,241	822,297	55,564	15,269	751,464	120,976
강원	203,000	195,133	19,204	14,403	161,526	27,247
충북	181,155	178,415	15,511	12,171	150,733	29,954
충남	280,000	273,983	25,216	31,437	217,330	42,121
전북	254,231	254,231	31,778	21,156	201,297	32,520
전남	321,188	331,637	50,546	58,296	222,795	42,867
경북	396,218	382,356	37,756	33,380	311,220	50,111
경남	356,087	337,321	30,103	33,970	273,248	41,091
제주	61,060	61,060	6,092	2,948	52,020	13,401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실행준비단(2007)

제3절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1. 영국의 노후소득보장¹³⁾

가.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2층 연금체제를 지닌 OECD국가의 공적연금체제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기초연금

13) 석재은·김수봉·이정우·지은정(2005), 『OECD 국가의 기초보장과 공적연금 체계 비교연구(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lat-rate basic pension schemes)¹⁴⁾과 소득비례연금(earning-related pension schemes)으로 구분된다. 기초연금은 고령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를 지닌다. 재원은 세금 혹은 각출을 기반으로 하며, 수급자격은 자산조사(means-test)등을 통해 연령이나 거주기간에 따라 좌우된다. 반면 소득비례연금체제는 주로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여는 고용기간 및 퇴직 전 소득에 비례하며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한다(Kalish and Aman, 1998).

영국 역시 2층 연금체제국가이며 특히, 기초연금은 NHS와 더불어 보편주의적 복지국 가정책의 양대 축으로서, 고령자의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주요 기제로 간주되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연령

수급연령은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로 현재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여성 역시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0년 4월 6일에는 65세로 남녀 모두 동일해진다¹⁵⁾(DWP b, 2004).

1층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수급현황을 살펴보면(2004년 3월 기준), 총 11,392천명으로 남성은 4,266.5천명(37.5%), 7,125.6천명으로(62.5%)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은 60세 이후부터 수급가능한 연령규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65세 이상자로 남성과 비교기준을 맞추면 여성은 57.2%, 남성은 42.8%가 된다. 또한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분포가 가장 많으며, 80세 이상 수급자들도 23.8%에 이른다.

14)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고령빈곤자들에게 자산조사급여를 지급하였음. 그러나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산조사는 완화되었고, 보편적 정액급여(flat benefit)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됨. 수급자격은 소득보다는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르며, 노르딕국가(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와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앵글로 색슨 국가들(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ILO, 1989; Myles and Quadagno, 1997; Gillion et al., 2000 재인용).

15) 1950년 4월 5일 이전 출생한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60세이지만 1955년 4월 6일 이후에 출생한 여성은 65세가 됨(DWP a, 2004).

〈표 2-8〉 영국의 공적연금의 성별·연령별 수급현황(2004년 3월 31일)

(단위: 천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1,392.1	(100.0)	4,266.5	(100.0)	7,125.6	(100.0)
60~64세	1,416.2	(12.4)	-		1,416.2	(19.9)
65~69세	2,777.2	(24.4)	1,336.9	(31.3)	1,440.3	(20.2)
70~79세	4,491.9	(39.4)	2,018.3	(47.3)	2,473.6	(34.7)
80~89세	2,261.8	(19.9)	810.7	(19.0)	1,451.1	(20.4)
90~94세	416.8	(3.7)	95.5	(2.3)	321.2	(4.5)
100세 이상	28.2	(0.2)	5.1	(0.1)	23.1	(0.3)

자료: State Pension's Statistics 2004, National Statistics b(2004)

2) 기여(Contribution)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NICs)로 납입하여야 하며, 소득상한선(£610)과 하한선이 있다. 소득하한선인 LEL(Lower Earnings Limit)은 주당 £79(월 £343.0)로 공적연금 수급권을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된다. 그러나 실제 기여금은 주당 소득 £91(Earnings Threshold, ET)부터 부과되며, 이때 피용인의 기여율은 11%, 고용주는 12.8%가 된다. 즉, 예전에는 NICs를 LEL이상부터 부과하였으나, 2000년 4월 6일부터 기여기준선(primary threshold)(£91, 2004년 기준)을 도입하여 피용인은 이 금액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기여금을 납입하면 된다. 따라서 LEL과 기여기준선사이의 소득자는 NI에 기여를 하지 않아도 기여에 기반한 수급자격을 축적하게 됨으로써,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2-9〉 NICs 소득별 기여율(2003. 4. 6일 개정)

소득	피용인 기여율	고용주 기여율
주당 £79(LEL)이하 월 £343.0이하 연 £4,108.0이하	-	-
주당 £79 ~ £91.0(ET)이하 월 £343.0 ~ £395.0이하 연 £4,108.0 ~ £4,745.0이하	0%	0%
주당 £91.0 ~ £610.0(UEL)이하 월 £395.01 ~ £2,644.0이하 연 £4,745.01 ~ £31,720이하	ET이상 소득의 11%	ET이상 소득의 12.8%
주당 £610.0 이상 월 £2,644.0 이상 연 £31,720.0 이상	ET~UEL까지는 11%+UEL이상 소득의 1%	ET이상 소득의 12.8%

자료: 영국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3) 수급자격인정기간(qualifying year)

완전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working life)의 90% 이상의 기간동안 기여금을 납입하여 자격인정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기간은 남성은 49년, 여성은 44년¹⁶⁾이며, 이 가운데 90% 즉, 남성은 44년, 여성은 39년의 기간동안 가입하여 기여금을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여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연금수급권을 축적하지 못하거나 부족해진다. 이에 영국에서는 근로하지 않을 경우 공적연금 크레딧(National Insurance credits), 가정책임보호(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 HRP), 자발적 기여(voluntary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의 3가지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이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DWP c, 2004).

크레딧의 경우 조건에 해당할 경우¹⁷⁾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크레딧이

16) 1950년 10월 5일 이전에 태어났을 경우. 그러나 출생시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 1954년 10월 6일 이후에 태어난 여성은 49년이 됨.

17) 크레딧 적립요건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득이 자격인정기간에 필요한 소득수준 이하이고 특정 상황일 경우에 해당됨. 여기서 특정상황이란 그해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보살핌제공자 수당(Carer's Allowance)을 받고 있을 경우,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이나, 법정모

적립되지만, 소득이 기여기준선(£91) 이상일 경우는 더 이상 크레딧이 적립되지 않고 기여금을 납입하여야 한다(DWP c; d, 2004). 한편, HRP는 질환자나 장애인을 간호하는 경우, 아동양육을 위해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저임금(NICs의 기준 소득인 주당 £79 - 2004년 기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8년 4월 6일에 도입되었다¹⁸⁾. 이와 같은 HRP를 통한 혜택은 완전기초연금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중 39년의 자격인정기간이 필요한데, HRP 적용자들은 HRP적용기간만큼 완전연금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축소된다. 즉, 19년동안 아동양육 등으로 HRP적용을 받았다면 20년 동안만 기여금을 납입하면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고, HRP 19년을 제외한 자격인정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는 감액된다. 그러나 HRP의 혜택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¹⁹⁾²⁰⁾

성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법정입양급여(Statutory Adoption Pay)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상태이거나 구직활동중인 경우, 인증된 훈련과정중인 자, 배심원으로 활동중인 자, 유죄판결로 복용중인 자, 60~64세인 남성으로서 NICs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16~18세로서 기여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됨(DWP b; c; d, 2004).

- 18)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16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동급여(Child Benefit)를 받거나,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지속적 보호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혹은 장애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받는 사람을 최소 주당 48시간(1994년 4월 6일 이후) 이상 돌볼 경우, ②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거나, 집에서 질환자 혹은 장애인을 간호하여 근로가 힘든 경우, ③ 위와 같은 상황이 복합적인 경우. 그러나 근로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혹은 보살핌제공자 수당(Carer's Allowance)등의 급여를 받는 등 크레딧 적립요건에 해당하거나, 일정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감액된 기여금을 납입하는 기혼여성과 홀로된 여성은 HRP 가입대상이 되지 않음(DWP b, 2004).
- 19) 사례 1: 1940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여성으로서 NI에 1956년 1월에 가입하여, 1975년 4월 5일까지 813의 정액기여금을 납입하였음. 그녀는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1974년 근로를 중단하여 1982년 4월까지 간호함. 그후 1985년 4월 6일 재취업하여 1999년 4월 5일까지 근로를 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간은 1955년 4월 6일부터 1999년 4월 5일까지 44년이 되며 이 가운데 완전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인정기간은 근로기간의 90%인 39년이 됨. 여기서 그녀가 간호했던 1978년 4월 6일부터 1982년 4월 5일까지 HRP를 받았기 때문에 35년으로 줄어듦. 한편, 자격인정기간은 1975년 4월 6일 이전의 기여기간 813/50=17년과 1985년 4월 6일부터 1999년 4월 5일까지의 14년으로 총 31년이 됨. 그러므로 이 사례의 기초연금은 31/35(자격인정기간/근로기간)가 되어 완전기초연금의 89%가 됨.
 사례 2: 1978년 4월 이후 15년 동안 아동급여(Child Benefit)를 받았고, 근로기간가운데 자격인정기간(qualifying year)이 24년인 여성 : 근로기간은 16세 이전 4월 6일부터 59세이던 4월 5일까지의 44년으로, 완전연금수급을 위해서는 39년이 요구되지만, HRP적용기간이 15년이 있기 때문에 이는 다시 24년으로 축소됨. 여기서 자격인정기간 역시 24년으로 이 사례의 기초연금율은 24/24로 100%가 됨(DWP b, 2004).
- 20) 현재 20년은 남성은 2010년 이후 22년으로, 여성은 2010년에서 2020년 4월 6일까지 단계적으로 22년으로 증가시킬 예정임. 예를 들어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65세가 되는 2020년 4월 6일 이후에 HRP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HRP 22년과 자격인정기간 22년이 충족되면 완전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DWP c, 2004).

4) 급여수준

영국의 기초연금은 기여연금과 비기여 기초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여에 따른 연금은 다시 자신의 기여에 의한 연금과 배우자의 기여에 의한 연금으로 구분되며²¹⁾, 비기여 연금은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Over 80 Pension(주당 £47.65)과 80세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age addition(주당 £0.25)이 있다. 자신의 기여에 의한 완전 연금은 주당 £79.60(단독)이며 배우자의 기여금에 의한 완전연금은 £47.65(따라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주당 £127.25가 됨), 첫째 자녀는 £9.55, 그 외 아동은 1인당 £11.35가 추가된다(DSD, 2004).

〈표 2-10〉 영국의 기초연금 급여수준

구분		금액	최저금액	비고
기여(contributory)	본인기여	£ 79.65 (주당 최대)	£ 19.9(주당)	자격인정기간에 따라 다름
	배우자 기여	£ 47.65(주당 최대)	£ 11.9(주당)	
비기여(non-contributory)	Over 80 Pension	£ 47.65		정액
	age addition	£ 0.25		정액

자료: DWP b, 자료 편집

영국의 기초연금은 자격인정기간에 따라 급여율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완전기초연금은 근로기간 중 90%기간동안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지급되며, 자격인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급여는 감액된다.

특히, 완전기초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의 1/4(남성 11년, 여성 10년)이상을 가입하여야 완전기초연금의 25%수준이 최저연금(minimum pension)으로 지급되며(주당 단독 : £19.9), 그 이하일 경우는 기초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납입하였던 기여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NICs 기여금이 퇴직연금(기초연금, 2층 연금, 그 외 다른 급여)뿐 아니라, 근로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모성급여(Maternity Benefit), 기여에 따른 구직자 수당(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유족급여(Bereavement Benefits)의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DWP c, 2004).

21) 남편의 기여금에 기반한 완전연금을 받는 홀로된 여성은 97%이며, 자신의 기여금에 기반한 완전연금을 받는 기혼여성은 39%임(Emmerson and Johnson, 2001).

나. Over 80 pension

Over 80 pension은 일정기간 영국에 거주한 80세 이상 고령자로서 퇴직연금, 다른 사회 보장급여, 비기여연금(Guaranteed minimum pension or Graduated pension제외)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없을 경우 지급된다. 거주기간은 60세 이후 10년 혹은 총 20년 거주자로서 주당 £47.65가 지급되며, 재원은 정부에서 100% 부담한다(DSD, 2004; www.dss.gov.uk). 그러나 영국의 National Statistics b(2004)에 따르면, over 80 Pension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연금수급자 가운데 0.2%(231백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55백명(23.8%), 여성은 176백명(76.2%)으로 over 80 pension은 여성수급자가 남성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은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기초소득보장

영국에서는 69세 이상인 자에게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도입한 최저소득 보장(MIG)을 2003년부터 연금크레딧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 MIG)

MIG는 영국의 기초소득보장으로서, 60세 이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었다. 급여수준은 노인단독의 경우 주당 £98.15, 부부는 £149.80(2002년 4월 기준)이었으며, 급여액은 개인상황과 소득 및 저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75세 이상이거나²²⁾, 장애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살 경우, 장애인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를 받는 보호제공자일 경우, 주거급여(Housing Benefit)로 커버되지 못하는 주거비 지출이 있을 경우, 혹은 아동급여(Child Benefit)를 받을 경우(배우자 포함) 급여액은 더 높아졌다.

또한 MIG는 저소득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근로소득 외에도 기초연금과

22) MIG의 연령에 따른 급여차이는 Pension Credit에서 6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단일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음(Hancock et. al., 2001).

SERPS(S2P)/기업연금/개인연금을 포함하며, 장애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급여(Council Tax Benefit)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저축은 없거나 £12,000²³⁾이하일 경우(care home 이나 nursing home에 거주할 경우는 £16,000) 지급된다. 즉, MIG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저소득자이며 저축이 없거나 £12,000이하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이어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따라서 저소득자 가운데서는 MIG 수급을 위해 저축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려고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저축의 덫(savings trap)”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초연금이 물가상승율에 연동된 것과는 달리 MIG는 소득상승율에 연동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연금과 MIG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 부담 역시 커짐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되었었다. 이에 2003년 10월부터 MIG는 연금크레딧으로 전환되었고, MIG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연금크레딧으로 이전되었다.

한편 2003년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가운데 60세 이상자가 약 45%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고령자들의 노후소득이 다른 계층에 비해 열악함을 볼 수 있다.

〈표 2-11〉 Income Support 수급현황(2003년~2004년)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수급자	60세 이상자	편부모	장애인	그 외
2003년 5월	3,982(100.0)	1,778(44.7)	847(21.3)	1,100(27.6)	257(6.4)
2003년 11월	2,201(100.0)	152(0.7)	821(37.3)	1,115(50.6)	251(11.4)
2004년 8월	2,170(100.0)	11(0.5)	804(37.1)	1,121(51.7)	234(10.8)

주: 1) 2003년 4월부터 도입된 세금공제(tax credit)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함.

2) 60세 이상 수급자는 2003년 10월 이후 Pension Credit로 이전되었음. 또한 고령자에게 지급되던 Premiums도 2003년 10월부터 Pension Credit로 이전되어, 2003년 8월에는 Premiums를 받는 연금수급자가 1,798명이었으나 2004년 8월에는 11명에 불과함.

자료: Pension Credit Statistics(2004), National Statistics a(2004).

23) 저축한도인 £12,000은 2003년 4월 폐지되고, 연금크레딧에서는 £6,000이상 저축에 대해서만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음.

2)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연금크레딧은 영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자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수급을 위해 공적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이다.

가) 급여조건

연금크레딧의 수급조건은 연령과 거주지, 그리고 소득 및 자산의 3가지로써, 급여지급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DWP a, 2004). 연령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²⁴⁾ 둘째,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셋째 연금크레딧의 한 유형인 보증크레딧(guarantee credit)은 소득과 자산으로 발생한 간주소득(저축 등의 자본합계가 £6,000이상일 경우 £500마다 £1의 소득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함-deemed income)의 합이 적정소득이하일 경우 그 부족액만큼 지급하며, 저축크레딧은 저축크레딧 기준점(savings credit starting point)이상일 경우 지급한다.

나) 연금크레딧의 유형

연금크레딧은 보증크레딧(60세 이상)과, 저축크레딧(savings credit-65세 이상)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운영됨에 따라 65세 이후에는 2가지 급여를 다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가운데 한가지 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다. 먼저 보증크레딧은 60세 이상자의 순소득(net income)과 적정소득(appropriate amount)을 비교하여 순소득이 적정소득미만일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되, 순소득이 적정소득과 같거나 더 많다면 보증크레딧은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소득범주에 속하는 것은 <표 2-10>과 같으며, 적정소득이라 함은 정부에서 수도세, 전기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규정한 금액으로 표준금액(standard amount)과 추가금액의 합계를 말한다²⁵⁾.

24) 연령규정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0년에는 65세가 될 예정이다.

25) 즉,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에 추가비용을 합한 금액이 적정금액이 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적정금액은 표준금액과 동일해지게 됨.

〈표 2-12〉 보증크레딧(guarantee credit) 산정시 소득범위

포함되는 소득	포함되지 않는 소득
① 연금(공적연금, 기업연금/개인연금) ②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산업재해급여 등 ③ 근로소득(임금, 보너스, 커미션 등을 포함하며, National Insurance에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 담배, 식료품과 같은 현금급여는 제외하되 바우처는 포함함) ④ 연금(annuity) ⑤ 신탁자금으로부터의 정기적인 배당 등	①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② 장애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③ 주거급여(Housing Benefit), ④ 지방세급여(Council Tax Benefit) ⑤ 자선단체나 친척으로부터의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자치단체에서 받는 금액 ⑥ 아동급여와 아동특별수당 등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a, 2004 편집

〈표 2-13〉 추가비용별 금액

구 분		금 액
중증장애	1인 가구	주당 £44.15
	2인 가구	주당 £88.30
간호비용 ¹⁾	Carer's Allowance ²⁾ 를 받는 경우 Carer's Allowance수급신청을 한 경우	주당 £25.55
주거비용 ³⁾		- 저당금에 대한 이자 - 필수적인 수리 혹은 개선을 위해 인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 지대료 등에 대한 비용 등
이전추가비용		

주: 1) 8주 동안 지급되며, 배우자 역시 해당될 경우 급여는 2배가 됨.

2) 예전에는 Invalid Care Allowance였음

3) 수도세, 수리비, 보험료 등은 추가비용이 아닌 표준금액에 해당됨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a, 2004.

소득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개인연금,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며, 이 소득의 합이 노인단독은 주당 £105.45,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는 £160.95이상이 되면(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보증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금 등을 합한 소득이 부족할수록 보증크레딧은 한도내(노인단독: 주당 £105.45)에서 증가한다.

한편, 저축크레딧은 65세 이상이며 적격소득(qualifying income)이 저축크레딧 기준점과 같거나 낮으면 받을 수 없고, 그 이상일 경우 지급된다. 저축크레딧 기준점은 노인단독은 £79.60,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127.25이며, 적격소득의 범주는 보증크레딧의 소득범주와 동일하지만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와 근로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모성수당(Maternity Allowance) 등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14〉 연금크레딧의 기준금액

구	분	금 액
standard amount	1인	£ 105.45
	2인(배우자포함)	£ 160.95
savings credit starting point	1인	£ 79.60
	2인(배우자포함)	£ 127.25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a, 2004 편집

구체적인 급여산식은 〈표 2-13〉과 같으며, Amount A의 최대 급여액은 1인은 주당 £15.51, 2인은 £20.22이다²⁶⁾(DWP a, 2004).

26) 사례: A남성은 65세, 부인은 54세. A남성의 공적연금은 £79.60, 직업연금은 주당 £45이며, 부인은 구직수당 £55.65를 받고 있음. 이들의 저축은 £10,219이며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주거비용으로 £27을 받음. 이 부부의 적정소득은 표준비용 £160.95에 주거비용 £27을 포함하여 £187.95이며, 실제 소득은 £189.25(deemed income £9포함)이므로 guarantee credit의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 한편 savings credit을 위해 필요한 적격소득은 구직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33.60 (£189.25-£55.65)으로 savings credit수급자격이 되며, 순소득 (£189.25)이 적정소득 (£160.95)보다 많아서 Amount B에 해당됨. 따라서 savings credit는 Amount A에서 Amount B를 뺀 금액으로 Amount A는 적격소득에서 savings credit starting point를 차감한 금액 £6.35 (£133.6-£127.25)의 60%인 £3.81, Amount B는 실제소득과 적정소득과의 차액인 £1.30 (£189.25-£187.95)의 40%, 즉 £0.52가 됨. 따라서 savings credit는 Amount A에서 Amount B를 차감한 £3.29가 됨. 그러므로 이 부부의 Pension credit는 £3.29임(DWP b, 2004).

〈표 2-15〉 저축크레딧(savings credit)의 급여액

구 분	내 용
Amount A	순소득이 적정소득보다 적거나 같다면 saving credit은 Amount A에 해당됨. 급여액은 적정소득과 savings credit starting point 차이의 60%로 최고금액은 노인단독의 경우 £15.51, 배우자가 있을 경우 £20.22. 이 최고금액은 표준금액(노인단독: £105.45, 부부: £160.95)과 savings credit starting point와 차이의 60%임.
Amount B	순소득이 적정소득보다 많을 경우 해당됨. 총소득과 적정소득과 차이의 40%이며, savings credit은 Amount A에서 Amount B를 뺀 금액이 됨.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a, 2004 편집

다) 연금크레딧 수급현황

2004년 8월 기준 National Statistics c(2004)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금크레딧 수급자는 총 2,602.3천명(100%)으로, 보증크레딧을 받는 수급자는 759.8천명(29.2%), 저축크레딧 수급자는 544.5천명(20.9%), 모두 받는 수급자는 1,298천명(49.9%)이었다.

〈표 2-16〉 연금크레딧 유형별 수급현황(2003년~2004년)

(단위 : 천명, %)

연도	합계	guarantee credit+savings credit	guarantee credit	savings credit
2003.11	2,066.1(100.0)	1,127.2(54.6)	718.5(34.8)	220.3(10.7)
2004. 8	2,602.3(100.0)	1,298.1(49.9)	759.8(29.2)	544.5(20.9)

자료: Pension Credit Statistics 2004, National Statistics c(2004).

한편, 수급자의 평균급여는 보증크레딧은 £71.59였고, 저축크레딧은 £9.87, 두가지 모두를 받는 수급자의 평균급여는 £37.71이었다(2004년 8월 기준). 또한 전체 평균급여는 2003년에는 £44.95였으나 2004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한 £41.78 수준이다.

〈표 2-17〉 연금크레딧 유형별 평균 급여현황(2003년~2004년)

(단위 : 주당)

연도	합계	guarantee credit +savings credit	guarantee credit	savings credit
2003.11	£44.95	£36.34	£69.32	£9.47
2004.8	£41.78	£37.71	£71.59	£9.87

자료: Pension Credit Statistics 2004, National Statistics c(2004).

라. 그 외 자산조사급여

영국은 상기의 주요 급여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기초소득보장을 받는 수급자에게 주거급여(Housing Benefit. HB²⁷⁾), 지방세급여(Council Tax Benefit. CTB)를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²⁸⁾.

먼저 주거급여는 임대료와 이자 등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고용여부 및 고용형태와 소득보조 혹은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이 £3,000~£16,000일 경우는 급여액이 차감되는 등 소득과 저축, 가족, 임대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DSD, 2004). 그 외에도 자산조사급여로서 저소득자에게 지방세를 지원하는 소득연계급여(earnings-related benefit)인 CTB가 있다. 그러나 HB는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가운데 50% 이상만 받고 있고(Emmerson and Johnson, 2001), CTB는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30%가량이 신청하지 않았다(DSS, 2000).

2. 캐나다²⁹⁾

캐나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1층의 기초연금(OAS: Old Age Security),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보충적 보증소득(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및 수당, 2층의 소득비례연금(Canada Pension Plan/Quebec Pension Plan)으로 구성되어 있다.

OAS는 캐나다 연금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보편적 정액연금 프로그램으로서, 65세 이상 거의 전체 노인에게 일반조세에 의해 정액급여를 지급한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문건에서는 OAS를 캐나다의 가장 큰 공적연금(public pension)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공적부조는 GIS, 수당(및 유족배우자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OAS의 급여

27) 그러나 대출이자, 서비스료, 연료비, meal은 지원되지 않음.

28) 사회적 부분(social sector)에서 평균 임대료(rent)는 주당 £40이며, CTB로 평균 주당 £8을 받음을 감안할 때, 실제 최저소득은 MIG와 임대료와 Council Tax를 합하여 노인단독은 주당 평균 £130(부부 £170)이 됨. 반면 근로세대인 남성의 평균소득이 주당 £400이며, 세금과 NICs납부 후에는 £300이 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연금수급자의 자산조사급여는 남성의 순(net)평균소득대비 노인단독은 42%, 부부는 56%가 됨. 따라서 실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조는 MIG보다 더 많은 셈임(Emmerson and Johnson, 2001).

29) 김성숙(2007), “기초노령연금 감액방식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수준이 평균소득의 15% 수준으로 낮아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충급여제도 운영하고 있다. GIS는 65세 이상의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 대해 소득을 보충해주는 일종의 노인들에 대한 사회부조 제도이다. 수당(및 유족배우자 수당)은 60-64세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제도이다.

소득비례연금제도는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에 의해 소득비례급여를 지급하는 CPP제도이다. 단 퀘벡주는 독자적인 소득비례연금제도로써 QPP를 운영한다. CPP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가. 기초연금(OAS)

1) 적용범위

OAS제도는 65세 이상으로 18세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모든 국민들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다. 1989년에 급여회수제도(clawback of OAS benefits)를 도입하여, 1996년 7월 이후 급여회수반납대상자에게 원천적으로 회수해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OAS는 준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급여회수제도는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고소득자들은 급여의 일부를 다음해 봄에 소득세 신고시 회수하는 제도이다. 당시 \$50,000이상 소득의 \$1당 15센트를 회수하며, 순소득 \$72,521을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세 정산 시에 OAS 급여 전부를 회수한다.

급여회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1989년에 OAS 수급자의 4%였고 2000년까지 5%로 증가하였다. 1989년 이후 급여회수를 위한 기준소득(\$50,000)은 부분적으로 물가인상에 따라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반납 실질 기준소득이 계속 하락하게 되어 점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급여회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996년 7월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급여지급시 회수분을 미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2) 급여수준

40년 거주시 완전연금(full pension)이 주어지며, 거주기간이 미달될 경우 연 1/40만큼씩 감액되는 부분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2006년 기준 평균월급여액은 \$467.21, 최고월급여액은 \$491.93으로 평균소득의 약 15% 수준이며, 순소득 \$63,511 이상 노인은 초과소득

\$1당 15센트의 급여상실, \$102,865 이상인 사람은 무급여(급여수준은 매월 1, 4, 7, 10월에 물가연동), 과세대상소득이다. 수급자 중 약 5%는 감액된 급여를 받고, 2%만이 무급여자이다.

재정은 연방정부 부담으로, 2003-2004 회계 연도에 \$20,697 million 지출(GDP 대비 약 1.7%, 2003년 GDP \$1230.5 billion) 수준을 보인다. 일부 주들(약 10개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기초연금 외에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표 2-18〉 기초연금(OAS) 및 보충적 보증소득(GIS) 급여(2007년 1-3월 기준)

연령	급여종류	수급자	월평균급여 (2006년 10월)	월최대 급여	최대 연간소득
65세 이상	OAS	모든 수급자	\$467.21	\$491.93	*
	GIS	단독	\$418.87	\$620.91	\$14,904**
		OAS 수급자 배우자	\$261.30	\$410.04	\$19,728
		비수급자 배우자	\$406.46	\$620.91	\$35,712
		수당수급자 배우자	\$337.29	\$410.04	\$35,712
60~64세	수당(Allowance)	모든 수급자	\$354.69	\$901.97	\$27,600
	유족배우자 수당	모든 수급자	\$559.05	\$999.81	\$20,064

주: * \$63,511부터 감액, \$102,865 이상부터 정지

** 최대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근로자평균임금의 38%정도이며 월최대급여는 그 절반인 평균임금의 19% 정도임. OAS 전액연금 수준이 15%이므로 OAS와 GIS를 합한 최대급여액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34% 정도임.

자료: <http://www.hrsdc.gc.ca>. 김성숙(2007), “기초노령연금 감액방식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재인용.

나. 보충적 보증소득(GIS)

수급자격은 2007년 1월 기준 연소득 \$14,904(노인단독 기준)미만인 경우 수급자격이 발생하며, OAS 수급자의 약 37%에게 지급한다. 수급기준인 연소득에는 기초연금(OAS), 보충적 보증소득(GIS), 수당 급여는 비포함,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 CPP 급여 및 사적연금급여 등은 포함된다.

급여수준은 2006년 기준 최대 월 \$620.91(노인단독)이며 기초연금(OAS) 수급자 배우자

최대급여는 노인단독 급여의 약 83%이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매 \$2당 \$1만큼 급여가 감소되어 비과세 대상소득이다. 재정은 전액 연방정부에 의해 부담되며 회계 연도 2003-2004년에 \$5,792 million 지출한다(GDP 대비 약 0.5%수준).

3. 호주³⁰⁾

호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공부조방식의 기초연금인 노령연금(Age Pension)과 강제가입인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이 있다. 노령연금은 거주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엄격한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방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며, 재원은 전액 국고이다. 2층인 퇴직연금은 1992년 강제조항이 생겼으며, 고용주가 피용자 임금의 일정 비율(9% 이상)을 적립하여 55세 이상(60세로 점진적 조정 예정) 퇴직한 자에게 주로 확정기여형 급여를 지급한다(근로자 98% 가입). 자영자는 임의가입이고, 근로자는 추가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 가능하다.

기초연금인 AP는 1908년에 공공부조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뿐 아니라 인종 등 훨씬 엄격한 제한요건이 있었으나, 차차 제한을 철폐해 왔다.

수급조건은 남자 65세 이상, 여자 63세 이상(2006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2013년 7월 1일까지 65세로 조정되는 중)인 자로 급여신청 당시 호주에 계속 10년간 거주해야 한다. 단, 5년 연속 거주했다면 생애 전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전액연금은 급여지급을 위한 기준소득하한과 기준자산하한을 모두 충족시킬 때 지급하며, 부분연금은 급여지급을 위한 소득하한과 소득상한 사이 그리고, 자산하한과 자산상한 사이 모두 해당시에 지급한다. 단 소득기준, 자산기준 각각에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더 낮게 산정되는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AP)의 수급자 규모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노인인구의 약 30%였으나, 1960년대 중반에는 노인인구의 약 50%, 1980년대 중반에는 노인인구의 약 85%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1996년 수급요건 강화로 노인인구의 약 6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1997년 이후 수급요건 완화로 다시 노인인구의 약 80% 수준이 수급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노령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인의 소득수준을 높임으로써 공적연금인 AP의 역할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0) 김성숙(2007)에 기초함.

〈표 2-19〉 호주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현황 및 2050년 추계

	2001년	인구 중 %	2050년	인구 중 %
Age pension수급 연령 이상 인구	2.6백만명	12.3% (전체 인구대비)	6.6백만명	25% (전체 인구대비)
보훈연금 ¹⁾ 수급자	341천명	13% (AP연령인구대비)	4.9백만명	75% (AP연령인구대비)
AP 수급자	1.79백만명	69% (AP연령인구대비)		
만액 AP수급자	1.14백만명	67% (AP 수급자대비)	1.7백만명	33.3% (AP 수급자대비)
부분액 AP수급자	650천명	33% (AP 수급자대비)	3.2백만명	66.6% (AP 수급자대비)

주: 1) Department of Veteran Affairs(DVA) pensioners를 의미함. 호주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이외에 별도의 보훈연금제도가 있으며 수급자가 많았으나 줄어가고 있음.

자료: Labour Force, June 2002, ABS Cat. No. 6203.0, (Occasional Paper No. 11 Inquiries into retirement and superannuation,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2003, p 7).
김성숙(2007), “기초노령연금 감액방식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재인용.

노령연금(AP)의 급여수준은 2주당 단독 A\$512.10, 부부 각각 C\$427.70 이다. 2000년 7월 이후 연금부가급여가 포함되고 있으며, 위의 금액에는 부가급여 단독 \$18.20, 부부 \$15.20이 합산된 금액이다. 이 액수는 2006. 9. 20~12.31까지 적용되는 급여액이며 3월과 9월 물가연동하여 급여액이 변경된다. 연금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보장급여는 정액이고, 2주 단위로 지급된다. 부부라도 질병, 입원, 투옥 등으로 별거할 경우 부부 각각 단독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때 소득과 자산은 부부합산기준을 적용한다. 기본율은 노인단독 기준으로 남성평균임금의 25%로 법에 정해져 있다. 부부의 경우 40%(노인단독 급여의 160%임)이다.

노령연금(AP) 급여액 결정방식을 보면, 연금액은 소득과 자산 각각의 삭감액을 산정한 후 낮은 급여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기본연금액에서 소득하한을 초과하는 A\$1마다 급여 ¢40씩 삭감 (부부 각각 ¢20), 자산하한액을 초과하는 A\$1,000마다 급여 A\$3씩 삭감한 후 둘 중 더 낮은 연금액을 지급한다.

〈표 2-20〉 호주 AP 소득조사: 2주당 소득기준(2006. 12)

가구상태	전액연금 수급자격	부분연금 수급자격
노인단독	\$128 이하	\$1,422.75 미만
노인단독 + 1자녀	\$152.60 이하	\$1,447.35 미만
부부(동거)	\$228 이하	\$2,381.00 미만
부부(질병으로 인한 별거)	\$228 이하	\$2,817.50 미만
추가되는 자녀	1자녀당 \$24.60 추가	

자료: 김성숙(2007), “기초노령연금 감액방식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재인용.

〈표 2-21〉 호주 AP 자산조사 기준(2006. 12)

	가구상태	전액연금	부분연금
자가 소유자	노인단독	\$161,500 이하	\$334,250 미만
	부부(동거)	\$229,000 이하	\$516,500 미만
	질병으로 별거	\$229,000 이하	\$574,500 미만
	1명만 수급요건 충족	\$229,000 이하	\$516,500 미만
주택 비소유자	노인단독	\$278,500 이하	\$451,250 미만
	부부(동거)	\$346,000 이하	\$633,500 미만
	질병으로 별거	\$346,000 이하	\$691,500 미만
	1명만 수급요건 충족	\$346,000 이하	\$633,500 미만

자료: Retirement Payment Rates(2006. 9.20-12.31), Centrelink, Australia; 김성숙(2007), “기초노령연금 감액방식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재인용.

노령연금(AP)의 자산조사(means test) 방식을 살펴보면 소득조사(Income test) 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종류가 거의 없고 소득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근로소득(총소득, 부가급여도 포함), 임대나 자영소득(순소득), 사적회사 주식배당금과 가족 분배금, 자본금에 접근할 수 없고 그 자본금으로부터 평생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조사 대상에서는 배제됨) 등이다. 5년 이상 자본금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조사에서는 배제하고 소득조사에서 소득으로 고려한다. 5년 이하 자본금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금융투자로 간주하고 간주 소득을 산정하여 소득조사에서 소득으로 고려한다. 2002년 7월 현재 노인단독 연금 수급자의 경우 \$34,400, 부부는 \$57,400까지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5%의 수익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산정되고, 그 이상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4.0%의 수익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Superannuation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일시금의 경우 주식 구입이나 기타 투자에 사용되면 자산조사에 반영되지만 여행이나 주택구입 등에 사용되면 반영되지 않는다.

자산조사 대상은 은행, 빌딩소사이터, 채권, 주식 등, 자산조사 제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소득, 가구의 소유물, 개인의 사적 소유물, 자동차, 보트, 카라반(가정용이 아닌 경우), 부동산(별장 등), 양로주택 보증금, 사업이나 농장의 환산가치, 소득흐름이 없는 퇴직금의 투자 등이다. 단, 주 거주 주택은 자산조사에서 배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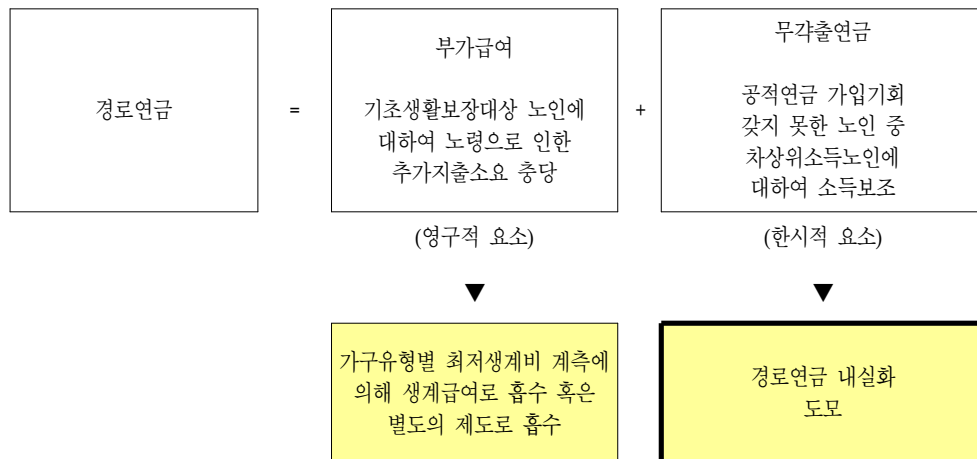
증여나 재산에 대한 불성실 관리를 통하여 노령연금(AP)을 고의로 더 받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당 \$10,000을 초과하거나 5년간 \$30,000을 초과하여 증여를 할 경우 소득과 자산조사 시 소득이나 자산으로 고려된다(자산일 경우 5년간 자산으로 간주).

급여의 관리운영은 1997년 이전에는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가 하부조직(20개소의 광역사무소, 252개소의 지방사무소)을 이용 기초연금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1997년에 센터링크(centrelink, 특수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링크는 421개 지사, 26개 콜센터, 직원 25,000명으로 운영된다.

제4절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로연금은 부가급여적 성격과 무각출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부가급여적인 경로연금 기능은 국민연금 성숙과 연계되지 않는 요소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노인에 대하여 추가지출에 대한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급여적 성격의 부문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층결과에 따라 생계급여로 흡수하거나 혹은 별도의 제도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로연금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연금을 대체하는 한시적인 무각출연금적 성격의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 2-4] 현행 경로연금 개편방안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경로연금이 공적연금제도 미숙기간을 보완해주는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의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공적연금성숙기까지의 보완적 노령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보다 충실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이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이후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도 아닌 차상위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 탈락자의 안전망으로서 영구적인 노령소득보장제도로 재편되는 방향이다.

즉, 첫째는 국민연금의 ‘미성숙기’에 발생하는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고, 둘째는 국민연금 성숙과 관계없이 ‘미성숙기’ 혹은 ‘성숙이후’에도 여타 공적 소득보장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소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다. 즉, 국민연금 성숙과 관계없이, 또한 국민연금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노인 소속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빈곤한(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정액의 노령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연금보험료 각출 회피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연금제도와의 충돌이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도 상당 규모의 노후소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납부 예외자 및 보험료체납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공적연금수급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갖고 있더라도 연금액의 규모가 적어서 빈곤을 경험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성숙과 관계없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게 될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개편방안의 모색이 적절할 것이다. 즉, 이유를 불문하고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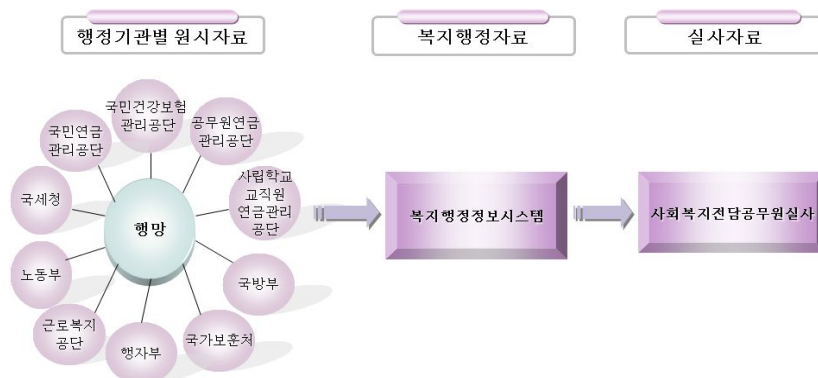
제3장 노인의 소득재산 실태조사자료 기초분석

본장에서는 노인 소득재산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 개인 및 가구특성별로 소득재산 보유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료출처 및 조사방법에 따른 자료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비교하고, 2절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노인의 제 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고, 3절에서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가구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각각 분석한다.

제1절 자료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등은 대부분 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달리, 2006년 8월 실시된 노인 소득실태조사는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사에 의해 보완되어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은 조사의 흐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3-1] 조사 흐름에 따른 자료유형



먼저, 자료구축의 기초가 되는 원시자료는 10개 행정기관(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득재산 항목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시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하고 있는 전산망에 반영되는데,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복지행정자료는 이것을 의미한다. 복지행정자료(복지 DB)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의 기본양식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대상에 대해 직접 실사하기 이전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사자료는 복지행정자료를 기준으로 전화 또는 방문면접 등에 의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사한 후 수정 보완한 자료이다. 따라서, 실사자료는 복지행정자료에 의해 포착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것이므로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료출처 및 조사방법에 따른 세 가지 자료유형별로 노인의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소득재산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10개 행정기관별 원시자료의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는 별도로 제시하고,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의 소득재산 항목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조사된 복지행정자료와 실사자료는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므로 함께 제시할 것이다. 또한, 두 자료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사 전후에 각각 구축된 것이므로 실증 분석을 통해 소득재산 항목별로 두 자료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각 자료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분석단위는 개인이며, 전체 노인으로부터 추출된 17,000명의 표본 중 자료가 구축된 '원표본 노인(15,411명)'과 원표본 노인의 배우자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원(22,644명)'으로 구분하여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비율 및 평균(보유자/전체)을 제시하였다.

〈표 3-1〉 데이터 종류별 변수목록

원시자료	행정자료 & 실사자료	
근로소득(국세청)	근로소득_상시	선박
사업소득(국세청)	근로소득_임시	항공기
임대소득(국세청)	근로소득_일일	자동차
이자소득(국세청)	근로소득_자활	자동차 등_합계
배당소득(국세청)	근로소득_합계	임차보증금_전월세
소득합계(국세청)	사업소득_농업	임차보증금_상가
표준소득월액(국민연금)	사업소득_임업	임차보증금_기타
표준보수월액(건강보험)	사업소득_어업	임차보증금_합계
국민연금	사업소득_기타자영업	금융재산_은행예적금
공무원연금	사업소득_합계	금융재산_저축성보험
사학연금	재산소득_임대	금융재산_주식
군인연금	재산소득_이자	금융재산_현금수표어음
보훈연금	재산소득_합계	금융재산_합계
산재보험_연금	공적이전	동산_가축
실업급여	사적이전	동산_종묘임목
토지_밭(행자부)	이전소득_합계	동산_기계기구류
토지_논(행자부)	개인총소득	동산_기타
토지_임야(행자부)	건축물_주택	동산_합계
지적자료합(행자부)	건축물_건물	개인총재산
자동차가액(건교부)	건축물_기타	일반부채
	건축물_합계	의료비부채
<총 20개 항목>	토지_논	교육비부채
	토지_밭	주거부채
	토지_임야	개인총부채
	토지_기타	
	토지_합계	<총 50개 항목>

1.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10개 행정기관으로 제공된 원시자료에서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은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은 국세청 소득항목 이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표준소득월액과 표준보수월액 등 8개 항목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실업급여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은 행정자치부의 토지 관련 자료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가액 등 5개 항목이다.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복지행

정자료나 실사자료와 비교해보면,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경우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 구분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시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소득', '연금 등 공적이전', '재산'으로 구분하여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5세 미만 배우자가 포함된 전체 가구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보유비율이 11.7%로 원표본 노인(12.3%)보다 0.6%p 낮게 나타난 점과 이와는 반대로 국세청 사업소득과 소득합계의 보유비율이 원표본 노인보다 다소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원표본 노인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청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의 보유비율은 4.2%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구원과 원표본 노인의 보유자 평균은 각각 약 164만원과 172만원이었다. 대부분 자영업으로 구성된 국세청 사업소득의 보유비율 역시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보유자 평균은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임대소득의 보유비율은 약 2.8%로 나타났으며, 보유자 평균은 약 220만원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다소 높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은 모두 0.1%로 매우 낮았지만 보유자 평균은 각각 약 1,000만원과 600만원 정도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세청 소득유형별 합산금액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원표본 노인의 약 10%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유자 평균소득은 206~211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자료의 보유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의 경우에는 국세청 근로소득 보유비율보다 약 1%p 낮은 3.3%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자 평균소득은 국세청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인의 근로소득 자료가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급여의 보유비율은 11.7~12.3%로 보유자의 월평균 연금급여액은 약 15만원이었다. 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보훈연금, 산재보험의 연금의 경우 보유비율은 1% 내외로 매우 낮았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보훈연금 약 90만원, 공무원연금 약 170만원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노인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보유비율도 소수에 불과했고 보유자 평균급여수준도 22~39만원으로 낮았다.

재산항목 가운데 행정자치부 지적자료에 기초한 토지 보유비율은 약 26%로 앞서 살펴보았던 소득유형별 보유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노인들이 자산이 토지나 건물

등 재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유자 평균 토지가액은 약 1억4천만원에 이르렀으며, 전체 평균도 약 3,600만원이었다. 토지 중에서는 논과 밭의 보유비율이 약 11%로 가장 높았으며, 임야의 경우 약 5.9%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의 평균가액은 논이 6,500~6,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밭과 임야가 각각 4,000만원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가액 자료를 살펴보면 자동차 보유비율은 약 9.5%로 나타났으며, 보유자의 평균가액은 약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2〉 원시자료 기준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항목	구분	전체 (N=22,644)	원표본 (N=15,411)	항목	구분	전체 (N=22,644)	원표본 (N=15,411)
근로소득 (국세청)	보유비율(%)	4.2	4.2	사업소득 (국세청)	보유비율(%)	4.4	4.1
	평균(보유자)	1,643,511	1,716,999		평균(보유자)	1,630,409	1,719,729
	평균(전체)	69,317	71,305		평균(전체)	71,282	70,749
임대소득 (국세청)	보유비율(%)	2.8	2.7	이자소득 (국세청)	보유비율(%)	0.1	0.1
	평균(보유자)	2,213,717	2,136,132		평균(보유자)	6,023,748	5,793,056
	평균(전체)	61,297	57,801		평균(전체)	5,320	4,511
배당소득 (국세청)	보유비율(%)	0.1	0.1	소득합계 (국세청)	보유비율(%)	10.3	9.9
	평균(보유자)	9,344,879	10,536,469		평균(보유자)	2,058,895	2,109,434
	평균(전체)	5,365	5,470		평균(전체)	212,582	209,835
표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유비율(%)	0.2	0.0	표준보수월액 (건강보험)	보유비율(%)	3.3	3.4
	평균(보유자)	980,342	-		평균(보유자)	1,750,278	1,687,505
	평균(전체)	1,992	-		평균(전체)	58,358	574,876
국민연금	보유비율(%)	11.7	12.3	공무원연금	보유비율(%)	1.4	1.5
	평균(보유자)	151,657	153,592		평균(보유자)	1,771,416	1,716,184
	평균(전체)	17,815	18,846		평균(전체)	24,955	24,945
사학연금	보유비율(%)	0.2	0.2	군인연금	보유비율(%)	0.5	0.5
	평균(보유자)	2,388,552	2,302,550		평균(보유자)	1,596,548	1,574,070
	평균(전체)	5,591	4,931		평균(전체)	8,390	8,478
보훈연금	보유비율(%)	1.4	1.6	산재보험_연금	보유비율(%)	0.1	0.1
	평균(보유자)	889,603	904,729		평균(보유자)	1,630,506	1,650,502
	평균(전체)	12,690	14,148		평균(전체)	1,080	964
실업급여	보유비율(%)	0.1	0.1	토지_밭 (행자부)	보유비율(%)	11.0	10.8
	평균(보유자)	393,348	223,200		평균(보유자)	41,687,456	41,459,513
	평균(전체)	139	14		평균(전체)	4,571,187	4,487,345
토지_논 (행자부)	보유비율(%)	11.3	11.1	토지_임야 (행자부)	보유비율(%)	5.9	5.8
	평균(보유자)	64,963,819	67,982,453		평균(보유자)	45,579,476	39,765,443
	평균(전체)	7,312,876	7,525,668		평균(전체)	2,689,197	2,301,653
지적자료합 (행자부)	보유비율(%)	26.0	26.1	자동차가액 (건교부)	보유비율(%)	9.4	9.5
	평균(보유자)	139,909,440	136,456,846		평균(보유자)	12,917,201	13,062,549
	평균(전체)	36,410,808	35,550,856		평균(전체)	1,208,777	1,244,294

2.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복지행정자료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의 기본양식에 포함된 소득재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사자료 역시 동일한 항목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사에 의해 복지행정자료가 수정 보완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행정자료와 실사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소득재산 항목은 50개이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부 항목과 합계, 개인총소득을 포함하여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시자료와 달리 이 자료의 공적이전소득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있다. 재산의 경우,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데, 크게 건축물,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동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부 항목과 합계, 개인총재산을 포함하여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채의 경우, 원시자료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항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해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일반부채, 의료비부채, 교육비부채, 주거비부채 등 네 가지 부채 유형으로 구분되며 개인총부채를 포함하여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복지행정자료와 실사자료의 소득재산 항목들을 '소득', '재산', '부채'로 구분하여 보유비율 및 평균 등의 현황을 '원표본 노인(15,411명)'과 원표본 노인의 배우자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원(22,644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임시, 일용, 자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시 근로소득의 보유비율은 약 4.2~4.5%였으며 전체 가구원과 원표본 노인 모두 실사 후 보유비율이 약 0.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시근로자의 소득자료가 대개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되는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임시 및 일용 근로소득의 보유비율은 실사 후 약 2배 정도로 높아졌으며, 보유자의 평균소득은 임시직의 경우 감소하였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사 후 높아졌다. 이것은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세청의 소득파악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세청에 의해 완전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총 근로소득의 경우 실사자료를 통해 근로소득 보유비율은 5.3%에서 6.1%로 높아졌으며, 이것은 앞서 살펴본 국세청 근로소득 보유비율 4.2%에 비해서 약 2%p 높은 것이다.

한편, 보유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다소 낮아졌는데 이것은 실사자료를 통해 일용직과 같이 소득이 낮은 사례들이 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부문 사업소득의 경우 실사자료의 보유비율은 복지행정자료에 비해 3배 정도 높아졌으며, 평균소득도 증가했다. 기타 자영업의 경우 보유비율은 약 4.5%로 국세청 사업소득이 주로 자영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사한 수준이며, 실사에 의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평균은 다소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의 보유비율은 실사에 의해 9.4%까지 약 3.3%p 높아졌다.

〈표 3-3〉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근로소득/사업소득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항목	구분	전체(N=22,644)		원료본(N=15,411)	
		행정자료	실사자료	행정자료	실사자료
근로소득_상시	보유비율(%)	4.4	4.2	4.5	4.3
	평균(보유자)	1,571,336	1,572,119	1,508,401	1,547,212
	평균(전체)	69,115	66,720	67,340	66,061
근로소득_임시	보유비율(%)	0.2	0.5	0.1	0.5
	평균(보유자)	628,683	506,012	534,327	529,991
	평균(전체)	944	2,413	659	2,476
근로소득_일일	보유비율(%)	0.7	1.3	0.7	1.3
	평균(보유자)	235,897	317,691	197,907	287,490
	평균(전체)	1,615	4,265	1,387	3,843
근로소득_자활	보유비율(%)	0.1	0.1	0.1	0.1
	평균(보유자)	239,475	256,905	229,867	239,000
	평균(전체)	212	238	224	248
근로소득_합계	보유비율(%)	5.3	6.1	5.3	6.1
	평균(보유자)	1,367,882	1,206,533	1,301,886	1,184,415
	평균(전체)	71,886	73,637	69,610	72,628
사업소득_농업	보유비율(%)	1.6	4.8	1.7	4.8
	평균(보유자)	363,232	562,425	340,014	443,089
	평균(전체)	5,903	26,924	5,626	21,391
사업소득_임업	보유비율(%)	0.0	0.0	0.0	0.0
	평균(보유자)	-	-	-	-
	평균(전체)	-	-	-	-
사업소득_어업	보유비율(%)	0.1	0.1	0.1	0.1
	평균(보유자)	836,600	441,367	1,020,750	550,383
	평균(전체)	185	292	265	357
사업소득_기타	보유비율(%)	4.5	4.7	4.4	4.6
	평균(보유자)	1,111,390	1,016,319	1,140,472	1,023,242
	평균(전체)	50,504	47,979	49,805	47,009
사업소득_합계	보유비율(%)	6.1	9.4	6.0	9.3
	평균(보유자)	921,260	802,042	928,922	739,440
	평균(전체)	56,592	75,196	55,696	68,757

다음으로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임대소득의 경우 실사 후 보유비율은 약 0.8%p 증가했으나 보유자 평균 임대소득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약 0.2%p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보유자 평균은 역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총 재산소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은 약 45~49%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사에 의해 1.3~1.8%p 높아졌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실사자료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복지행정자료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져 4.3~5.2%로 나타났으며 보유자 평균 사적이전소득도 약 3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사자료 기준 개인총소득의 보유비율은 복지행정자료보다 5~6%p 높은 56.6%와 59.1%로 나타났으며, 보유자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원 약 59만원, 원표본 노인 약 57만원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표 3-4〉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항목	구분	전체(N=22,644)		원표본(N=15,411)	
		행정자료	실사자료	행정자료	실사자료
재산소득_임대	보유비율(%)	27	35	26	34
	평균(보유자)	2,016,208	1,732,535	2,086,417	1,766,734
	평균(전체)	55,026	60,062	55,102	59,843
재산소득_이자	보유비율(%)	1.3	1.5	1.7	1.9
	평균(보유자)	795,162	711,560	567,293	518,351
	평균(전체)	10,640	10,464	9,571	9,653
재산소득_합계	보유비율(%)	4.0	4.9	4.3	5.2
	평균(보유자)	1,630,428	1,442,629	1,507,819	1,337,081
	평균(전체)	65,666	70,526	64,673	69,496
공적이전	보유비율(%)	45.1	46.4	47.5	49.3
	평균(보유자)	242,130	220,606	236,657	214,700
	평균(전체)	109,206	102,451	112,378	105,852
사적이전	보유비율(%)	1.2	4.3	1.5	5.2
	평균(보유자)	191,342	310,146	170,736	300,352
	평균(전체)	2,298	13,272	2,581	15,708
이전소득_합계	보유비율(%)	45.4	48.3	47.8	51.4
	평균(보유자)	245,567	239,724	240,255	236,478
	평균(전체)	111,505	115,723	114,960	121,561
개인총소득	보유비율(%)	51.7	56.6	53.7	59.1
	평균(보유자)	593,733	595,505	569,717	565,820
	평균(전체)	306,725	336,885	306,171	334,366

다음으로 재산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전체 가구원과 원표본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실사에 의한 보유비율 증가가 약 1%p 내외에 그쳤으며 평균 재산가액은 다소 높아졌다. 반면에 건축물은 복지행정자료와 실사자료가 크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 건물, 기타건축물 등 모든 항목에서 실사에 의해 보유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유자 평균과 전체 평균 역시 크게 높아졌다. 총 건축물가액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은 실사에 의해 약 15%로 3배 정도 증가했으며, 보유자 평균가액은 복지행정자료 대비 약 50% 상승하여 약 1억 2천만원에 이르렀고 전체 평균가액 역시 4배 가까이 증가하여 1,700만원대로 나타났다.

〈표 3-5〉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건축물/토지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항목	구분	전체(N=22,644)		원표본(N=15,411)	
		행정자료	실사자료	행정자료	실사자료
건축물_주택	보유비율(%)	48	131	53	141
	평균(보유자)	84,896,498	116,294,954	80,496,468	108,277,711
	평균(전체)	4,041,619	15,263,584	4,304,009	15,267,501
건축물_건물	보유비율(%)	0.5	1.4	0.5	1.5
	평균(보유자)	68,368,977	114,632,863	64,322,176	102,292,890
	평균(전체)	335,142	1,559,218	346,424	1,500,110
건축물_기타	보유비율(%)	0.2	0.8	0.3	0.8
	평균(보유자)	42,463,886	92,041,240	33,769,701	84,548,901
	평균(전체)	105,016	691,000	92,033	685,784
건축물_합계	보유비율(%)	5.1	14.5	5.7	15.6
	평균(보유자)	87,638,479	120,909,310	82,770,280	112,166,085
	평균(전체)	4,481,777	17,513,802	4,742,467	17,453,395
토지_논	보유비율(%)	12.3	13.0	12.2	12.9
	평균(보유자)	56,351,476	59,418,778	57,987,739	61,423,081
	평균(전체)	6,928,215	7,712,056	7,058,919	7,895,602
토지_밭	보유비율(%)	11.9	12.6	11.8	12.6
	평균(보유자)	35,317,414	38,030,937	33,008,956	36,130,011
	평균(전체)	4,215,817	4,805,092	3,908,983	4,557,572
토지_임야	보유비율(%)	6.5	7.2	6.5	7.2
	평균(보유자)	35,957,520	38,137,247	34,410,718	34,667,260
	평균(전체)	2,342,225	2,763,788	2,221,703	2,487,962
토지_기타	보유비율(%)	19.3	19.5	19.3	19.6
	평균(보유자)	89,808,412	95,752,878	87,338,118	93,050,895
	평균(전체)	17,359,628	18,690,502	16,882,763	18,276,884
토지_합계	보유비율(%)	27.9	29.2	28.0	29.4
	평균(보유자)	110,605,580	116,411,810	107,403,305	112,832,910
	평균(전체)	30,845,886	33,971,438	30,072,368	33,218,020

한편, 자동차를 살펴보면, 복지행정자료의 경우 보유비율은 약 9.1~9.4%로 앞서 제시한 원시자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사자료의 경우에는 이에 비해 약 1%p 증가한 10.1~10.4%였으나, 보유자의 평균 자동차가액은 약 50만원 정도 감소하여 약 1,1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산항목 중에서 행정자료에 의해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유비율은 전월세를 중심으로 실사에 의해 약 2배 정도 높아져 원표본 노인의 5.5%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의 평균 임차보증금 합계 역시 실사에 의해 2배 정도 증가하여 복지행정자료의 경우 약 1,000만원에서 실사자료에서는 약 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6〉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자동차/임차보증금 항목별 보유상태

(단위: %, 원)

항목	구분	전체(N=22,644)		원표본(N=15,411)	
		행정자료	실사자료	행정자료	실사자료
선박	보유비율(%)	0.1	0.1	0.0	0.1
	평균(보유자)	2,500,005	4,750,003	-	7,000,000
	평균(전체)	221	839	-	908
항공기	보유비율(%)	0.0	0.0	0.0	0.0
	평균(보유자)	-	-	-	-
	평균(전체)	-	-	-	-
자동차	보유비율(%)	9.1	10.1	9.4	10.4
	평균(보유자)	12,307,878	11,808,021	12,380,148	11,808,152
	평균(전체)	1,125,668	1,195,716	1,157,601	1,227,478
자동차 등_합계	보유비율(%)	9.2	10.1	9.4	10.4
	평균(보유자)	12,304,351	11,806,010	12,371,563	11,802,156
	평균(전체)	1,125,888	1,196,555	1,157,601	1,228,386
임차보증금_전월세	보유비율(%)	2.3	4.2	2.9	5.3
	평균(보유자)	11,230,201	20,639,275	10,784,825	19,756,586
	평균(전체)	256,900	864,071	316,316	1,053,787
임차보증금_상가	보유비율(%)	0.1	0.1	0.1	0.1
	평균(보유자)	14,125,000	19,450,000	8,750,000	16,666,667
	평균(전체)	4,990	17,179	2,271	9,733
임차보증금_기타	보유비율(%)	0.1	0.1	0.1	0.2
	평균(보유자)	4,025,386	5,939,755	4,226,261	6,158,222
	평균(전체)	4,444	7,869	6,307	10,789
임차보증금_합계	보유비율(%)	2.4	4.4	3.1	5.5
	평균(보유자)	11,065,832	20,357,154	10,540,937	19,454,978
	평균(전체)	266,335	889,120	324,894	1,074,310

〈표 3-7〉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금융재산/동산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항목	구분	전체(N=22,644)		원표본(N=15,411)	
		행정자료	실사자료	행정자료	실사자료
금융재산_은행예적금	보유비율(%)	4.9	5.2	5.4	5.9
	평균(보유자)	50,295,990	43,952,203	46,008,283	40,278,245
	평균(전체)	2,447,720	2,282,626	2,501,781	2,380,993
금융재산_저축성보험	보유비율(%)	0.1	0.1	0.2	0.2
	평균(보유자)	8,427,524	7,578,582	7,472,800	6,720,082
	평균(전체)	10,793	11,045	11,638	11,774
금융재산_주식	보유비율(%)	0.1	0.1	0.1	0.1
	평균(보유자)	5,000,000	17,500,000	5,000,000	17,500,000
	평균(전체)	221	1,546	324	2,271
금융재산_현금수표어음	보유비율(%)	0.1	0.1	0.1	0.1
	평균(보유자)	7,729,112	14,130,217	8,814,141	10,060,237
	평균(전체)	5,120	13,104	6,863	9,792
금융재산_합계	보유비율(%)	5.0	5.4	5.6	6.1
	평균(보유자)	49,285,791	42,949,563	45,011,655	39,300,983
	평균(전체)	2,463,854	2,308,321	2,520,606	2,404,829
동산_가옥	보유비율(%)	0.1	0.1	0.1	0.1
	평균(보유자)	4,128,571	23,572,281	4,587,500	15,642,105
	평균(전체)	2,553	33,312	2,381	19,285
동산_종묘입목	보유비율(%)	0.0	0.0	0.0	0.0
	평균(보유자)	-	-	-	-
	평균(전체)	-	-	-	-
동산_기계기구류	보유비율(%)	0.0	0.1	0.0	0.1
	평균(보유자)	-	1,000,000	-	1,000,000
	평균(전체)	-	44	-	65
동산_기타	보유비율(%)	0.1	0.1	0.1	0.1
	평균(보유자)	16,508,619	45,901,084	12,530,611	47,505,698
	평균(전체)	15,310	48,650	14,636	64,734
동산_합계	보유비율(%)	0.1	0.2	0.2	0.3
	평균(보유자)	12,257,000	33,762,528	10,927,125	33,226,145
	평균(전체)	17,863	82,006	17,017	84,084
개인총재산	보유비율(%)	38.1	46.2	39.5	48.5
	평균(보유자)	102,955,357	121,238,649	98,241,213	114,453,759
	평균(전체)	39,201,603	55,961,242	38,834,953	55,463,025

다음으로, 대부분 은행 예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재산의 보유비율은 실사에 의해 1%p 미만으로 약간 높아진 반면, 보유자 평균 금융재산은 소액 은행예적금이 실사에 의해 일부 파악되면서 오히려 낮아졌다. 동산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유형에 비해 보유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실사에 의해 보유비율에 있어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보유자 평균가액은 약 3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한 재산유형별 총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복지행정자료에 비해 실사자료에서의 보유비율이 약 8~9%p 높아져 원표본 노인의 48.5%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유자 평균 총재산은 복지행정자료 기준으로 약 1억원, 실사자료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원 내외이며, 전체 평균 역시 실사에 의해 3,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높아졌다.

〈표 3-8〉 복지행정자료 및 실사자료 부채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항목	구분	전체(N=22,644)		원표본(N=15,411)	
		행정자료	실사자료	행정자료	실사자료
일반부채	보유비율(%)	0.3	0.6	0.3	0.7
	평균(보유자)	32,372,654	52,651,526	37,488,237	49,860,347
	평균(전체)	87,208	339,477	102,168	342,950
의료비부채	보유비율(%)	0.1	0.1	0.1	0.1
	평균(보유자)	30,225,418	17,112,709	10,000,000	6,500,000
	평균(전체)	2,670	3,023	649	844
교육비부채	보유비율(%)	0.0	0.0	0.0	0.0
	평균(보유자)	-	-	-	-
	평균(전체)	-	-	-	-
주거부채	보유비율(%)	0.2	0.5	0.2	0.5
	평균(보유자)	34,696,863	43,840,878	34,163,914	40,878,272
	평균(전체)	55,162	236,203	57,638	212,203
개인총부채	보유비율(%)	0.4	1.1	0.4	1.2
	평균(보유자)	34,571,261	50,595,215	36,906,981	47,868,484
	평균(전체)	145,039	578,703	160,455	555,996

마지막으로, 부채의 경우 교육비 부채를 가진 노인은 없었으며 일반부채와 함께 의료비 및 주거비와 관련된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부채 보유자의 비율은 실사자료가 복지행정자료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총부채의 경우 0.4%에서 1.2%로 높아졌다. 보유자의 개인총부채의 평균 역시 실사에 의해 약 3,500~3,700만원에서 4,800~5,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평균부채는 약 15~16만원에서 56~58만원으로 높아졌다.

3. 실사 전후 소득재산 항목별 통계적 차이 검증: Paired Sample t-tes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복지행정자료와 실사자료 사이에는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비율과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것은 소득재산 항목의 특성 또는 실사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자료를 기초로 '원표본 노인(15,411명)'과 '전체 가구원(22,644명)'으로 구분하여 통계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된 소득재산 항목은 공통된 50개 항목 가운데 보유자가 전혀 없는 항목을 제외한 35개이며, 이들은 소득 12개 항목, 재산 19개 항목, 부채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방법은 '대응표본(Paired Sample) t-test'이며, 이것은 실사자료와 복지행정자료에서 각각 대응되는 소득재산 항목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실사 전후의 항목별 차이의 유의미성 검증은 어떠한 소득재산 항목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사가 유용한 조사방법으로 활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원표본 노인을 대상으로 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기타자영업 분야의 사업소득,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실사자료와 복지행정자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공적이전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사에 의해 평균 금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임시 및 일용직 근로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복지행정자료보다 실사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산의 경우, 건축물, 토지, 자동차 관련 모든 항목에서 실사자료와 행정자료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실사 이후 평균금액이 증가하였다. 반면, 임차보증금 중 전월세를 제외한 금융재산, 동산 등 기타 재산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채의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를 제외한 일반 부채와 주거비 부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들의 합계인 개인총소득,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실사에 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9〉 실사 전후 소득재산 항목별 통계적 차이 검증: 원표본 노인(N=15,411)

소득재산 항목	평균(원) (실사·행정)	표준편차 (실사·행정)	평균의 표준오차	t	Sig (2-tailed)
근로소득_상시	-1,279	305,475	2,460.7	-0.520	0.603
근로소득_임시	1,817	40,237	324.1	5.607	0.000**
근로소득_일일	2,456	38,797	312.5	7.859	0.000**
근로소득_자활	24	3,384	27.3	0.895	0.371
사업소득_농업	15,765	141,663	1,141.1	13.815	0.000**
사업소득_어업	92	5,097	41.1	2.246	0.025*
사업소득_기타자영업	-2,796	343,856	2,769.9	-1.009	0.313
재산소득_임대	4,741	149,751	1,206.3	3.930	0.000**
재산소득_이자	82	53,074	427.5	0.193	0.847
공적이전소득	-6,526	162,090	1,305.7	-4.998	0.000**
사적이전소득	13,127	121,134	975.8	13.453	0.000**
개인총소득	28,196	582,779	4,694.5	6.006	0.000**
건축물_주택	10,963,492	61,955,434	499,072.9	21.968	0.000**
건축물_건물	1,153,686	21,138,708	170,279.8	6.775	0.000**
건축물_기타	593,750	12,761,371	102,797.3	5.776	0.000**
토지_논	836,683	17,566,628	141,505.4	5.913	0.000**
토지_밭	648,588	15,867,265	127,816.4	5.074	0.000**
토지_임야	266,259	7,744,943	62,388.3	4.268	0.000**
토지_기타	1,394,121	37,208,310	299,726.1	4.651	0.000**
자동차	69,876	3,569,760	28,755.7	2.430	0.015*
임차보증금_전월세	737,471	7,081,885	57,047.1	12.927	0.000**
임차보증금_상가	7,462	501,402	4,039.0	1.848	0.065
임차보증금_기타	4,482	440,724	3,550.2	1.262	0.207
금융재산_은행예적금	-120,788	8,340,500	67,185.7	-1.798	0.072
금융재산_저축성보험	136	261,100	2,103.3	0.065	0.948
금융재산_주식	1,947	241,661	1,946.7	1.000	0.317
금융재산_현금수표어음	2,929	244,128	1,966.5	1.489	0.136
동산_가죽	16,904	851,454	6,858.8	2.465	0.014*
동산_기계기구류	65	8,055	64.9	1.000	0.317
동산_기타	50,099	4,652,087	37,474.2	1.337	0.181
개인총재산	16,628,071	83,589,460	673,342.6	24.695	0.000**
일반부채	240,782	6,776,408	54,586.4	4.411	0.000**
의료비부채	195	24,166	194.7	1.000	0.317
주거비부채	154,565	3,537,376	28,494.8	5.424	0.000**
개인총부채	395,542	7,824,971	63,032.9	6.275	0.000**

* p<.05, ** P<.01

〈표 3-10〉 실사 전후 소득재산 항목별 통계적 차이 검증: 전체 가구원(N=22,644)

소득재산 항목	평균(원) (실사·행정)	표준편차 (실사·행정)	평균의 표준오차	t	Sig. (2-tailed)
근로소득_상시	-2,396	316,348	2,102.3	-1.140	0.255
근로소득_임시	1,469	44,597	296.4	4.958	0.000**
근로소득_일일	2,650	44,742	297.3	8.914	0.000**
근로소득_자활	27	4,178	27.8	0.963	0.336
사업소득_농업	21,021	714,655	4,749.2	4.426	0.000**
사업소득_어업	108	5,562	37.0	2.912	0.004**
사업소득_기타자영업	-2,525	356,803	2,371.1	-1.065	0.287
재산소득_임대	5,036	196,629	1,306.7	3.854	0.000**
재산소득_이자	-176	71,400	474.5	-0.371	0.711
공적이전소득	-6,756	150,841	1,002.4	-6.740	0.000**
사적이전소득	10,974	105,823	703.2	15.604	0.000**
개인총소득	30,160	929,586	6,177.5	4.882	0.000**
건축물_주택	11,221,965	64,849,048	430,950.1	26.040	0.000**
건축물_건물	1,224,075	23,233,828	154,398.9	7.928	0.000**
건축물_기타	585,985	12,880,970	85,599.7	6.846	0.000**
토지_논	783,840	16,287,588	108,238.1	7.242	0.000**
토지_밭	589,275	15,336,094	101,915.0	5.782	0.000**
토지_임야	421,563	12,850,619	85,398.0	4.936	0.000**
토지_기타	1,330,874	39,062,909	259,590.0	5.127	0.000**
자동차	70,048	3,325,890	22,102.0	3.169	0.002**
임차보증금_전월세	607,171	6,597,678	43,844.4	13.848	0.000**
임차보증금_상가	12,189	712,121	4,732.4	2.576	0.010**
임차보증금_기타	3,425	367,935	2,445.1	1.401	0.161
금융재산_은행예적금	-165,094	8,468,245	56,275.2	-2.934	0.003**
금융재산_저축성보험	252	216,722	1,440.2	0.175	0.861
금융재산_주식	1,325	199,363	1,324.9	1.000	0.317
금융재산_현금수표어음	7,984	796,394	5,292.4	1.509	0.131
동산_가축	30,759	2,751,859	18,287.3	1.682	0.093
동산_기계기구류	44	6,645	44.2	1.000	0.317
동산_기타	33,340	3,839,773	25,517.0	1.307	0.191
개인총재산	16,759,639	89,206,286	592,814.6	28.271	0.000**
일반부채	252,270	7,133,229	47,403.4	5.322	0.000**
의료비부채	353	38,748	257.5	1.372	0.170
주거비부채	181,041	3,980,144	26,449.8	6.845	0.000**
개인총부채	433,664	8,284,939	55,057.0	7.877	0.000**

* p<.05, ** P<.01

원표본 노인과 그 배우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에 대한 Paired Sample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재산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원표본 노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기타자영업 분야의 사업소득,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복지행정자료와 실사자료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항목들은 실사 이후 평균금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원표본 노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시 및 일용직 근로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뚜렷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재산의 경우, 건축물, 토지, 자동차 관련 모든 항목에서 실사자료와 행정자료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전월세 임차보증금과 함께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재산의 경우 은행예적금을 제외한 항목들은 실사에 의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은행예적금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행예적금의 경우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복지행정자료에 나타난 예적금액과 실사 시점에서의 잔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실사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의 경우에는 원표본 노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항목들의 합계인 개인총소득,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행정자료와 실사자료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다. 요컨대, 소득과 재산, 부채별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각 항목별로 실사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사가 노인의 소득재산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에 비해 수급대상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만큼의 행정비용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2절 개인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본 절에서는 원표본 노인(15,411명)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전체 가구원 22,644명을 대상으로 노인 개인의 특성을 5가지(성별구성, 연령별 분포, 시·도, 지역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항목별 보유실태는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 및 전체 평균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1. 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원표본 노인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전체 가구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원의 38.7%가 남성, 61.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원표본노인의 경우 38.4%가 남성, 61.6%가 여성이었다.

〈표 3-11〉 성별 분포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계
전체 (N=22,644)	38.7	61.3	100.0
원표본 (N=15,411)	38.4	61.6	100.0

아래 표는 성별구성에 따른 노인개인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비율 및 보유자 평균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남성노인의 보유비율은 15.7%, 여성노인의 보유비율 5.4%로 큰 차이를 보였고, 보유자 평균소득수준도 남성노인 약 93만원, 여성노인 약 5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남성노인의 52.1%가, 여성노인의 45.8%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자 평균소득은 남성노인 약 39만원, 여성노인 약 13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인총소득 역시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단위: %, 원)

성별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남	보유비율(%)	8.1	1.9	9.9	9.3	6.8	15.7
	평균(보유자)	1,763,797	467,648	1,525,548	665,101	1,244,251	933,939
	평균(전체)	142,608	8,746	151,354	61,663	84,993	146,657
여	보유비율(%)	1.8	1.9	3.7	2.0	3.4	5.4
	평균(보유자)	1,032,832	302,758	664,456	266,063	725,828	558,580
	평균(전체)	18,758	5,761	24,519	5,446	24,587	30,032
전체	보유비율(%)	4.2	1.9	6.1	4.8	4.7	9.4
	평균(보유자)	1,572,119	365,940	1,206,533	561,795	1,016,319	802,042
	평균(전체)	66,720	6,917	73,637	27,216	47,979	75,196

성별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남	보유비율(%)	6.0	1.3	7.2	49.7	4.9	52.1	65.7
	평균(보유자)	1,764,352	1,524,346	1,742,121	375,044	392,656	394,251	960,199
	평균(전체)	106,437	19,122	125,558	186,346	19,120	205,466	631,154
여	보유비율(%)	1.8	1.6	3.4	44.4	3.9	45.8	50.8
	평균(보유자)	1,666,789	310,634	1,044,146	111,354	245,142	128,705	297,166
	평균(전체)	30,753	4,993	35,746	49,429	9,576	59,005	150,907
전체	보유비율(%)	3.5	1.5	4.9	46.4	4.3	48.3	56.6
	평균(보유자)	1,732,535	711,560	1,442,629	220,606	310,146	239,724	595,505
	평균(전체)	60,062	10,464	70,526	102,451	13,272	115,723	336,885

성별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등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남	보유비율(%)	23.1	52.4	20.7	5.3	8.7	0.5	74.3	2.1
	평균(보유자)	125,523,971	129,098,572	11,968,708	24,617,931	55,172,366	43,128,821	141,797,719	55,939,708
	평균(전체)	29,015,519	67,589,411	2,475,908	1,313,855	4,813,190	206,570	105,414,452	1,161,025
여	보유비율(%)	9.0	14.5	3.5	3.8	3.3	0.1	28.3	0.6
	평균(보유자)	113,444,092	87,534,804	11,192,425	16,529,816	22,262,741	3,502,194	87,161,715	37,962,776
	평균(전체)	10,244,717	12,724,879	388,004	620,687	725,244	3,281	24,706,813	210,676
전체	보유비율(%)	14.5	29.2	10.1	4.4	5.4	0.2	46.2	1.1
	평균(보유자)	120,909,310	116,411,811	11,806,010	20,357,154	42,949,563	33,762,528	121,238,649	50,595,215
	평균(전체)	17,513,802	33,971,438	1,196,555	889,120	2,308,321	82,006	55,961,242	578,703

재산소득의 경우에도 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 소득수준이 높았다. 남성노인의 재산소득 합계 보유비율은 7.2%, 여성노인의 경우는 3.4%였고, 보유자 평균 소득은 남성노인 약 174만원, 여성노인이 약 104만원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71.95세로, 64세 이하 7.7%, 65~69세 노인이 35.1%, 70세 이상 노인이 57.2%였다. 원표본 노인의 평균연령은 이보다 높은 73.08세로 나타났다으며, 65~69세 노인이 37.7%, 70세 이상 노인이 62.3%를 차지하였다.

〈표 3-13〉 연령별 분포

(단위: %)

구분	평균연령	64세 이하	65~69세	70세 이상	계
전체 (N=22,644)	71.95	7.7	35.1	57.2	100.0
원표본 (N=15,411)	73.08	-	37.7	62.3	100.0

이러한 연령구성에 따른 소득재산항목별 보유실태와 보유자 평균을 살펴보면, 많은 항목에서 65~69세의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시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개인총소득, 재산항목 중 건축물, 토지, 자동차의 경우 65~69세의 보유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적이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유비율이 높아져 64세 이하 0.7%, 65~69세 3.3%, 70세 이상 5.3%의 보유비율을 보였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64세 이하 약 41만원, 65~69세 약 34만원, 70세 이상 약 30만원이었다.

건축물의 경우 64세 이하 7.2%, 65~69세 노인 16.2%가 70세 이상 노인 14.4%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유자 평균소득수준은 64세 이하는 약 1억 8천4백만원, 65~69세 노인 약 1억 3천 4백만원, 70세 이상 노인 약 1억 7백만원이었다. 토지와 자동차 등의 경우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65~69세의 보유비율이 높았다. 한편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유비율이 높아져 64세 이하의 0.4%, 65~69세 노인의 4.1%가 70세 이상 노인의 5.0%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보유자 평균 소득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연령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단위: %, 원)

연령대 구분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사업)	사업소득 합계
64세 이하	보유비율(%)	6.2	3.7	9.7	1.4	6.5	7.8
	평균(보유자)	1,209,574	507,436	970,892	338,717	833,466	751,685
	평균(전체)	75,250	18,707	93,957	4,683	53,772	58,455
65~69세	보유비율(%)	6.8	2.4	9.2	4.6	6.9	11.2
	평균(보유자)	1,419,654	388,875	1,153,332	871,311	1,129,392	1,042,287
	평균(전체)	96,644	9,444	106,089	39,799	77,453	117,252
70세 이상	보유비율(%)	2.4	1.3	3.7	5.5	3.2	8.4
	평균(보유자)	1,961,985	287,096	1,369,012	411,090	916,453	611,931
	평균(전체)	47,229	3,788	51,017	22,519	29,132	51,651
전체	보유비율(%)	4.2	1.9	6.1	4.8	4.7	9.4
	평균(보유자)	1,572,119	365,940	1,206,533	561,795	1,016,319	802,042
	평균(전체)	66,720	6,917	73,637	27,216	47,979	75,196

연령대 구분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64세 이하	보유비율(%)	2.0	0.3	2.2	36.1	0.7	36.8	47.6
	평균(보유자)	1,603,347	8,348,406	2,533,048	175,353	411,538	180,715	578,885
	평균(전체)	31,402	24,045	55,447	63,333	3,082	66,415	275,771
65~69세	보유비율(%)	4.1	0.8	4.9	49.8	3.3	51.4	60.8
	평균(보유자)	1,909,666	823,810	1,745,925	280,901	340,394	294,258	759,058
	평균(전체)	77,857	6,945	84,803	139,938	11,394	151,331	461,242
70세 이상	보유비율(%)	3.3	2.0	5.3	45.8	5.3	47.9	55.2
	평균(보유자)	1,608,419	536,445	1,210,552	185,136	296,575	209,877	487,027
	평균(전체)	52,989	10,803	63,792	84,705	15,789	100,493	268,821
전체	보유비율(%)	3.5	1.5	4.9	46.4	4.3	48.3	56.6
	평균(보유자)	1,732,535	711,560	1,442,629	220,606	310,146	239,724	595,505
	평균(전체)	60,062	10,464	70,526	102,451	13,272	115,723	336,885

연령대 구분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등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64세 이하	보유비율(%)	7.2	13.8	6.6	0.4	1.0	0.0	24.5	0.3
	평균(보유자)	184,790,650	96,918,003	12,129,116	33,500,000	27,194,393	-	113,570,613	51,400,000
	평균(전체)	13,305,778	13,342,974	803,484	135,081	281,970	-	27,869,286	148,041
65~69세	보유비율(%)	16.2	31.5	14.8	4.1	5.2	0.2	50.3	1.4
	평균(보유자)	134,421,589	125,597,637	11,800,190	24,479,796	55,600,670	42,468,482	133,270,264	51,023,343
	평균(전체)	21,786,209	39,574,240	1,747,681	1,010,365	2,875,535	85,503	67,079,534	699,829
70세 이상	보유비율(%)	14.4	29.8	7.7	5.0	6.1	0.3	46.5	1.1
	평균(보유자)	107,310,497	111,666,070	11,775,793	18,148,857	36,710,970	30,190,854	113,794,261	50,245,630
	평균(전체)	15,457,812	33,299,079	911,282	915,774	2,231,945	90,845	52,906,737	562,118
전체	보유비율(%)	14.5	29.2	10.1	4.4	5.4	0.2	46.2	1.1
	평균(보유자)	120,909,310	116,411,811	11,806,010	20,357,154	42,949,563	33,762,528	121,238,649	50,595,215
	평균(전체)	17,513,802	33,971,438	1,196,555	889,120	2,308,321	82,006	55,961,242	578,703

3. 시·도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다음은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시·도별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16.5%가 서울지역에, 16.4%는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분석대상의 약 1/3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3%의 노인은 경북지역에, 7.5%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제주지역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각각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1.1%, 1.4%가 거주하고 있다. 원표본 노인의 경우, 33.0%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4%는 경북지역, 7.4%는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 분석대상과 큰 차이가 없다.

〈표 3-15〉 시·도별 분포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체	16.5	7.6	5.0	4.5	2.1	2.3	1.1	16.4	4.5	4.3	6.5	4.7	7.5	8.3	7.3	1.4	100.0
원표본	16.5	7.7	4.9	4.6	2.2	2.3	1.1	16.5	4.5	4.2	6.2	4.7	7.4	8.4	7.2	1.4	100.0

시·도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와 경기도는 그 외 8개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시·임시일용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경우, 서울의 10.6%,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4.0%(광주)~7.7%(경기)의 보유비율을 나타냈고, 8개 자치단체의 경우 제주지역(5.2%)을 제외하면 약 3~5%의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유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2.9%,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4.0%였다. 보유자 평균소득의 경우 서울이 약 157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약 5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림어업소득·기타 자영업을 포함한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경우 4.0%~8.0%의 보유율을 보였으나 그 외의 8개 자치단체 보유비율이 9.1%~18.8%로 나타났다.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지역(18.8%)이었으며, 광역시 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0%)이었다. 그러나 보유자 평균소득수준의 경우 전남지역 약 36만원, 울산 약 55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보유비율은 9.1%에 그쳤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8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약 13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16〉 시·도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단위: %, 원)

시·도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서울	보유비율(%)	7.9	2.7	10.6	0.0	5.7	5.8
	평균(보유자)	1,967,111	395,397	1,575,189	250,000	1,477,768	1,472,058
	평균(전체)	155,894	10,692	166,586	67	84,670	84,737
부산	보유비율(%)	5.3	1.0	6.3	0.1	7.0	7.0
	평균(보유자)	1,677,426	226,765	1,451,176	3,000,000	1,298,382	1,312,445
	평균(전체)	89,567	2,237	91,804	1,741	90,427	92,168
대구	보유비율(%)	4.9	1.5	6.3	0.3	5.7	6.0
	평균(보유자)	1,397,369	509,019	1,204,346	850,000	752,846	757,132
	평균(전체)	67,953	7,651	75,604	2,255	43,267	45,522
인천	보유비율(%)	4.4	1.8	6.2	0.6	4.9	5.5
	평균(보유자)	1,138,611	361,778	916,659	535,000	463,663	471,306
	평균(전체)	50,184	6,378	56,562	3,144	22,706	25,850
광주	보유비율(%)	3.6	0.4	4.0	1.0	5.0	6.1
	평균(보유자)	908,725	196,000	833,702	382,136	1,385,868	1,212,811
	평균(전체)	32,319	820	33,139	3,997	69,583	73,581
대전	보유비율(%)	5.0	0.8	5.8	0.4	5.0	5.4
	평균(보유자)	1,066,425	362,500	972,568	650,000	1,141,346	1,106,250
	평균(전체)	53,735	2,810	56,545	2,519	57,510	60,029
울산	보유비율(%)	5.6	1.6	7.2	1.6	6.4	8.0
	평균(보유자)	872,417	257,500	735,769	738,105	504,166	550,954
	평균(전체)	48,661	4,104	52,764	11,763	32,138	43,901
경기	보유비율(%)	6.0	1.7	7.7	0.8	3.7	4.5
	평균(보유자)	1,460,164	529,222	1,264,623	471,348	1,277,409	1,138,268
	평균(전체)	87,995	8,970	96,965	3,677	47,770	51,447
강원	보유비율(%)	2.3	2.2	4.4	3.4	6.1	9.3
	평균(보유자)	1,647,174	369,091	1,022,333	356,173	751,804	621,872
	평균(전체)	37,106	7,953	45,059	12,210	45,653	57,863
충북	보유비율(%)	2.7	2.2	4.9	7.3	2.3	9.5
	평균(보유자)	785,417	230,000	537,252	408,283	401,136	411,012
	평균(전체)	21,118	4,995	26,113	29,977	9,126	39,103
충남	보유비율(%)	1.6	1.9	3.5	10.1	3.9	13.5
	평균(보유자)	911,794	292,321	571,691	1,231,769	597,372	1,092,687
	평균(전체)	14,315	5,587	19,902	124,438	23,242	147,681
전북	보유비율(%)	2.1	2.3	4.2	10.5	3.1	13.0
	평균(보유자)	1,229,061	421,604	825,730	446,968	645,230	517,050
	평균(전체)	25,389	9,501	34,890	47,005	19,993	66,998
전남	보유비율(%)	1.2	2.7	3.8	15.6	3.8	18.8
	평균(보유자)	1,019,583	294,453	525,657	347,947	363,129	360,850
	평균(전체)	12,059	7,836	19,895	54,116	13,743	67,859

경북	보유비율(%)	1.6	1.3	29	10.9	3.3	13.9
	평균(보유자)	1,142,399	257,271	756,161	687,371	806,170	728,602
	평균(전체)	18,768	3,272	22,040	74,675	26,488	101,162
경남	보유비율(%)	2.4	1.7	41	11.6	6.4	17.3
	평균(보유자)	2,070,651	304,411	1,343,376	365,755	747,030	522,963
	평균(전체)	50,259	5,172	55,431	42,390	48,049	90,440
제주	보유비율(%)	2.1	3.0	5.2	6.4	2.7	9.1
	평균(보유자)	2,672,971	225,200	1,233,106	540,476	3,392,129	1,395,972
	평균(전체)	57,045	6,866	63,911	34,604	93,077	127,680
전체	보유비율(%)	4.2	1.9	6.1	4.8	4.7	9.4
	평균(보유자)	1,572,119	365,940	1,206,533	561,795	1,016,319	802,042
	평균(전체)	66,720	6,917	73,637	27,216	47,979	75,196

시·도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서울	보유비율(%)	6.3	1.0	7.3	40.8	3.8	42.7	53.1
	평균(보유자)	2,673,703	3,187,174	2,766,304	320,948	428,551	345,068	1,136,450
	평균(전체)	169,657	33,280	202,936	131,043	16,408	147,451	603,672
부산	보유비율(%)	4.9	1.3	6.3	47.6	4.9	49.9	58.8
	평균(보유자)	1,259,990	51,129	1,002,547	227,438	315,278	247,942	633,178
	평균(전체)	62,159	683	62,841	108,241	15,370	123,611	372,263
대구	보유비율(%)	4.5	1.3	5.8	29.7	6.9	33.3	43.9
	평균(보유자)	628,310	93,496	506,762	441,270	313,122	458,065	696,312
	평균(전체)	28,332	1,240	29,572	131,094	21,595	152,688	305,368
인천	보유비율(%)	3.8	1.1	4.8	48.2	4.2	49.5	57.5
	평균(보유자)	2,370,752	1,369,539	2,194,373	181,163	349,359	206,247	506,319
	평균(전체)	90,558	14,755	105,313	87,299	14,713	102,012	291,096
광주	보유비율(%)	3.1	0.6	3.8	30.3	5.2	34.7	42.7
	평균(보유자)	410,278	216,537	377,988	480,650	421,389	483,307	680,655
	평균(전체)	12,875	1,359	14,234	145,804	22,039	167,843	290,489
대전	보유비율(%)	3.9	1.2	5.0	50.2	3.1	50.6	57.0
	평균(보유자)	927,708	38,948	722,610	230,949	285,250	246,666	493,036
	평균(전체)	35,958	453	36,411	115,922	8,845	124,767	280,916
울산	보유비율(%)	4.4	0.4	4.8	25.1	4.0	27.1	37.5
	평균(보유자)	704,167	33,333	648,264	242,402	221,902	257,211	527,292
	평균(전체)	30,860	133	30,993	60,842	8,841	69,683	197,472
경기	보유비율(%)	3.5	1.0	4.4	45.7	3.7	47.4	54.8
	평균(보유자)	2,501,570	1,326,249	2,274,080	212,614	360,496	233,210	659,706
	평균(전체)	87,491	12,845	100,336	97,069	13,481	110,550	361,356
강원	보유비율(%)	3.3	1.5	4.7	45.8	2.8	46.8	54.5
	평균(보유자)	522,980	80,444	395,583	242,872	382,845	261,018	449,668
	평균(전체)	17,416	1,182	18,597	111,326	10,874	122,200	244,873
충북	보유비율(%)	2.3	1.7	3.9	49.0	4.6	51.6	58.7
	평균(보유자)	373,106	64,624	243,219	212,751	344,096	232,433	334,081
	평균(전체)	8,488	1,069	9,558	104,285	15,657	119,942	196,234

충남	보유비율(%)	1.8	1.4	3.1	47.6	3.7	49.1	57.7
	평균(보유자)	630,342	165,224	431,709	159,783	236,066	172,605	464,181
	평균(전체)	11,187	2,368	13,555	76,129	8,701	84,830	267,736
전북	보유비율(%)	2.1	2.3	4.2	59.2	4.2	59.7	66.2
	평균(보유자)	769,828	59,291	407,982	175,475	180,982	186,900	349,946
	평균(전체)	15,903	1,336	17,239	103,967	7,647	111,614	231,655
전남	보유비율(%)	1.2	2.6	3.8	54.7	4.9	56.4	63.9
	평균(보유자)	711,263	37,318	259,039	138,351	215,225	152,870	291,248
	평균(전체)	8,833	971	9,804	75,680	10,564	86,244	186,185
경북	보유비율(%)	1.4	2.3	3.8	46.6	4.8	48.5	56.1
	평균(보유자)	406,204	42,383	180,738	176,908	207,535	190,781	399,857
	평균(전체)	5,812	988	6,800	82,501	10,008	92,509	224,191
경남	보유비율(%)	2.1	1.9	3.9	55.6	4.1	56.9	65.0
	평균(보유자)	1,175,405	1,114,629	1,181,651	159,894	272,683	175,808	452,308
	평균(전체)	24,963	21,643	46,606	88,873	11,086	99,959	293,946
제주	보유비율(%)	3.0	0.9	4.0	57.0	5.5	60.4	66.5
	평균(보유자)	1,075,416	12,139	830,045	182,263	207,718	191,020	514,463
	평균(전체)	32,787	111	32,898	103,912	11,399	115,311	341,930
전체	보유비율(%)	3.5	1.5	4.9	46.4	4.3	48.3	56.6
	평균(보유자)	1,732,535	711,560	1,442,629	220,606	310,146	239,724	595,505
	평균(전체)	60,062	10,464	70,526	102,451	13,272	115,723	336,885

시·도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등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서울	보유비율(%)	14.8	19.9	10.5	7.8	4.7	0.0	43.3	1.4
	평균(보유자)	286,023,731	217,063,153	15,431,407	24,434,928	55,175,121	-	211,094,999	54,568,657
	평균(전체)	42,195,201	43,180,167	1,615,443	1,897,223	2,614,725	-	91,502,759	759,724
부산	보유비율(%)	15.6	21.8	9.1	8.6	4.8	0.1	44.7	1.0
	평균(보유자)	102,826,332	132,203,952	13,287,895	15,919,432	42,112,645	9,714,500	110,485,220	38,285,080
	평균(전체)	16,053,560	28,773,350	1,210,795	1,367,427	2,028,642	5,638	49,439,411	377,740
대구	보유비율(%)	17.4	23.7	11.9	5.5	6.8	0.2	45.3	1.1
	평균(보유자)	122,930,327	127,325,208	12,050,020	14,677,726	66,115,474	140,413,750	129,392,424	61,433,989
	평균(전체)	21,412,267	30,170,783	1,438,331	804,615	4,501,230	248,300	58,575,527	651,820
인천	보유비율(%)	13.7	18.8	10.1	4.8	4.6	0.0	39.9	1.7
	평균(보유자)	100,973,224	190,430,702	9,399,976	14,395,857	49,064,620	-	134,345,400	41,715,641
	평균(전체)	13,845,496	35,810,671	948,284	690,888	2,258,606	0	53,553,945	694,580
광주	보유비율(%)	19.0	30.8	13.6	1.9	4.8	1.3	48.5	0.6
	평균(보유자)	77,235,563	68,293,049	7,689,289	11,260,222	76,522,895	88,245,836	86,026,559	30,000,000
	평균(전체)	14,703,842	21,002,256	1,045,615	212,013	3,682,064	1,107,688	41,753,476	188,285
대전	보유비율(%)	10.9	23.8	10.1	5.2	5.8	0.2	41.1	0.8
	평균(보유자)	78,529,035	110,720,325	13,137,702	13,059,593	49,821,017	7,439,000	96,953,137	31,500,000
	평균(전체)	8,522,531	26,392,636	1,323,954	683,351	2,896,571	14,417	39,833,459	244,186
울산	보유비율(%)	9.2	24.3	13.5	4.8	3.2	0.0	41.4	0.4
	평균(보유자)	90,190,715	108,620,062	10,707,475	19,216,833	41,348,943	-	92,554,403	6,240,000
	평균(전체)	8,264,488	26,397,704	1,450,415	918,733	1,317,895	-	38,349,235	24,861

경기	보유비율(%)	13.1	20.9	10.2	5.3	4.8	0.1	41.2	1.7
	평균(보유자)	213,745,968	221,914,767	12,003,726	29,564,896	48,117,605	1,000,000	192,628,361	72,452,196
	평균(전체)	28,062,425	46,269,557	1,223,947	1,558,978	2,330,150	538	79,445,595	1,228,003
강원	보유비율(%)	12.2	32.3	11.9	1.7	5.3	0.3	45.0	0.7
	평균(보유자)	38,733,249	90,217,225	12,027,496	16,147,294	38,637,649	135,333,333	84,635,363	76,000,000
	평균(전체)	4,742,073	29,159,338	1,437,174	268,858	2,043,519	397,649	38,048,611	521,058
충북	보유비율(%)	17.9	35.0	9.7	3.7	7.8	0.4	50.9	1.3
	평균(보유자)	44,333,959	78,537,076	10,038,512	16,722,528	34,488,499	1,325,000	77,952,998	25,522,122
	평균(전체)	7,931,515	27,451,429	975,822	622,555	2,674,909	5,481	39,661,712	343,110
충남	보유비율(%)	13.0	39.7	9.9	1.4	4.6	0.4	49.0	1.2
	평균(보유자)	30,697,500	88,177,241	9,429,974	13,462,381	39,793,563	12,833,333	85,692,504	26,241,351
	평균(전체)	4,002,200	34,969,950	933,342	192,976	1,847,073	52,560	41,998,101	304,507
전북	보유비율(%)	13.8	39.4	11.5	3.1	6.2	0.6	54.2	1.0
	평균(보유자)	33,322,084	62,679,682	10,545,915	11,106,212	39,146,555	1,819,167	61,475,749	34,445,014
	평균(전체)	4,599,386	24,718,748	1,208,077	344,136	2,425,984	10,249	33,306,580	355,770
전남	보유비율(%)	15.4	42.2	6.2	1.2	7.6	0.5	50.5	0.7
	평균(보유자)	20,232,599	48,106,943	8,491,135	11,874,700	22,554,488	42,796,667	51,557,698	34,083,500
	평균(전체)	3,122,832	20,312,453	527,244	140,446	1,707,259	227,776	26,038,009	241,870
경북	보유비율(%)	13.5	39.9	9.4	1.8	5.4	0.5	50.2	0.6
	평균(보유자)	35,203,515	69,447,955	9,858,902	12,362,618	26,776,951	13,333,333	69,969,412	54,551,019
	평균(전체)	4,757,232	27,712,936	924,762	222,750	1,433,213	63,593	35,114,485	317,997
경남	보유비율(%)	17.1	40.4	10.6	1.8	5.0	0.4	52.1	0.8
	평균(보유자)	53,288,346	72,051,105	13,060,670	12,371,667	42,108,065	3,849,667	80,490,634	42,532,192
	평균(전체)	9,118,516	29,074,020	1,378,978	225,212	2,095,183	14,016	41,905,925	361,317
제주	보유비율(%)	9.5	37.5	12.2	1.5	5.5	0.0	47.9	1.5
	평균(보유자)	83,975,889	138,302,693	7,736,455	8,325,800	19,872,961	-	129,447,670	17,868,491
	평균(전체)	7,936,746	51,863,510	943,470	126,918	1,090,589	-	61,961,232	272,386
전체	보유비율(%)	14.5	29.2	10.1	4.4	5.4	0.2	46.2	1.1
	평균(보유자)	120,909,310	116,411,811	11,806,010	20,357,154	42,949,563	33,762,528	121,238,649	50,595,215
	평균(전체)	17,513,802	33,971,438	1,196,555	889,120	2,308,321	82,006	55,961,242	578,703

재산항목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경우 보유비율 범위는 9.2%(울산)~19.0%(광주)였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의 보유비율 범위가 18.8%(인천)~30.8%(광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지역의 보유비율 범위는 32.3%(강원)~42.2%(전남)로 광역시, 수도권과 기타 도시지역간의 차이가 두드러 진다. 한편 보유자 평균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약 2억 2천만원, 보유비율 20.9%)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약 4천 8백만원, 보유비율 42.2%)이었다. 개인 총재산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지역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다음은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시·도 구분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대도시로, 도의 '시'지역을 중소도시, 도의 '군'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39.1%가 대도시지역에, 40.5%는 중소도시 지역에, 20.4%의 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표본 노인의 경우, 39.3%가 대도시지역에, 40.6%는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의 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역별 분포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전체 (N=22,644)	39.1	40.5	20.4	100.0
원표본 (N=15,411)	39.3	40.6	20.0	100.0

위의 분포에 따라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이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유자 평균소득수준도 대도시 약 193만원, 중소도시 약 112만원, 농어촌 65만원이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보유비율이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보유자 평균 소득수준은 근로소득과 같은 경향을 보여 대도시 약 117만원, 중소도시 약 79만원, 농어촌 약 57만원이다.

재산소득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전소득과 개인총소득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보유비율은 높으나 보유자 평균금액은 낮게 나타나는, 사업소득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산항목 중 토지, 금융재산, 동산의 경우는 보유비율이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보유자평균가액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의 경우, 농어촌의 보유비율이 43.9%, 평균가액 약 6천 3백만원인 반면, 대도시는 보유비율은 21.6%로 농어촌지역의 약 절반이지만, 평균가액 약 1억 6천만원으로 매우 높다.

〈표 3-18〉 지역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단위: %, 원)

지역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대도시	보유비율(%)	6.2	1.8	8.0	0.2	5.8	6.1
	평균(보유자)	1,688,202	379,309	1,392,762	689,686	1,194,503	1,173,821
	평균(전체)	103,904	6,982	110,886	1,714	69,471	71,185
중소도시	보유비율(%)	3.8	1.9	5.7	4.0	4.0	7.9
	평균(보유자)	1,474,622	393,850	1,123,647	477,134	1,097,637	799,545
	평균(전체)	56,129	7,474	63,603	19,254	44,054	63,308
농어촌	보유비율(%)	1.5	2.0	3.4	15.3	4.0	18.6
	평균(보유자)	1,135,717	288,626	647,836	602,236	362,077	572,003
	평균(전체)	16,470	5,685	22,155	91,900	14,577	106,477
전체	보유비율(%)	4.2	1.9	6.1	4.8	4.7	9.4
	평균(보유자)	1,572,119	365,940	1,206,533	561,795	1,016,319	802,042
	평균(전체)	66,720	6,917	73,637	27,216	47,979	75,196

지역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대도시	보유비율(%)	5.2	1.1	6.2	41.1	4.5	43.3	52.8
	평균(보유자)	1,960,096	1,457,752	1,881,707	290,694	362,230	313,845	828,784
	평균(전체)	101,380	16,133	117,514	119,495	16,322	135,817	437,276
중소도시	보유비율(%)	2.8	1.4	4.1	46.6	4.1	48.5	55.7
	평균(보유자)	1,648,957	698,619	1,347,365	206,662	313,946	225,531	526,583
	평균(전체)	45,500	9,753	55,252	96,333	12,977	109,310	293,184
농어촌	보유비율(%)	1.6	2.3	3.9	56.3	4.1	57.5	65.6
	평균(보유자)	609,868	43,612	279,757	145,462	193,801	156,500	352,172
	평균(전체)	9,768	1,010	10,779	81,924	8,012	89,937	231,199
전체	보유비율(%)	3.5	1.5	4.9	46.4	4.3	48.3	56.6
	평균(보유자)	1,732,535	711,560	1,442,629	220,606	310,146	239,724	595,505
	평균(전체)	60,062	10,464	70,526	102,451	13,272	115,723	336,885

지역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등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대도시	보유비율(%)	15.0	21.6	10.6	6.7	5.0	0.1	43.6	1.2
	평균(보유자)	178,683,748	163,344,032	13,086,284	19,668,633	54,480,277	82,745,602	155,045,966	48,651,229
	평균(전체)	26,777,339	35,214,428	1,384,737	1,326,050	2,737,857	93,445	67,533,856	582,386
중소도시	보유비율(%)	13.7	29.1	10.4	3.9	5.4	0.2	46.0	1.3
	평균(보유자)	117,180,827	122,954,398	11,625,362	22,285,019	44,267,493	35,527,273	122,723,811	54,529,637
	평균(전체)	16,064,598	35,817,559	1,209,575	867,679	2,385,008	85,244	56,429,664	695,819
농어촌	보유비율(%)	15.1	43.9	8.7	0.8	6.0	0.5	51.5	0.8
	평균(보유자)	17,489,805	63,616,513	9,263,240	12,437,143	22,150,194	10,777,522	63,795,914	43,532,301
	평균(전체)	2,634,828	27,925,171	810,032	94,221	1,332,847	53,654	32,850,753	339,213
전체	보유비율(%)	14.5	29.2	10.1	4.4	5.4	0.2	46.2	1.1
	평균(보유자)	120,909,310	116,411,811	11,806,010	20,357,154	42,949,563	33,762,528	121,238,649	50,595,215
	평균(전체)	17,513,802	33,971,438	1,196,555	889,120	2,308,321	82,006	55,961,242	578,703

5.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별로 노인의 소득 및 재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분석대상 가구원의 7.3%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92.7%는 비수급대상자로 나타났다. 원표본 노인의 8.6%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91.4%가 비수급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분포

(단위: %)

구분	수급	비수급	계
전체 (N=22,644)	7.3	92.7	100.0
원표본 (N=15,411)	8.6	91.4	100.0

전반적으로 수급대상노인의 경우 그 특성에 의해 임시일용근로소득, 공적이전·사적이전 등 이전소득 등의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은 6.0%로, 비수급대상자의 보유비율인 1.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약 17만원으로 비수급 노인 약 42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역시 이와 같았는데, 수급 노인의 보유비율은 80.4%, 12.7%로 월등히 높았지만 보유자평균소득은 각각 약 8만원과 10만원으로 비수급 노인 약 24만원, 36만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표 3-20〉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단위: %,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비수급	보유비율(%)	4.5	1.6	6.1	4.7	4.8	9.4
	평균(보유자)	1,581,510	423,395	1,290,673	606,037	1,066,978	852,460
	평균(전체)	71,777	6,654	78,431	28,746	51,474	80,220
수급	보유비율(%)	0.5	6.0	6.4	6.1	3.4	8.9
	평균(보유자)	453,354	172,470	193,669	125,508	99,936	124,304
	평균(전체)	2,203	10,269	12,472	7,701	3,400	11,101
전체	보유비율(%)	4.2	1.9	6.1	4.8	4.7	9.4
	평균(보유자)	1,572,119	365,940	1,206,533	561,795	1,016,319	802,042
	평균(전체)	66,720	6,917	73,637	27,216	47,979	75,196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비수급	보유비율(%)	3.7	0.4	4.1	43.8	3.6	45.6	54.1
	평균(보유자)	1,753,774	2,515,644	1,853,091	241,142	366,266	260,541	654,720
	평균(전체)	64,729	10,902	75,631	105,561	13,257	118,818	354,424
수급	보유비율(%)	0.6	14.7	15.2	80.4	12.7	82.3	87.7
	평균(보유자)	86,530	33,165	35,565	78,030	106,074	92,606	129,051
	평균(전체)	526	4,876	5,402	62,765	13,469	76,234	113,135
전체	보유비율(%)	3.5	1.5	4.9	46.4	4.3	48.3	56.6
	평균(보유자)	1,732,535	711,560	1,442,629	220,606	310,146	239,724	595,505
	평균(전체)	60,062	10,464	70,526	102,451	13,272	115,723	336,885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등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비수급	보유비율(%)	14.1	30.2	10.8	2.9	3.8	0.2	45.3	1.1
	평균(보유자)	132,879,071	120,843,917	11,951,682	28,469,860	61,312,992	48,583,392	131,939,761	55,500,213
	평균(전체)	18,750,390	36,498,339	1,285,213	817,570	2,318,436	85,607	59,755,554	584,129
수급	보유비율(%)	19.3	16.2	2.2	23.5	25.7	1.1	57.2	2.3
	평균(보유자)	9,027,917	10,741,075	2,916,084	7,683,679	8,480,148	3,297,417	13,205,124	22,068,777
	평균(전체)	1,738,669	1,735,799	65,550	1,801,883	2,179,285	36,059	7,557,246	509,486
전체	보유비율(%)	14.5	29.2	10.1	4.4	5.4	0.2	46.2	1.1
	평균(보유자)	120,909,310	116,411,811	11,806,010	20,357,154	42,949,563	33,762,528	121,238,649	50,595,215
	평균(전체)	17,513,802	33,971,438	1,196,555	889,120	2,308,321	82,006	55,961,242	578,703

제3절 가구특성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본 절에서는 원표본 노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가구(N=15,404)를 대상으로 가구의 특성을 7가지(성별구성, 가구구성, 가구형태, 연령구성, 시·도, 지역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각 항목별 보유실태는 1절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유형의 자료 중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보유비율과 보유자 및 전체 평균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 성별 구성

가구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노인부부와 노인단독이 각각 47%와 53%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단독의 경우 다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남성 노인단독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고 여성 노인단독의 비율이 43.1%로 노인단독인 가구의 약 81.3%로 나타났다.

〈표 3-21〉 성별 구성 분포

(단위: %)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계
	남성	여성		
비율(%)	9.9	43.1	47.0	100.0

이러한 성별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항목의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에 있어서 '노인부부 > 남성 노인단독 > 여성 노인단독'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는데, 특히 남성 노인단독의 상시 근로소득 보유비율이 84%로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농림어업 소득이나 기타자영업의 경우에도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이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에, 이자소득이나 사적이전의 경우에는 여성 노인단독의 보유비율 오히려 높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유자 평균소득은 남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는데 남성 노인단독의 경우 여성보다 보유비율이 10%p 높고, 보유자 평균소득도 2배 이상이며, 노인부부가구는 보유비율이 약 80%이고 보유자 평균소득이 약 100만원에 이르렀다.

〈표 3-22〉 성별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성별 구성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남성노인 단독	보유비율(%)	8.4	1.9	10.3	6.1	5.6	11.5
	평균(보유자)	1,545,784	384,966	1,331,365	429,832	907,808	670,715
	평균(전체)	129,405	7,302	136,707	26,144	51,060	77,205
여성노인 단독	보유비율(%)	1.2	1.9	3.1	2.9	2.9	5.7
	평균(보유자)	1,119,233	212,133	552,849	226,185	705,302	473,136
	평균(전체)	12,989	4,092	17,081	6,545	20,410	26,955
노인부부	보유비율(%)	9.9	3.5	13.3	10.8	10.4	20.5
	평균(보유자)	1,706,209	460,332	1,399,657	680,571	1,162,391	946,696
	평균(전체)	169,443	16,341	185,783	73,603	120,574	194,177
전체	보유비율(%)	6.0	2.7	8.6	6.9	6.7	13.2
	평균(보유자)	1,635,071	378,315	1,260,339	577,050	1,055,827	835,083
	평균(전체)	98,079	10,168	108,246	40,008	70,530	110,538

성별 구성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남성노인단 독	보유비율(%)	3.5	1.4	4.9	58.0	4.8	59.8	68.5
	평균(보유자)	1,701,777	865,625	1,456,506	257,539	302,860	274,452	659,785
	평균(전체)	58,989	12,455	71,444	149,403	14,658	164,061	452,227
여성노인단 독	보유비율(%)	2.1	3.0	5.0	52.4	6.9	54.6	58.5
	평균(보유자)	1,934,983	39,670	836,856	115,426	238,730	140,873	283,389
	평균(전체)	40,829	1,172	42,000	60,435	16,551	76,986	165,719
노인부부	보유비율(%)	7.5	1.5	8.9	69.0	5.9	71.0	80.8
	평균(보유자)	1,829,576	1,945,651	1,874,541	338,364	394,155	361,488	997,508
	평균(전체)	137,976	29,024	167,000	233,490	23,246	256,736	806,273
전체	보유비율(%)	4.8	2.1	6.8	60.7	6.2	62.9	70.0
	평균(보유자)	1,840,379	726,839	1,516,609	247,931	312,728	270,649	707,646
	평균(전체)	88,291	15,382	103,674	150,603	19,510	170,113	495,223

성별 구성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외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남성노인단 독	보유비율(%)	16.2	42.6	17.3	7.3	8.9	0.5	64.0	1.0
	평균(보유자)	116,087,840	108,818,303	12,294,098	18,749,856	42,643,377	10,181,429	113,086,881	58,981,398
	평균(전체)	18,753,235	46,331,403	2,122,722	1,361,173	3,793,001	46,612	72,408,147	617,202
여성노인단 독	보유비율(%)	13.5	18.5	3.4	7.5	5.9	0.2	39.0	1.0
	평균(보유자)	93,140,798	81,439,259	10,240,994	15,530,227	17,856,690	3,710,180	77,548,965	37,330,215
	평균(전체)	12,591,906	15,072,707	344,196	1,163,304	1,057,676	6,710	30,236,499	360,080
노인부부	보유비율(%)	28.3	57.8	24.2	5.3	9.2	0.5	80.7	2.5
	평균(보유자)	138,712,949	142,987,125	12,287,982	27,121,965	59,149,086	48,365,190	163,645,802	54,588,405
	평균(전체)	39,276,456	82,652,088	2,978,648	1,427,275	5,449,232	240,490	132,024,189	1,349,630
전체	보유비율(%)	20.7	39.4	14.6	6.4	7.8	0.4	61.1	1.7
	평균(보유자)	124,164,852	126,855,086	12,085,099	20,357,154	43,703,694	33,762,528	134,706,746	50,595,215
	평균(전체)	25,745,426	49,938,279	1,758,945	1,307,013	3,393,250	120,549	82,263,461	850,699

재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과 개인총재산에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토지는 남성 노인단독일 경우의 보유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에는 노인부부가 보유비율과 평균 부채액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단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보유비율이 1.0%로 동일하지만 평균은 남성 노인단독에서 약 2,000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2. 가구 구성

성별 구성이 노인단독의 경우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 것이라면, 가구구성은 노인부부를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구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단독인 경우가 53.0%를 차지했으며 노인부부 중 배우자의 연령 역시 65세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5.7%로 노인부부 중에는 약 7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가구 구성 분포

(단위: %)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계
		64세 이하 배우자	65세 이상 배우자	
비율(%)	53.0	11.3	35.7	100.0

이러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와 평균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노인부부(64세 이하 배우자) > 노인부부(65세 이상 배우자) > 노인단독’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시, 임시 및 일용 근로소득, 기타자영업의 사업소득, 각 소득유형별 합계와 개인총소득 모두 이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보유비율은 64세 이하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에서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농림어업 분야의 사업소득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보유비율이 11.7%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노인단독의 이자소득 보유비율이 2.7%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지만, 보유자 평균 이자소득은 약 12만원으로 노인부부(64세 이하 배우자) 약 370만원, 노인부부(65세 이상 배우자) 약 155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의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노인단독의 경우 보유비율은 6.5%로 가장 높았지만 평균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24〉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가구 구성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노인단독	보유비율(%)	2.5	1.9	4.4	3.5	3.4	6.8
	평균(보유자)	1,385,567	244,057	890,493	292,638	767,948	535,905
	평균(전체)	34,792	4,693	39,485	10,216	26,150	36,366
노인부부 (64세이하 배우자)	보유비율(%)	18.1	5.8	23.3	8.1	15.9	23.5
	평균(보유자)	1,695,809	601,892	1,471,210	730,548	1,132,696	1,018,704
	평균(전체)	307,707	34,671	342,378	59,336	180,083	239,419
노인부부 (65세이상 배우자)	보유비율(%)	7.3	2.9	10.1	11.7	8.6	19.6
	평균(보유자)	1,714,319	370,166	1,347,758	669,595	1,179,646	919,417
	평균(전체)	125,833	10,559	136,392	78,103	101,804	179,908
전체	보유비율(%)	6.0	2.7	8.6	6.9	6.7	13.2
	평균(보유자)	1,635,071	378,315	1,260,339	577,050	1,055,827	835,083
	평균(전체)	98,079	10,168	108,246	40,008	70,530	110,538

가구 구성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노인단독	보유비율(%)	2.4	2.7	5.0	53.4	6.5	55.6	60.4
	평균(보유자)	1,870,942	123,024	950,762	144,331	247,617	167,765	363,434
	평균(전체)	44,230	3,285	47,515	77,098	16,196	93,294	219,378
노인부부 (64세이하 배우자)	보유비율(%)	8.5	1.2	9.4	73.0	4.3	74.2	86.6
	평균(보유자)	2,007,646	3,696,007	2,264,074	430,445	465,242	450,518	1,306,754
	평균(전체)	170,002	42,581	212,583	314,156	20,100	334,255	1,131,366
노인부부 (65세이상 배우자)	보유비율(%)	7.2	1.6	8.8	67.8	6.4	70.0	79.0
	평균(보유자)	1,763,971	1,547,843	1,742,811	307,077	379,008	331,734	890,634
	평균(전체)	127,875	24,747	152,623	208,047	24,239	232,286	703,737
전체	보유비율(%)	4.8	2.1	6.8	60.7	6.2	62.9	70.0
	평균(보유자)	1,840,379	726,839	1,516,609	247,931	312,728	270,649	707,646
	평균(전체)	88,291	15,382	103,674	150,603	19,510	170,113	495,223

가구 구성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외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노인단독	보유비율(%)	14.0	23.0	6.0	7.4	6.5	0.2	43.7	1.0
	평균(보유자)	98,095,273	90,925,027	11,353,970	16,118,021	24,229,070	6,094,324	87,305,448	41,660,451
	평균(전체)	13,745,834	20,927,012	677,289	1,200,362	1,569,963	14,183	38,134,643	408,236
노인부부 (64세이하 배우자)	보유비율(%)	32.8	54.8	35.4	5.9	9.0	0.5	82.9	3.0
	평균(보유자)	150,478,609	150,164,722	12,008,213	28,700,427	63,246,843	46,550,465	173,095,166	53,546,762
	평균(전체)	49,321,618	82,348,396	4,247,145	1,702,848	5,719,905	241,333	143,581,244	1,603,935
노인부부 (65세이상 배우자)	보유비율(%)	26.9	58.7	20.7	5.1	9.3	0.5	80.0	2.3
	평균(보유자)	134,192,583	140,873,586	12,438,533	26,537,139	57,887,620	48,970,099	160,553,985	55,014,905
	평균(전체)	36,108,142	82,747,875	2,578,555	1,340,357	5,363,860	240,224	128,379,013	1,269,421
전체	보유비율(%)	20.7	39.4	14.6	6.4	7.8	0.4	61.1	1.7
	평균(보유자)	124,164,852	126,855,086	12,085,099	20,357,154	43,703,694	33,762,528	134,706,746	50,595,215
	평균(전체)	25,745,426	49,938,279	1,758,945	1,307,013	3,393,250	120,549	82,263,461	850,699

재산과 부채의 경우, 건축물, 자동차,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항목의 보유비율과 평균 가액에서 '노인부부(64세 이하 배우자) > 노인부부(65세 이상 배우자) > 노인단독'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임차보증금의 경우 노인단독의 보유비율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지와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의 보유비율이 각각 58.7%와 9.3%로 64세 이하의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 경우에도 보유자 평균가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구 형태

앞서 살펴본 성별구성 및 가구구성이 노인과 그 배우자만을 고려한 것임에 반해, 가구 형태는 전체 가구원수를 기초로 기타 가구원과의 동거여부를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서의 독거노인을 의미하는 노인단독가구는 전체의 24.5%, 노인부부가구는 31.3%로써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지 않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는 나머지 44.2%로 나타났다.

〈표 3-25〉 가구 형태 분포

(단위: %)

구분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	계
비율(%)	24.5	31.3	44.2	100.0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을 살펴보면, 각 항목에서 대체로 '노인부부가구 >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 > 노인단독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총 근로소득은 보유비율은 각각 11.3%, 8.0%, 6.1%로, 보유자 평균 역시 약 156만원, 116만원, 8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과 자영업으로 구성된 사업소득 역시 그러한데, 노인부부가구의 20.1%가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은 약 97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노인단독가구는 9.8%로 절반 정도에 그쳤고 보유자 평균 사업소득은 약 57만원에 불과했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보유비율에 있어서 이러한 순서로 나타났지만, 노인단독가구의 보유자 평균금액은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표 3-26〉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가구 형태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노인단독가구	보유비율(%)	3.1	3.0	6.1	5.5	4.5	9.8
	평균(보유자)	1,337,019	231,093	798,357	268,169	923,781	569,619
	평균(전체)	42,080	6,907	48,987	14,752	41,290	56,043
노인부부가구	보유비율(%)	8.0	3.5	11.3	12.0	8.8	20.1
	평균(보유자)	2,030,360	407,721	1,556,248	680,727	1,293,718	973,895
	평균(전체)	161,520	14,190	175,711	81,935	114,175	196,111
동거가구	보유비율(%)	6.2	2.0	8.0	4.1	6.4	10.2
	평균(보유자)	1,358,770	466,254	1,161,271	591,425	873,739	783,036
	평균(전체)	84,173	9,125	93,298	24,280	55,798	80,078
전체	보유비율(%)	6.0	2.7	8.6	6.9	6.7	13.2
	평균(보유자)	1,635,071	378,315	1,260,339	577,050	1,055,827	835,083
	평균(전체)	98,079	10,168	108,246	40,008	70,530	110,538

가구 형태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노인단독가구	보유비율(%)	3.3	5.1	8.3	73.0	11.3	76.2	81.2
	평균(보유자)	1,964,668	135,566	863,820	130,704	246,366	161,740	374,723
	평균(전체)	64,432	6,848	71,281	95,375	27,823	123,198	304,159
노인부부가구	보유비율(%)	7.5	1.8	9.2	70.4	6.9	72.5	80.0
	평균(보유자)	2,043,104	1,578,382	1,981,886	309,253	400,645	338,729	1,001,634
	평균(전체)	152,376	29,102	181,478	217,829	27,639	245,468	801,390
동거가구	보유비율(%)	3.8	0.7	4.4	47.1	3.0	48.6	56.6
	평균(보유자)	1,493,741	1,534,357	1,509,981	283,871	308,049	293,504	678,121
	평균(전체)	56,048	10,386	66,434	133,581	9,111	142,692	384,062
전체	보유비율(%)	4.8	2.1	6.8	60.7	6.2	62.9	70.0
	평균(보유자)	1,840,379	726,839	1,516,609	247,931	312,728	270,649	707,646
	평균(전체)	88,291	15,382	103,674	150,603	19,510	170,113	495,223

가구 형태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외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노인단독가구	보유비율(%)	19.0	28.7	5.4	12.2	10.9	0.3	57.3	1.1
	평균(보유자)	95,415,216	84,322,898	12,313,231	14,485,879	20,745,766	6,839,167	82,188,927	28,302,441
	평균(전체)	18,169,520	24,241,997	661,091	1,766,197	2,266,068	21,706	47,126,578	299,418
노인부부가구	보유비율(%)	27.5	54.1	19.3	5.9	9.3	0.5	75.3	2.2
	평균(보유자)	131,942,191	137,510,621	12,083,418	25,215,154	52,843,601	48,998,896	158,979,973	65,736,117
	평균(전체)	36,245,151	74,381,652	2,338,080	1,488,775	4,937,324	263,926	119,654,908	1,416,316
동거가구	보유비율(%)	16.9	34.8	16.3	3.6	4.9	0.3	53.1	1.7
	평균(보유자)	133,212,749	134,636,527	12,044,610	25,798,011	59,846,848	29,464,571	141,826,545	44,656,581
	평균(전체)	22,502,683	46,873,164	1,958,401	922,442	2,923,654	73,705	75,254,049	755,666
전체	보유비율(%)	20.7	39.4	14.6	6.4	7.8	0.4	61.1	1.7
	평균(보유자)	124,164,852	126,855,086	12,085,099	20,357,154	43,703,694	33,762,528	134,706,746	50,595,215
	평균(전체)	25,745,426	49,938,279	1,758,945	1,307,013	3,393,250	120,549	82,263,461	850,699

반면에, 이자소득과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 단독가구의 보유자 평균금액은 약 14만원과 16만원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지만 보유비율이 5.1%와 76.2%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사적이전의 보유비율은 11.3%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전소득은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보유비율이 크게 낮았다. 이러한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총소득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보유비율이 동거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타 가구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가구 전체가 소득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과 배우자 자신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과 부채항목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지만,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노인단독가구의 보유자 평균은 가장 낮았지만 보유비율에 있어서는 각각 12.2%와 10.9%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로 인해 개인총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유비율은 '노인부부가구 > 노인단독가구 >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 순서이지만, 보유자 평균소득은 '노인부부가구 >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 > 노인단독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4. 연령 구성

다음으로 가구의 노인과 배우자의 연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노인단독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세 이상의 노인부부가 16%, 65~69세의 노인단독이 1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64세 이하의 배우자가 포함된 가구는 각각 9%와 2.3%로 나타나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표 3-27〉 연령 구성 분포

(단위: %)

구분	65~69세			70세 이상				계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단독	노인부부			
		배우자 64세이하	배우자 65~69세		배우자 64세이하	배우자 65~69세	배우자 70세이상	
비율(%)	14.6	9.0	8.2	38.4	2.3	11.5	16.0	100.0

가구의 연령구성에 따른 소득 항목별 보유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대가 낮거나 64세 이하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70세 이상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65~69세 노인과 64세 이하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의 보유비율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0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와 65~69세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에서 16.4%로 높았고 평균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타자영업 및 총 사업소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반면, 농림어업 소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게 구성된 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28〉 연령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단위: %, 원)

연령 구성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65~69세	노인단독	보유비율(%)	5.3	3.0	8.3	4.2	6.4	10.5
		평균(보유자)	1,306,701	276,757	934,168	326,047	1,083,438	788,986
		평균(전체)	69,536	8,346	77,882	13,736	69,186	82,922
	배우자 64세 이하	보유비율(%)	19.8	5.9	25.0	7.3	17.4	24.3
		평균(보유자)	1,678,374	634,235	1,480,570	829,470	1,094,384	1,034,045
		평균(전체)	332,304	37,308	369,611	60,693	190,771	251,464
	배우자 65~69세	보유비율(%)	13.1	3.5	16.4	10.6	12.5	22.5
		평균(보유자)	1,338,572	516,500	1,176,765	1,426,006	1,233,779	1,364,035
		평균(전체)	175,289	18,037	193,326	151,655	154,712	306,367
70세이상	노인단독	보유비율(%)	1.4	1.5	2.9	3.2	2.3	5.4
		평균(보유자)	1,496,909	219,073	843,303	275,934	428,913	346,694
		평균(전체)	21,533	3,300	24,832	8,872	9,727	18,599
	배우자 64세 이하	보유비율(%)	11.4	5.3	16.4	11.4	9.6	20.2
		평균(보유자)	1,819,195	454,556	1,413,046	471,828	1,414,806	943,332
		평균(전체)	207,452	23,924	231,376	53,805	136,516	190,321
	배우자 65~69세	보유비율(%)	7.6	3.4	11.0	12.6	9.4	21.2
		평균(보유자)	1,859,949	303,502	1,390,580	465,873	1,027,389	734,634
		평균(전체)	142,268	10,242	152,510	58,693	97,076	155,769
	배우자 70세 이상	보유비율(%)	4.2	2.1	6.3	11.5	6.0	16.9
		평균(보유자)	2,123,956	324,151	1,522,242	473,378	1,293,916	784,731
		평균(전체)	88,713	6,967	95,680	54,517	78,181	132,698
전체	보유비율(%)		6.0	2.7	8.6	6.9	6.7	13.2
	평균(보유자)		1,635,071	378,315	1,260,339	577,050	1,055,827	835,083
	평균(전체)		98,079	10,168	108,246	40,008	70,530	110,538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노인단독가구에서 대체로 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8~9.5%를 나타내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은 3.9~7.8%로 나타났으

며, 70세 이상인 노인부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개인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대가 낮거나 64세 이하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9〉 연령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단위: %, 원)

연령 구성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65~69세	노인부부	보유비율(%)	3.6	1.6	5.2	58.2	5.8	60.8	68.0
		평균(보유자)	1,459,756	75,759	1,047,035	208,774	301,773	228,624	526,463
		평균(전체)	53,082	1,243	54,325	121,468	17,531	138,999	358,135
	배우자 64세이하	보유비율(%)	8.6	1.1	9.5	73.2	3.9	74.2	86.7
		평균(보유자)	2,240,880	4,276,935	2,523,179	457,398	483,512	476,905	1,404,296
		평균(전체)	192,902	46,022	238,924	335,010	19,077	354,086	1,216,922
	배우자 65~69세	보유비율(%)	8.3	1.0	9.2	73.3	4.6	74.9	84.8
		평균(보유자)	2,260,658	2,300,107	2,304,056	372,814	352,868	386,201	1,182,415
		평균(전체)	188,388	23,731	212,119	273,101	16,243	289,344	1,003,176
70세이상	노인단독	보유비율(%)	1.9	3.1	4.9	51.6	6.8	53.6	57.4
		평균(보유자)	2,174,701	132,685	912,054	116,601	230,012	141,436	289,749
		평균(전체)	40,852	4,064	44,916	60,165	15,687	75,852	166,426
	배우자 64세 이하	보유비율(%)	7.9	1.5	9.1	71.9	5.8	74.0	86.3
		평균(보유자)	971,049	1,953,221	1,160,788	318,581	415,000	342,573	907,326
		평균(전체)	76,662	28,556	105,218	229,155	24,269	253,424	782,635
	배우자 65~69세	보유비율(%)	6.3	1.8	8.0	70.5	5.7	72.0	80.6
		평균(보유자)	1,888,681	1,304,964	1,771,266	335,674	333,490	354,891	879,769
		평균(전체)	118,972	23,486	142,458	236,558	19,132	255,689	709,060
	배우자 70세 이상	보유비율(%)	7.4	1.7	9.0	63.0	7.8	66.1	74.9
		평균(보유자)	1,400,677	1,501,162	1,432,615	244,935	411,086	281,960	730,188
		평균(전체)	103,375	26,176	129,551	154,251	32,007	186,258	546,901
전체			보유비율(%)	4.8	2.1	6.8	60.7	6.2	70.0
			평균(보유자)	1,840,379	726,839	1,516,609	247,931	312,728	270,649
			평균(전체)	88,291	15,382	103,674	150,603	19,510	170,113

재산항목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항목에서 노인부부이면서 연령대가 낮거나 64세 이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에서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총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5~69세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와 65~69세 노인과 64세 이하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 70세 이상 노인과 65~69세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보유비율이 8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유자 평균재산가액도 약 1억 5천만원~1억 8천만원으로 높은 수준이

었다. 반면, 노인단독에서는 70세 이상(39.5%)과 65~69세(54.6%) 순서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보유자 평균재산가액도 약 8천만원~1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총부채의 경우 역시 소득과 마찬가지로 노인단독가구에서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구 가운데에는 연령 구성이 낮거나 64세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30〉 연령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재산 및 부채

(단위: %, 원)

연령 구성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외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등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65~69세	노인단독	보유비율(%)	17.9	29.4	10.4	8.6	6.7	0.2	54.6	1.5
		평균(보유자)	118,470,628	101,390,666	11,337,812	20,757,295	39,795,888	1,826,915	103,794,619	50,959,461
		평균(전체)	21,224,893	29,810,205	1,181,546	1,776,567	2,664,824	3,241	56,661,275	745,748
	배우자 64세이하	보유비율(%)	33.7	55.6	38.0	5.5	9.1	0.4	84.0	2.8
		평균(보유자)	155,361,066	157,317,984	12,266,844	32,684,658	66,687,072	12,392,365	181,443,392	54,815,410
		평균(전체)	52,381,421	87,461,576	4,663,865	1,781,947	6,075,508	53,339	152,417,656	1,533,573
	배우자 65~69세	보유비율(%)	29.3	62.2	32.7	4.2	9.2	0.4	85.6	2.5
		평균(보유자)	153,595,212	155,317,004	12,411,515	25,772,075	64,417,158	119,366,773	178,863,626	46,664,245
		평균(전체)	44,981,455	96,641,691	4,058,368	1,084,063	5,980,469	473,678	153,169,724	1,185,124
70세이상	노인단독	보유비율(%)	12.5	20.6	4.3	7.0	6.4	0.3	39.5	0.8
		평균(보유자)	86,971,430	85,218,844	11,369,039	13,960,480	18,010,580	7,232,300	78,612,442	35,131,359
		평균(전체)	10,891,667	17,536,997	484,853	980,470	1,152,141	18,359	31,064,487	279,434
	배우자 64세이하	보유비율(%)	28.9	51.8	24.6	7.9	8.8	0.9	78.7	3.8
		평균(보유자)	127,299,269	118,843,944	10,376,375	17,485,556	48,683,207	114,866,667	136,754,005	49,740,816
		평균(전체)	36,849,788	61,506,953	2,548,583	1,380,439	4,270,457	1,007,602	107,563,823	1,890,733
	배우자 65~69세	보유비율(%)	27.7	59.9	20.6	5.6	10.0	0.4	82.1	2.5
		평균(보유자)	119,661,381	137,886,923	12,109,536	28,309,747	55,560,774	7,376,875	152,862,387	47,882,821
		평균(전체)	33,179,449	82,592,561	2,492,739	1,576,302	5,562,327	33,192	125,436,570	1,211,882
	배우자 70세이상	보유비율(%)	25.1	56.1	14.7	5.1	8.8	0.6	75.5	2.0
		평균(보유자)	134,199,551	134,990,029	12,800,913	25,466,188	56,298,509	47,595,986	155,973,169	66,778,202
		평균(전체)	33,685,938	75,760,827	1,884,319	1,301,192	4,931,256	270,212	117,833,745	1,353,978
전체	보유비율(%)		20.7	39.4	14.6	6.4	7.8	0.4	61.1	1.7
	평균(보유자)		124,164,852	126,855,086	12,085,099	20,357,154	43,703,694	33,762,528	134,706,746	50,595,215
	평균(전체)		25,745,426	49,938,279	1,738,945	1,307,013	3,393,250	120,549	82,263,461	850,699

5. 시·도

시·도별 소득재산 항목의 보유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6.5%로 가장 높았고, 경북 8.4%, 부산 7.7%, 전남 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이 1.1%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1〉 시·도별 분포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비율(%)	16.5	7.7	4.9	4.6	2.2	2.3	1.1	16.5	4.5	4.2	6.2	4.7	7.5	8.4	7.2	1.4	100.0

시·도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특징은 소득재산 항목에 따라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와 경기도가 그 외의 8개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먼저,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서울이 11.1%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며 광역시와 경기도는 5.1~8.4%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지역은 3%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보유비율에 있어서 최저는 전남으로 1.7%였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가장 낮았다. 보유자의 평균소득은 서울이 약 206만원이고 충북이 약 8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경남과 제주 는 보유비율은 낮지만 평균소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 근로소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 중 농림어업 소득의 경우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경우 서울과 광역시 지역은 1~2%대로 매우 낮은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남 22.6% 등 보유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총 사업소득의 보유비율 역시 높은 반면 보유자 평균소득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산소득 중 임대소득은 서울 및 광역시 경기도 이외에 경남, 제주에서 보유비율이 높았고 평균금액도 높게 나타났다. 개인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유비율은 울산지역이 45.25%로 가장 낮았고, 경남이 80.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보유자의 평균 총소득은 서울이 약 13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충북이 각각 약 36만원과 39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재산항목별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가액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경우 시·도별 보유비율의 범위는 13.1%(제주)~26.9%(광주)였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25~35%인 반면 나머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4.3%(강원)~57.7%(전남)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도 보유자 평균가격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부동산 가격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토지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가액을 나타냈다. 그밖에 임차보증금과 개인총재산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금융재산의 경우 뚜렷하게 시·도별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3-32〉 시·도 구분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시·도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서울	보유비율(%)	11.1	3.7	14.6	0.1	8.0
	평균(보유자)	2,057,473	424,841	1,672,580	250,000	1,550,208
	평균(전체)	228,788	15,692	244,479	98	124,260
부산	보유비율(%)	7.6	1.4	9.0	0.1	9.6
	평균(보유자)	1,714,702	240,938	1,492,247	3,000,000	1,366,718
	평균(전체)	130,561	3,261	133,822	2,538	131,815
대구	보유비율(%)	7.3	2.1	9.3	0.4	8.5
	평균(보유자)	1,397,369	540,833	1,221,551	850,000	764,609
	평균(전체)	102,065	11,492	113,557	3,386	64,987
인천	보유비율(%)	6.2	2.5	8.4	0.8	7.0
	평균(보유자)	1,164,489	361,778	962,492	535,000	463,663
	평균(전체)	71,661	9,108	80,769	4,490	32,424
광주	보유비율(%)	5.1	0.6	5.7	1.5	6.9
	평균(보유자)	908,725	196,000	833,702	382,136	1,446,123
	평균(전체)	46,114	1,170	47,285	5,704	99,286
대전	보유비율(%)	6.5	1.1	7.6	0.3	6.5
	평균(보유자)	1,205,524	362,500	1,080,631	1,300,000	1,290,217
	평균(전체)	78,325	4,096	82,421	3,672	83,828
울산	보유비율(%)	5.6	2.3	7.9	2.3	7.9
	평균(보유자)	1,221,384	257,500	945,988	738,105	576,190
	평균(전체)	69,005	5,819	74,824	16,680	45,574
경기	보유비율(%)	8.4	2.4	10.8	1.1	5.3
	평균(보유자)	1,521,287	546,574	1,310,610	488,182	1,325,074
	평균(전체)	128,416	13,090	141,507	5,367	69,713
강원	보유비율(%)	3.3	3.2	6.4	4.9	9.0
	평균(보유자)	1,647,174	369,091	1,045,568	366,649	751,804
	평균(전체)	54,826	11,751	66,577	18,041	67,456
충북	보유비율(%)	3.9	3.3	7.1	10.8	3.4
	평균(보유자)	816,833	230,000	548,931	414,115	401,136
	평균(전체)	31,611	7,477	39,088	44,873	13,661
충남	보유비율(%)	2.3	2.8	5.0	14.8	5.5
	평균(보유자)	953,239	303,148	607,422	1,283,816	642,457
	평균(전체)	21,845	8,526	30,371	189,898	35,469
전북	보유비율(%)	3.0	3.2	6.1	14.7	4.5
	평균(보유자)	1,229,061	439,935	844,496	467,854	645,230
	평균(전체)	37,193	13,918	51,111	68,859	29,288
전남	보유비율(%)	1.7	3.9	5.6	22.6	5.4
	평균(보유자)	1,019,383	294,453	525,657	353,321	374,842
	평균(전체)	17,763	11,542	29,305	79,713	20,244
경북	보유비율(%)	2.2	1.8	4.0	15.6	4.5
	평균(보유자)	1,221,185	257,271	799,786	694,143	847,161
	평균(전체)	27,284	4,757	32,041	108,560	38,507
경남	보유비율(%)	3.5	2.5	6.0	16.7	9.3
	평균(보유자)	2,123,745	304,411	1,384,084	377,617	768,789
	평균(전체)	74,956	7,714	82,669	63,221	71,661
제주	보유비율(%)	3.2	4.1	7.2	8.6	4.1
	평균(보유자)	2,672,971	250,222	1,310,175	597,368	3,392,129
	평균(전체)	84,664	10,190	94,854	51,357	138,141
전체	보유비율(%)	6.0	2.7	8.6	6.9	6.7
	평균(보유자)	1,635,071	378,315	1,260,339	577,050	1,055,827
	평균(전체)	98,079	10,168	108,246	40,008	70,530

시·도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서울	보유비율(%)	8.6	1.5	9.9	53.8	5.5	56.1	66.3
	평균(보유자)	2,893,459	3,359,453	2,995,918	357,260	434,630	385,395	1,336,524
	평균(전체)	248,985	48,841	297,826	192,317	24,080	216,397	885,940
부산	보유비율(%)	6.8	1.9	8.7	62.8	7.0	65.0	71.7
	평균(보유자)	1,338,739	51,129	1,051,215	251,346	319,076	277,321	757,272
	평균(전체)	90,608	995	91,603	157,782	22,406	180,188	542,648
대구	보유비율(%)	6.2	2.0	8.2	41.0	10.4	45.9	57.9
	평균(보유자)	681,783	93,496	539,456	479,828	313,122	499,105	792,135
	평균(전체)	42,555	1,862	44,417	196,902	32,435	229,336	458,660
인천	보유비율(%)	5.2	1.5	6.6	62.4	6.0	63.4	69.4
	평균(보유자)	2,498,901	1,369,539	2,287,750	199,848	349,359	229,922	599,212
	평균(전체)	129,314	21,070	150,384	124,660	21,010	145,671	415,677
광주	보유비율(%)	4.2	0.6	4.8	40.0	7.5	45.7	53.7
	평균(보유자)	439,584	324,805	425,236	520,106	421,389	524,372	771,409
	평균(전체)	18,371	1,939	20,310	208,042	31,447	239,489	414,488
대전	보유비율(%)	5.4	1.4	6.8	65.8	4.5	66.1	70.9
	평균(보유자)	976,535	46,737	782,827	256,720	285,250	275,127	577,501
	평균(전체)	52,413	660	53,073	168,971	12,893	181,864	409,471
울산	보유비율(%)	6.2	0.6	6.8	32.2	5.6	34.5	45.2
	평균(보유자)	704,167	33,333	648,264	267,918	221,902	286,727	619,568
	평균(전체)	43,762	188	43,950	86,279	12,537	98,815	280,031
경기	보유비율(%)	4.8	1.4	6.1	59.9	5.4	61.8	66.9
	평균(보유자)	2,665,608	1,364,142	2,406,123	236,439	363,108	261,064	787,778
	평균(전체)	127,681	18,746	146,427	141,659	19,674	161,333	527,350
강원	보유비율(%)	4.6	2.2	6.7	60.6	4.2	61.8	69.0
	평균(보유자)	555,667	80,444	412,782	271,274	382,845	292,193	524,141
	평균(전체)	25,733	1,746	27,479	164,492	16,067	180,559	361,817
충북	보유비율(%)	3.3	2.5	5.7	64.4	6.8	67.8	75.1
	평균(보유자)	390,873	64,624	249,792	242,413	344,096	264,804	391,254
	평균(전체)	12,706	1,601	14,307	156,105	23,437	179,542	293,743
충남	보유비율(%)	2.7	2.2	4.8	63.1	5.4	64.9	73.8
	평균(보유자)	630,342	165,224	431,709	184,040	245,146	199,480	554,001
	평균(전체)	17,072	3,614	20,686	116,175	13,279	129,454	408,576
전북	보유비율(%)	3.0	3.2	5.9	75.8	6.2	76.3	80.3
	평균(보유자)	769,828	61,869	426,958	200,952	180,982	214,178	422,452
	평균(전체)	23,296	1,957	25,253	152,303	11,202	163,506	339,356
전남	보유비율(%)	1.8	3.8	5.6	69.0	7.1	71.2	77.1
	평균(보유자)	711,263	37,318	259,039	161,584	220,539	178,504	355,751
	평균(전체)	13,011	1,430	14,441	111,476	15,561	127,037	274,250
경북	보유비율(%)	2.0	3.4	5.4	60.6	7.0	62.4	69.1
	평균(보유자)	421,827	42,383	183,320	198,065	207,535	215,512	471,627
	평균(전체)	8,450	1,437	9,886	119,938	14,550	134,488	325,924
경남	보유비율(%)	3.0	2.8	5.7	73.5	6.1	74.8	80.4
	평균(보유자)	1,246,641	1,150,585	1,219,164	180,373	272,683	199,434	545,521
	평균(전체)	37,230	32,279	69,509	132,545	16,534	149,079	438,391
제주	보유비율(%)	4.1	1.4	5.4	71.5	8.1	76.0	78.7
	평균(보유자)	1,194,907	12,139	899,215	215,716	207,718	225,131	644,557
	평균(전체)	48,661	165	48,826	154,222	16,918	171,140	507,479
전체	보유비율(%)	4.8	2.1	6.8	60.7	6.2	62.9	70.0
	평균(보유자)	1,840,379	726,839	1,516,609	247,931	312,728	270,649	707,646
	평균(전체)	88,291	15,382	103,674	150,603	19,510	170,113	495,223

사 도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외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서울	보유비율(%)	20.9	26.8	14.9	11.4	6.7	0.0	57.1	2.0
	평균(보유자)	296,796,753	236,131,659	15,920,000	24,434,928	57,111,090	-	235,211,840	54,568,657
	평균(전체)	61,924,981	63,370,500	2,370,798	2,784,334	3,837,327	-	134,287,939	1,114,959
부산	보유비율(%)	22.2	29.9	13.0	12.5	7.0	0.1	59.9	1.4
	평균(보유자)	105,573,600	140,443,292	13,546,750	15,919,432	42,112,645	9,714,500	120,316,532	38,285,080
	평균(전체)	23,401,255	41,942,878	1,764,974	1,993,296	2,957,148	8,219	72,067,770	550,631
대구	보유비율(%)	25.2	33.6	17.7	8.2	10.1	0.3	60.7	1.6
	평균(보유자)	127,459,340	134,874,134	12,231,223	14,677,726	66,985,415	140,413,750	144,964,816	61,433,989
	평균(전체)	32,161,055	45,316,276	2,160,362	1,208,525	6,760,812	372,945	87,979,975	979,028
인천	보유비율(%)	19.0	24.6	13.8	6.9	6.4	0.0	51.9	2.4
	평균(보유자)	103,943,025	207,742,584	9,779,773	14,395,857	50,131,242	-	147,381,611	41,715,641
	평균(전체)	19,770,981	51,136,636	1,354,122	986,569	3,225,227	-	76,473,535	991,840
광주	보유비율(%)	26.9	40.3	19.4	2.7	6.9	1.8	62.7	0.9
	평균(보유자)	78,093,736	74,363,542	7,689,289	11,260,222	76,522,895	88,245,836	95,038,866	30,000,000
	평균(전체)	20,980,407	29,967,397	1,491,952	302,513	5,253,811	1,580,522	59,576,602	268,657
대전	보유비율(%)	15.3	31.6	13.8	7.6	8.5	0.3	55.1	1.1
	평균(보유자)	81,437,518	121,594,643	13,942,051	13,059,593	49,821,017	7,439,000	105,405,461	31,500,000
	평균(전체)	12,422,672	38,470,621	1,929,832	996,071	4,222,120	21,014	58,062,330	355,932
울산	보유비율(%)	13.0	32.2	18.1	6.8	4.5	0.0	53.1	0.6
	평균(보유자)	90,190,715	116,242,522	11,376,692	19,216,833	41,348,943	-	102,400,616	6,240,000
	평균(전체)	11,719,697	37,434,033	2,056,803	1,302,836	1,868,879	-	54,382,248	35,254
경기	보유비율(%)	18.5	28.0	14.5	7.7	6.8	0.1	53.9	2.5
	평균(보유자)	221,931,983	241,550,484	12,295,709	29,564,896	50,355,633	1,000,000	214,919,416	72,452,196
	평균(전체)	40,953,291	67,524,124	1,786,185	2,275,116	3,400,537	785	115,940,038	1,792,104
강원	보유비율(%)	17.8	44.3	17.4	2.5	7.8	0.4	60.3	1.0
	평균(보유자)	39,363,058	97,293,085	12,227,954	16,147,294	38,637,649	135,333,333	93,159,789	76,000,000
	평균(전체)	7,006,738	43,084,926	2,123,523	397,256	3,019,440	587,554	56,219,438	769,899
충북	보유비율(%)	26.3	48.3	14.4	5.6	11.6	0.6	69.3	2.0
	평균(보유자)	45,116,323	85,081,832	10,146,453	16,722,528	34,488,499	1,325,000	85,609,096	25,522,122
	평균(전체)	11,872,717	41,092,154	1,460,712	931,906	4,004,083	8,204	59,369,776	513,603
충남	보유비율(%)	19.6	55.3	14.9	2.2	7.1	0.6	68.1	1.8
	평균(보유자)	31,187,354	96,480,182	9,561,861	13,462,381	39,793,563	12,833,333	94,078,315	26,241,351
	평균(전체)	6,107,523	53,365,601	1,424,319	294,490	2,818,711	80,208	64,090,852	464,691
전북	보유비율(%)	19.9	50.5	16.1	4.5	8.9	0.8	68.6	1.5
	평균(보유자)	33,781,699	71,731,516	10,996,596	11,106,212	39,748,810	1,819,167	71,085,185	34,445,014
	평균(전체)	6,737,753	36,211,096	1,769,741	504,133	3,553,883	15,014	48,791,619	521,176
전남	보유비율(%)	22.4	57.7	9.1	1.7	10.9	0.8	67.9	1.0
	평균(보유자)	20,547,504	51,885,737	8,572,781	11,874,700	23,095,796	42,796,667	56,449,069	34,083,500
	평균(전체)	4,599,920	29,920,172	776,628	206,876	2,514,786	335,514	38,353,897	356,274
경북	보유비율(%)	19.3	52.6	13.4	2.6	7.8	0.7	65.1	0.8
	평균(보유자)	35,907,586	76,565,608	10,028,883	12,362,618	26,776,951	13,333,333	78,415,424	54,551,019
	평균(전체)	6,915,945	40,288,374	1,344,396	323,828	2,083,569	92,450	51,048,562	462,297
경남	보유비율(%)	25.0	55.6	15.5	2.7	7.3	0.5	69.4	1.3
	평균(보유자)	54,446,788	78,035,805	13,289,804	12,371,667	42,627,917	3,849,667	90,040,370	42,532,192
	평균(전체)	13,599,379	43,361,072	2,056,612	335,882	3,124,761	20,903	62,498,610	538,869
제주	보유비율(%)	13.1	48.9	17.6	2.3	8.1	0.0	61.1	2.3
	평균(보유자)	89,767,329	157,511,400	7,934,825	8,325,800	19,872,961	-	150,542,846	17,868,491
	평균(전체)	11,779,423	76,973,897	1,400,263	188,367	1,618,612	-	91,960,562	404,265
전체	보유비율(%)	20.7	39.4	14.6	6.4	7.8	0.4	61.1	1.7
	평균(보유자)	124,164,852	126,855,086	12,085,099	20,357,154	43,703,694	33,762,528	134,706,746	50,595,215
	평균(전체)	25,745,426	49,988,279	1,758,945	1,307,013	3,393,250	120,549	82,263,461	850,699

6. 지 역

앞서 살펴본 시·도 구분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가 39.3%, 중소도시가 40.6%, 농어촌 지역이 2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33〉 지역별 분포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비율(%)	39.3	40.6	20.1	100.0

이러한 분포에 따라 지역별 소득재산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앞서 시·도별 분포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상시 근로소득과 총 근로소득의 경우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순으로 보유비율과 보유자 평균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시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없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농림어업 사업소득이 자영업 사업소득, 근로소득과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어 농어촌 지역이 보유비율이 22.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의 경우 보유비율은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은 6~6.5%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음으로 재산항목의 경우, 건축물은 보유비율에서는 19.5~22.3%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보유자 평균가액은 대도시 약 1억8천만원, 중소도시 1억2천만원에 비해 농어촌은 1,800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토지의 경우 보유비율에 있어서는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가액에서는 대도시 지역이 약 1억8천만원으로 농어촌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총부채의 경우에는 보유비율이 1.2~1.9%, 보유자 평균부채가 약 4,400만원~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34〉 지역 구분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지역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대도시	보유비율(%)	8.6	2.5	11.0	0.3	8.1	8.5
	평균(보유자)	1,762,586	401,477	1,469,906	722,529	1,250,343	1,228,737
	평균(전체)	151,802	10,201	162,003	2,503	101,496	104,000
중소도시	보유비율(%)	5.4	2.7	8.0	5.8	5.6	11.2
	평균(보유자)	1,527,131	403,117	1,159,389	487,678	1,144,278	830,429
	평균(전체)	82,211	10,947	93,159	28,201	64,526	92,727
농어촌	보유비율(%)	2.1	2.9	4.9	22.2	6.0	26.8
	평균(보유자)	1,170,662	291,833	673,408	619,819	366,013	594,828
	평균(전체)	24,681	8,519	33,201	137,715	21,844	159,560
전체	보유비율(%)	6.0	2.7	8.6	6.9	6.7	13.2
	평균(보유자)	1,635,071	378,315	1,260,339	577,050	1,055,827	835,083
	평균(전체)	98,079	10,168	108,246	40,008	70,530	110,538

지역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대도시	보유비율(%)	7.0	1.6	8.5	54.3	6.5	56.8	65.6
	평균(보유자)	2,102,398	1,519,784	2,012,735	321,521	364,974	349,203	973,618
	평균(전체)	148,115	23,570	171,685	174,579	23,846	198,425	638,851
중소도시	보유비율(%)	3.8	2.0	5.8	61.1	6.0	63.1	68.8
	평균(보유자)	1,731,062	715,386	1,399,473	231,103	316,451	253,608	624,583
	평균(전체)	66,643	14,285	80,928	141,098	19,007	160,106	429,426
농어촌	보유비율(%)	2.3	3.5	5.6	72.8	6.1	74.1	81.1
	평균(보유자)	635,637	43,612	286,188	168,668	195,852	181,762	427,426
	평균(전체)	14,638	1,514	16,152	122,767	12,006	134,774	346,461
전체	보유비율(%)	4.8	2.1	6.8	60.7	6.2	62.9	70.0
	평균(보유자)	1,840,379	726,839	1,516,609	247,931	312,728	270,649	707,646
	평균(전체)	88,291	15,382	103,674	150,603	19,510	170,113	495,223

지역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외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대도시	보유비율(%)	21.2	29.2	15.0	9.8	7.2	0.2	57.5	1.7
	평균(보유자)	184,380,508	176,271,203	13,459,767	19,668,633	55,477,627	82,745,602	171,448,478	48,651,229
	평균(전체)	39,121,157	51,447,576	2,023,073	1,937,333	3,999,954	136,521	98,665,615	850,855
중소도시	보유비율(%)	19.5	39.1	14.9	5.7	7.7	0.4	60.4	1.9
	평균(보유자)	120,734,671	134,319,508	11,912,562	22,285,019	45,088,952	35,527,273	136,951,717	54,529,637
	평균(전체)	23,529,760	52,461,853	1,771,661	1,270,887	3,493,313	124,856	82,652,330	1,019,164
농어촌	보유비율(%)	22.3	60.0	13.0	1.1	8.9	0.7	69.4	1.2
	평균(보유자)	17,693,175	69,737,454	9,355,872	12,437,143	22,473,554	10,777,522	70,887,659	43,532,301
	평균(전체)	3,948,396	41,846,996	1,213,866	141,194	1,997,325	80,403	49,228,180	508,324
전체	보유비율(%)	20.7	39.4	14.6	6.4	7.8	0.4	61.1	1.7
	평균(보유자)	124,164,852	126,855,086	12,085,099	20,357,154	43,703,694	33,762,528	134,706,746	50,595,215
	평균(전체)	25,745,426	49,938,279	1,758,945	1,307,013	3,393,250	120,549	82,263,461	850,699

7.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수급가구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임시일용 근로소득,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등 이전소득에서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직의 근로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은 7.2%로 비수급가구에 비해 약 3배 높았으나 보유자 평균소득은 약 18만원으로 비수급가구 4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모두 보유비율은 86.5%와 15.7%로 월등히 높지만, 평균소득은 각각 약 9만원과 11만원으로 비수급가구 약 27만원과 37만원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이자소득과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 재산항목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수급가구에서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지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실사에 의해 구축된 실사자료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행정자료 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축된 것이므로 수급가구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상세히 정리된 반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비수급가구에 대한 자료가 실사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3-35〉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분포

(단위: %)

구분	수급	비수급	계
비율(%)	8.6	91.4	100.0

〈표 3-36〉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단위: %,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임시일용)	근로소득 합계	사업소득 (농림어업)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합계
비수급	보유비율(%)	6.5	2.3	8.7	6.9	6.9	13.5
	평균(보유자)	1,646,316	439,372	1,349,262	622,923	1,110,842	887,961
	평균(전체)	107,002	9,925	116,927	42,876	76,776	119,652
수급	보유비율(%)	0.7	7.2	7.8	7.5	4.2	10.7
	평균(보유자)	491,870	176,064	207,077	128,043	99,936	128,681
	평균(전체)	3,338	12,747	16,085	9,560	4,221	13,780
전체	보유비율(%)	6.0	2.7	8.6	6.9	6.7	13.2
	평균(보유자)	1,635,071	378,315	1,260,339	577,050	1,055,827	835,083
	평균(전체)	98,079	10,168	108,246	40,008	70,530	110,538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재산소득 (임대)	재산소득 (이자)	재산소득 합계	공적이전	사적이전	이전소득 합계	개인총소득
비수급	보유비율(%)	5.2	0.6	5.7	58.3	5.3	60.4	67.9
	평균(보유자)	1,864,438	2,725,281	1,975,247	269,942	369,671	293,239	779,003
	평균(전체)	96,546	16,261	112,807	157,424	19,773	177,197	528,558
수급	보유비율(%)	0.8	18.3	18.8	86.5	15.7	88.6	92.6
	평균(보유자)	86,530	33,165	35,707	90,385	106,584	107,099	152,590
	평균(전체)	653	6,053	6,705	78,184	16,719	94,903	141,312
전체	보유비율(%)	4.8	2.1	6.8	60.7	6.2	62.9	70.0
	평균(보유자)	1,840,379	726,839	1,516,609	247,931	312,728	270,649	707,646
	평균(전체)	88,291	15,382	103,674	150,603	19,510	170,113	495,223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건축물 합계	토지 합계	자동차 외 합계	임차보증금 합계	금융재산 합계	동산 합계	개인총재산	개인총부채
비수급	보유비율(%)	20.4	41.3	15.7	4.3	5.5	0.3	60.3	1.6
	평균(보유자)	136,851,125	131,773,060	12,234,099	28,469,860	62,816,150	48,583,392	147,823,302	55,500,213
	평균(전체)	27,967,090	54,438,991	1,915,326	1,219,444	3,458,056	127,688	89,126,594	871,256
수급	보유비율(%)	23.9	18.7	2.9	29.1	31.7	1.4	69.3	2.9
	평균(보유자)	9,027,917	11,520,669	3,443,099	7,683,679	8,520,434	3,297,417	13,560,576	22,068,777
	평균(전체)	2,158,258	2,154,695	98,671	2,236,727	2,705,206	44,761	9,398,318	632,439
전체	보유비율(%)	20.7	39.4	14.6	6.4	7.8	0.4	61.1	1.7
	평균(보유자)	124,164,852	126,855,086	12,085,099	20,357,154	43,703,694	33,762,528	134,706,746	50,595,215
	평균(전체)	25,745,426	49,938,279	1,758,945	1,307,013	3,393,250	120,549	82,263,461	850,699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설계상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본 장에서는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³¹⁾. 이를 위하여 우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적인 특성을 검토하고, 정책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해야 한 기본원리의 검토와 정책수단선택의 기본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과 지급방법과 관련된 대안들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사항을 점검하며, 제도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기반마련 방안 및 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의 하위법령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다른 원칙보다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작성될 것이다.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특성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대 노인빈곤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이러한 목적의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200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시 법안 제정이유를 통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적인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

31) 즉 제3장의 내용이 다양한 정책적 대안마련과 그에 대한 정당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면 본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그러한 합의결과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 토대가 마련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역할을 갖고 있음.

팔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현 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현재 정부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후세대에 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종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노인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³²⁾

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노인의 60%를 선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제도이며 노인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수급여부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기초한 소득인정액의 수준만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성숙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소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경로연금보다 연령, 자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서 훨씬 관대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1933년 7월 이전 출생자로서 현재 74세 이상 노인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수급가능하며, 자산기준도 훨씬 관대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노인부부기준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로연금의 수급비율이 65세 이상 노인의 13~14% 수준인데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60%가 수급하도록 하고 있어 경로연금 수급자의 4배 이상의 노인이 수급을 하게 된다. 즉 경로연금이 갖고 있는 선정대상의 포괄성을 대폭 개선한 제도인 것이다. 또한 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액은 경로연금 급여액 35,000~50,000원 보다 높은 80,000~90,000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32) 국회 홈페이지의 법률 정보 안내에서 강기정 대표 의원 발의, 기초노령연금법의 법안 제정이유를 참조하였음(<http://www.assembly.go.kr/index.jsp>).

라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경로연금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경로연금의 확대개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보장제도나 경로연금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노인과 그 배우자라는 부부단위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³³⁾ 기존의 정책과 큰 차이점을 갖는다. 즉 사적인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제도인 것이다. 단, 부부단위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이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지급액에 있어서도 부부가 대상자일 경우는 각각의 연금액의 16.5%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행 경로연금에서도 부부일 경우 생활비 절감 등의 근거에 의하여 부부가 동시지급대상일 경우 감액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한편,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부록2)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 60%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전제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2008년 8~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급액은 A값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서 자동 인상되게 된다. 또한 제도의 시행시기는 2008년 1월이며 1단계에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70세 이상을, 2단계인 7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확대하는 단계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33) 개인단위의 접근과 가구를 단위로 한 접근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부부가구안	개별가구안
가 구 범 위	○ 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배우자 가구 (동거자녀 제외)	○ 65세 이상 노인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자녀 모두를 포함한 가구
수급권자 선정요인	○ 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 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동거자녀의 소득·재산 합산
장 점	○ 연금사각지대 해소 목적에 부합 ○ 연금제도와의 조화 가능성 높음 - 향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요건 등 부과 가능 - 연금 급여수준 감안,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별도의 선정기준 설정 가능 ○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	○ 저소득 가구의 노인이 선정되어 제도 수용성 높음 (동거자녀가 고소득자인 경우 제외) ○ 선정기준 설정이 상대적으로 용이 (최저생계비의 ○○○%)
단 점	○ 동거자녀가 부자인 경우에도 선정 가능 (재원의 효율성 비판)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미흡 - 저소득층 대책으로 변질 및 기초수급제도와 구분 곤란 ○ 주민등록 분리시 대책이 사실상 곤란 (가족해체 가속화 비난) ○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40~90% 범위 내에서 국고 차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간의 부담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되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다.

제2절 정책대안의 선택 기반

1. 정책대안의 선택원리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남아있는 과제는 법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설계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정책목표와 정책설계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구성을 보면 정책목표와 더불어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정책수단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정정길, 2000: 61-63 참조). 실질적 정책수단은 상위의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정책수단으로서, 하위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목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구적 정책목표 또는 도구적 정책수단이라고도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질적 정책수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및 자산이 적은 가구를 우선하여 전 노인의 60%정도를 대상으로 선별하고 이들에게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질적 정책수단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실행적 정책수단이라 한다. 실행적 정책수단은 첫째, 순응확보수단, 둘째, 집행기구, 집행요원, 자금 공권력 등이 있다. 이러한 실행적 정책수단은 거의 모든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에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게 되면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이 일단락된다고 본다. 사실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에서 정책학자들이나 정책분석가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여온 것은 정책목표의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특히 정책분석가들은 정책목표가 이미 결정이 되었든지 또는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최선의 정책수단을 위한 분석적 작업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정책의 목적이나 목표는 이미 정하여진 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설계 단계에서 정책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책분석이 정책수단의 선택에 초점을 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수단 선택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에 유용하다. 정정길이 지적한 정책수단 선택의 중요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정정길, 2000: 327-328).

첫째, 정책수단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결정과 실현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정책수단은 달성될 정책목표 외에 많은 부수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정책목표와는 다른 독자적인 중요성도 가진다. 즉,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작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으로서만이 아닌 독자적 중요성을 지닌다.

셋째, 정책수단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책수단의 실현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사회적 희생이 정책비용이 되는데 정책비용이 과다하면 아무리 정책목표가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수단의 종류에 따라 정책비용과 정책목표달성 수준이 달라지고 동일한 정책수단이라고 하더라도 투입 정책비용의 크기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수준이 달라진다. 또한 정책수단의 종류, 정책수단의 실현수준에 따라 부작용의 종류, 크기 등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정책수단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실현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수준 및 기타 효과, 그리고 정책비용을 좌우하게 된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및 자산이 적은 가구를 우선하여 전 노인의 60% 정도를 대상으로 선별하고 이들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질적 정책수단을 전제로 하여 실행적 정책수단을 선택, 정책설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이 적은 노인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선별하고 이들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비교 분석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 정책대안은 다수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여러 대안 중 일부의 주요 정책대안을 골라 이 대안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대안 분석에 앞서 무수한 정책대안 중 주요 정책대안을 고르는 작업을 정책대안의 스크린이라고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기준이 이용된다. 첫째는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고 둘째는 소망성(desirability)의 특면에서 타 정책대안의 수월성(殊越性)

또는 지배(dominance) 또는 지배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정정길, 2000: 341). 실현가능성은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또는 재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반면 수월성은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기타 경제적 합리성 대 정치적 합리성 등에서 검토된다. 수월성의 가치들은 종종 상호 대립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국민의 정서 등을 반영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준을 먼저 적용하기도 한다.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를 따져보는 분석은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단계를 거친 대안에 대하여 다시 수월성 여부, 지배가능성여부를 평가하는 순서를 밟는다(노화준, 2002: 87). 그만큼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은 가장 우선되는 분석의 기준이 된다. 정책대안의 현실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행정적 실현가능성이다.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정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조직, 집행요원 및 전문인력 등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책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기구로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의 행정인력으로 집행이 어려우면 행정능력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재정적 실현가능성도 그렇지만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정치적 지지가 있으면 그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한다(정정길, 391). 하지만 실제 행정적 기반을 개선하는 과정은 수 많은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단지 해당 제도의 실행과 관련된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요인들과 연결되어 단순하게 행정능력을 높이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집행 인력의 부족이 문제가 된 경우,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력의 확충을 추진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공공인력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면 그 확충의 폭을 소규모로 한정하여 매우 느리게 추진될 수도 있다. 행정적 실현가능성의 융통성이 현실에서 그리 크지 않은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행정적 실현가능성이 정책대안의 선택에서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점은 재정적 실현 가능성 제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비교하여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더 복잡한 요인들이 관여하여 그 제약의 수준이 더 강하다.

특히, 정책 일선의 정책집행이 갖는 특징으로 이러한 고려가 더 중요하여 진다. 정책집행은 일선 집행담당자에 의하여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집행현장의 중요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크게 강조되었다(정정길, 673). 하지만 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다른 제도보다 현장의 집행 담당자의 자율성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자율성은 서비스의 제공에서는 긍정적인 특징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그 자

제로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를 논하기 어렵다. 단,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일선에서는 업무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나 전략은 정책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일선 집행담당자의 집행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정책 내용이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일선에서 정책을 당초의 목적과 설계와 같이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무시하고 제도의 집행을 추진한다면 제도의 목적달성이 왜곡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도 그 목적과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행적 정책수단의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며 그 선택을 위한 분석에서는 현실적 집행가능성, 행정적 기반을 우선 고려하고, 그 가능성이 인정된 선택대안에 대한 수월(殊越性) 또는 지배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는 대체로 일반적 효과성, 효율성 등 외에도 제도 집행의 규범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보다 폭넓은 고민을 요구한다.

2. 기초노령연금정책의 대안 선택 기반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정책대안을 선택함에 있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반, 즉, 대안 선택의 전제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선택의 기반을 확인하는 것은 대안 선택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안에 대한 각종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대안 선택의 기반은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집행 기반, 특히 행정적 집행 여건이다.

대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전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 선정에서 경제적 여건을 대변하는 지표로 소득인정액을 활용한다(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한편 소득인정액의 계산에서 동 조항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책단위가 가구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된다. 가구보다는 개인에 가까운 단위를 선택한 것이다. 둘째, 연금액은 국민연금 A급(「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로 하며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한다(제5조). 셋째,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즉, 신청을 전제로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에 따라 급여지급여부가 결정된다(제6조). 넷째,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와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받은 자는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즉, 공부상 자료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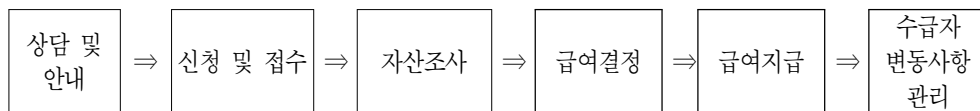
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위의 법적 규정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신청과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발하고 수급자의 자산조사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며, 급여액은 일정액의 정액급여로 매년 연금액에 연동하며, 단 부부수급의 경우 일정액의 감액을 적용한다. 한편 자산조사는 신청자에 대한 실사와 공부상 자료의 수집을 통한 조사 모두가 가능성을 갖는다.

두 가지 법률에 규정된 내용 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는 전제들이 있다. 하나의 전제는 적용 대상의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 시기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은 전 노인인구의 60%로, 그리고 시행 시기는 2008년 1월부터 단계적인 확대로 합의되었다. 2008년 1월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동년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단계적인 확대를 고려한다하여도 2008년 2008년 적용대상은 약 300만 명으로 추계되며 매년 65세 이상 신규진입은 대략 2008년 38만 명에서 2020년 약 62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는 정책이 집행되는 행정적 기반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는 제도는 대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그림 4-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상의 절차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을 기준으로 각 사례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여결정과 급여지급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도 한 사례의 위 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 약 3시간 넘게 소요된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일부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처리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측된다.

2008년 기준 기존의 경로연금수급자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³⁴⁾를 제외한 신규 수급자의

34) 이 두 집단은 법률에 따르면 기 신청자로 간주함. 이들 대상에 대한 자산조사 자료는 이미 수집된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필요시간은 별도로 추가 계산될 필요성이 없음. 하지만 사실 관리 등의 소요시간은 추가 계산하는 것이 정확할 것임.

규모는 약 2,400천명, 약 1,753가구 정도이다. 시군구 단위로 약 7,490세대, 읍면동단위로 약 489세대이다. 연간 1회의 자산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그 외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별도 가정하지 않는 경우에 전국적으로 27,924명 정도의 추가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부양의무자와 기타 가구원에 대한 자산조사를 제외한 추산결과도 추가 필요인력의 규모는 1,636명으로 추산된다.

결론적으로 신청자에 대한 일선 사무소의 실사를 전제로 할 경우 매우 큰 규모의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만 제도 집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사무소에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는 분석 및 평가가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인력의 증가는 거의 없었다. 약 5년 전 1850명 정도의 증원이 있었을 뿐이며 실질적인 채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정원의 수도 적지 않다. 공무원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압박이 된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이러한 분위기가 쉽게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다. 즉, 제도 집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의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설계에 중요한 전제가 된다.

한편, 자산조사에서 항상 소득파악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사를 감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조차 영세자영자와 일용직이 상당수인 빈곤층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행정자료의 활용에서도 실제 영세자영자와 일용직의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며 오히려 설문조사로 얻어진 자료보다도 공부상 행정자료가 더 취약하다는 분석결과도 있다(이현주 외, 2005: 281-308 참조).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문제는 근로의욕저하의 문제와 맞물려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빈곤층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숨겨진 근로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소득파악력이 높아지고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급여지급여부와 급여액에 반영할 경우 근로동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지적은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또한 파악하는 소득의 범주를 확대하면 할수록 이러한 부수적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인들의 소득은 주로 비공식부문에서 창출되며 조건으로 노인들의 노동은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건부과와 달리 사회적으로 강제된 노동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적 선택으로 장려될 근로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그

급여지급과 급여지급 결정과정에서 노인들의 근로활동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정책수단 선택방향

정책대안 선택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정책적 대안, 특히 실행적 정책수단의 선택 기반을 고려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책 수단 선택의 방향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정책대안의 선택에서 가장 앞서 검토하는 영역은 실행가능성이라는 점을 앞서 기술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실행가능성은 행정적 기반, 행정적 집행가능성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앞의 전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 과정은 일선 담당자의 가구방문과 실사를 전제로 할 경우, 매우 큰 규모의 전담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2008년 대상자 추계 규모를 고려한다면 필요한 공무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듯 하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설계에서 자산조사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져야만 한다. 그 방법은 현장 사무소 담당자의 신청 가구방문과 실사를 매개하지 않고 행정자료만으로 자산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수집할 수 있는 소득 범주가 한정되고 시차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성이 높은 행정자료의 선택이나 결합 등이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성을 갖게 된다.

행정자료의 활용으로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한다 하여도 이러한 방식의 조사가 갖는 한계-조사의 정확성 부족-에 대한 보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한다. 행정자료의 불완전성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보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는 이의신청과정을 두어 행정자료의 불완전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다른 하나는 엄정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행정자료의 불완전성에서 초래되는 부당이익을 막아야 한다.

현실적, 행정적 처리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안의 선택을 고려한 후 대안들의 수월성을 따져본다면, 근로동기의 제고여부와 형평성이 관건이 된다. 사회구성원 중 노인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들의 근로활동은 더 할 수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들의 근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선택되어야 하며 노인들이 자산을 처분하는 등 자산형성을 저해하는 행태로 적응하지 않도록 대안이 설계되어야 한다. 파악

하는 소득의 범위는 너무 넓지 않게 한정하여 신고소득과 재산중심으로 설계한다면 농어촌 노인의 근로활동과 도시의 비공식부문의 노인 근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인정액의 설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어 일정 수준까지의 자산보유자들이 자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고액재산가들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청장년층과 달리 소득은 거의 없지만 재산을 축적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고려가 특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중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전 노인의 60.9%에 이른다.

다음은 수급대상자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이다. 정책적 대안 선택의 전제 중 하나는 정책단위가 가구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형평성은 주로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차이반영과 관련된다.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경희 외, 2005)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전 노인 중 24.6%, 부부노인은 26.6%, 그리고 자녀동거노인은 43.5%에 이른다. 문제는 독거노인에 비하여 부부노인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2배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결국 자산조사의 기준과 급여지급액 설계에서 '독거노인 : 부부노인=1 : 2'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수급대상노인의 가구형태 별 적정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액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방식은 부부노인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차감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외국의 경우 미국의 SSI와 같이 노인소득보장 관련 제도에서 단독노인가구와 구별하여 부부의 급여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책대안 선택에서 고려될 몇 가지 추가적 고려사항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선정 기준 경계선 바로 위의 집단 간의 급여지급 후 생활격차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수급자와 기준 바로 위의 비수급자가 급여수급여부로 큰 생활상의 차이를 갖게 되고 이로써 비수급자의 제도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준의 주변에 있는 계층에 대한 단계적 급여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집단에 대한 급여액 차등 지원은 자산조사 정확성 전체와 정당성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위험성을 갖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고민하여 볼 일이다. 또 다른 검토사항은 국민연금가입 및 기타 사적인 저축동기의 저하유발에 대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자격요건이나 급여수준이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저하시키고 개인적인 노후 준비동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대안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소득을 가진 자의 총소득이 연금소득이 없는 자보다 다소 높은 선에서 유지되도록 정책대안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하의 기초노령연금제도 설계 및 추계는 위에서 살펴본 정책대안의 선택 기준을 전제로 한 검토이며 분석이다. 일부의 대안은 관련된 문제들의 해답으로 선택되었으며 일부의 대안은 선택이 완료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좀 더 고민하여볼 선택지를 제안하는 수준에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연금제도와 공공부조 등 관련 제도 간 관계에서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 현실을 고려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의 선택과 설계가 쉽지 않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원칙을 지키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선명한 답을 제공하기도 한다.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선의 집행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고 이후 수월성을 비교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과정이라 본다. 무리한 제도 설계가 종종 일선의 제도 집행을 왜곡하는 경우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수월성의 확보를 위한 세부적 검토는 이후로도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도의 확대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 짐작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기초노령연금 초기 설계에 가까우며 이후 제도적 보완에서 다양한 대안 선택의 기초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 본다.

제3절 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은 노인의 60%로 설정되어 있어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노인의 60%를 선정하는 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을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가 될 것인가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그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의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어진 법적 근거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제도적 기반 검토에 기초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소득·재산의 범위와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하여 소득인정액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1. 소득의 범위설정

소득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는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노인이 다른 인구집단과 달리 갖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정책적 선택은 노인의 소득은 행정자료를 통해서만 파악하며, 노인의 근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기초보장제도와 같이 급여를 신청한 신청자를 방문하여 행정자료를 통하여 파악되지 않는 소득까지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득을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급여대상자 선정에 기초로 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행정자료의 경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료파악을 기본으로 하는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한 자료도 고려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소득파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한 자료의 포함여부에 따라 소득의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표4-1>에서 보는 것처럼 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조사 없이 소득을 파악할 경우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신청자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다는 원칙에 의할 때 사적 이전 소득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면접 조사 없이 서류상의 자료만으로 소득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산망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한 행정자료만을 활용하는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세부 파악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한 건축, 선박, 항공기, 자동차 관련 자료 등은, 현재는 지방정부수준에서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수작업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지만, 정보망의 개선작업을 통하

여 통합적으로 정보획득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실제적인 자산파악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4-1〉 방법별 파악이 가능한 소득원

소득 종류	세부 분류	서류상의 자료		대면조사	결정 사항
		중앙 단위	시군구 단위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복지 행정자료)	(실사자료)	
근로소득	상시	국민연금공단의 표준소득월액 건강보험공단의 표준보수월액 국세청의 근로소득	○	○	중앙
	임시		○	○	
	일일		○	○	
사업 및 부업 소득	농업	국세청의 사업소득	○	○	중앙
	농외		○	○	
재산소득	임대소득	○	○	○	중앙
	이자소득	○	○	○	중앙 (보완적 조치)
	배당소득	○	○	○	중앙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	○	○	중앙
	사적 이전소득	×	×	○	×
건축		×	○	○	지방
토지		○	○	○	중앙
선박, 항공기, 자동차		×	○	○	지방
임차보증금		×	○	○	실사
금융재산		×	○	○	실사
부채		×	○	○	중앙 (보완적 조치)

주: 통계청의 소득 및 중사상의 지위 구분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가. 근로소득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30.3%가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로 노인인구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실제 실사를 통하여 파악된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이 8.6%이므로 근로소득은 매우 정확히 노인의 노동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4-2〉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가구, 천명, %)

	해당 연령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인 구율)	자영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1.2	3.7	3.6
65세 이상	4,532천명	1,361천명	(30.0)	17.2	4.2	8.4			

자료: 통계청, 『2006 고령자 통계』, 2006.

그런데 자산조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전산망 상의 자료만을 확인하여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근로소득 중 임시근로 또는 일용근로를 통하여 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면 행정적인 비용이 절약되는 것에 비하여 노인의 정확한 근로소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통하여 파악되는 경우에도 임시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각각 0.7%와 1.9%에 불과하다(표 4-3 참조). 더불어 각 소득원이 있는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평균소득액이 1백63만5천원을 넘는 수준인 것에 비하여 임시근로의 경우는 51만6천원, 일일근로소득은 32만6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더불어 국세청을 통하여 근로소득이 파악된 노인가구의 21.9%가 실제 가구방문의 경우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청을 통하여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실제 방문조사를 통하여 근로소득이 파악된 경우는 4.3%로, 국세청에서 파악된 자료와 실사시의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그리 우려할 만한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표 4-4 참조).

둘째, 노인 중 경제활동율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노인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8.4%에 불과하다(표 4-2 참조). 이는 전체인구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40.1%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취업중인 노인의 약 70%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인의 근로활동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공적 자료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임시 및 일용 근로소득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노인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공적 자료로 파악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원을 살펴보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3가지의 근로소득 정보원이 있다. 근로소득

이 있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국세청을 통하여 파악되는 비율이 가장 높아 5.9%이며 이는 실사자료와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경우는 4.7%이며, 국민연금공단 자료의 경우는 0.3%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파악되는 표준소득월액은 활용가치가 매우 낮다(표 4-3 참조).

소득원이 있는 경우의 소득액 평균을 비교해보면 국세청 자료의 경우는 전체 평균이 10만2천원 정도인데 비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표준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평균 소득액은 8만6천원으로 국세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반면 소득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액은 각각 173만8천원과 181만3천원으로 오히려 건강보험표준보수월액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특성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표준보수월액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하한(2007년 기준 28만원)과 소득상한(2007년 기준 6,579만원)을 두고 있어 근로소득 분포의 양극단이 단절(truncated)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자료원의 특성을 고려해 볼때 국세청을 통하여 파악되는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파악의 자료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구분 즉, 상시, 임시, 일용직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근로소득이 파악되어 있는 노인의 경우 실제 조사자료에서의 근로소득의 항목별 현황을 살펴보았는데(표 4-4 참조), 국세청의 자료를 통하여 근로소득이 파악된 노인가구의 75.1%는 상시근로를 하고 있으며 임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가정보가 확보된 비율은 이중 2.4%, 일용근로소득은 1.8%, 자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 자료파악 방법별 근로소득

(단위: %, 원)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복지행정자료					실사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A)	국민연금 표준소득 월액	건강보험 표준보수 월액	상시	임시	일일	합 (B)	A/B (%)	상시	임시	일일	합 (C)	A/C (%)
빈도(%)	5.9	0.3	4.7	6.2	0.2	1.0	7.4	79.7	6.0	0.7	1.9	8.6	68.6
평균 (보유자)	1,738,243	980,342	1,812,702	1,638,797	647,734	240,553	1,426,625	-	1,635,071	515,560	326,277	1,260,339	-
평균 (전체)	101,898	2,928	85,787	101,600	1,388	2,374	105,673	-	98,079	3,548	6,270	108,246	-

〈표 4-4〉 국세청 근로소득 보유여부별 실사자료 실태

(단위: %)

국세청 근로소득 정보 보유 여부	사례수	실사자료상의 근로소득				
		상시	임시	일일	자활	합계
정보 있음	100.0 (903)	75.1	2.4	1.8	0.0	78.1
정보 없음	100.0 (14,501)	1.7	0.6	0.9	0.1	4.3

나. 사업소득

경제활동 중인 노인의 약 70%가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농어촌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정경희 외, 2005). 농어촌 지역에 비하여 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임시 및 일용직의 경우도 공적 자료를 통한 소득파악 방법을 통하여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림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적을 것이며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실사자료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13.2%가 사업소득을 갖고 있으며 1차산업과 관련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각각 1/2을 차지하고 있다. 실사에 의해 파악된 사업소득은 노인가구전체 평균이 11만1천원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만의 평균은 85만5천원이다. 한편 국세청을 통하여 파악된 사업소득은 각각 10만5천원과 171만3천원이다.

국세청을 통하여 사업소득이 파악된 노인의 20% 정도가 실제 방문조사를 통해서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방문조사와 공부상의 자료로 파악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만도 아님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자료를 통하여 사업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노인가구중 방문조사를 통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은 8.9%이며 이중 대부분이 농업소득으로 국세청을 통하여 사업소득이 파악된 경우에 비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국세청 자료만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파악하는 경우 농업에 기초한 사업소득이 누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노인의 자구적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자료파악 방법별 사업소득

(단위: 가구, %, 원)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복지행정자료						실사자료					
	국세청 사업소득 (A)	농업	임업	어업	기타자 영업	합 (B)	A/B(%)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자영업	합 (C)	A/C (%)
빈도(%)	61	23	0	0.1	6.4	8.6	70.9	6.9	0	0.1	6.7	13.2	46.2
평균(보유자)	1,713,487	374,424	-	836,600	1,162,216	965,691	-	577,338	-	441,367	1,055,827	835,083	-
평균(전체)	104,785	8,678	-	272	74,242	83,191	-	39,579	-	430	70,530	110,538	-

〈표 4-6〉 국세청 사업소득 보유여부별 실사자료 실태

(단위: %)

국세청 사업소득 정보 보유 여부	사례수	실사자료상의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자영업	합계
정보 있음	100.0 (942)	3.2	0.0	0.1	79.1	80.0
정보 없음	100.0 (14,462)	7.1	0.0	0.1	2.0	8.9

다. 재산소득

재산소득의 경우도 행정기관별로 확보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다.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의 경우 모두 실사자료에 비하여 그 파악율이 낮다. 또한 배당소득은 실사자료의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국세청 자료를 통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노인가구는 0.1%에 불과하지만 보유자의 평균이자소득은 708만7천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실제조사를 통하여 파악되는 이자소득을 가진 비율은 2.1%로 높은 반면 보유자의 평균 이자소득이 72만7천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을 살펴보면 가구방문조사를 통하여 이자소득이 파악된 가구중 대부분인 95.7%가 국세청을 통해서도 전혀 이자소득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을 통해 이자소득이 파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이자액수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실제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자가 파악된 가구 중 국세청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의 평균 이자소득은 1천271만3천원인 반면 국세청을 통하여 이자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18만 9천원 수준으로 국세

청 자료를 통하여 자료가 파악된 경우의 이자소득 수준의 약 1.5%에 불과하다. 또한, 이자소득의 경우 국세청자료만으로는 이자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가구의 일부만이 파악되므로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방문조사만으로는 이자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극적으로는 현재 국세청을 통하여 파악된 이자소득만을 정보로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는 금융거래정보를 통하여 파악될 금융재산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배당소득은 국세청을 통하여서만 파악이 가능하며 실제 일선에서 사회복지사가 기록하는 정보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0.2%가 배당소득이 있으며 보유가구는 평균적으로 1천104만4천만원의 배당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의 경우는 방문조사를 통해서는 4.8%가 국세청 자료로는 3.8%가 관련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대소득의 경우 방문조사를 통하여 임대소득이 파악된 노인가구중 68.6% 즉 약 2/3가 국세청을 통하여 임대소득이 파악되고 있는데 국세청을 통해서만 임대소득이 파악되는 노인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이 218만1천원 수준이며 국세청 자료에는 없으나 실사를 통하여 파악되는 경우는 109만5천원이다. 평균임대소득에 있어 이 두집단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자소득에 비해서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국세청 자료를 통하여 파악되는 비율이 2/3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임대소득의 경우는 공부상의 자료만을 이용하는데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4-7〉 자료파악 방법별 재산소득

(단위: 가구, %, 원)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복지행정자료				실사자료			
	국세청 이자소득	국세청 배당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합 (A)	이자 소득	임대 소득	합 (B)	A/B (%)	이자 소득	임대 소득	합 (C)	A/C(%)
빈도(%)	0.1	0.2	3.8	3.8	1.9	3.7	5.6	67.9	2.1	4.8	6.8	55.9
평균 (보유자)	7,086,763	11,043,948	2,401,385	2,767,332	813,967	2,174,549	1,731,025	-	726,839	1,840,379	1,516,609	-
평균(전체)	7,821	7,886	90,107	105,814	15,641	80,889	96,530	-	15,382	88,291	103,674	-

〈표 4-8〉 국세청 이자소득 보유여부별 실사자료 실태

(단위: 가구, %, 원)

구분	구성비율	실사자료 평균
국세청 이자소득 유	14 (4.3)	12,713,094
국세청 이자소득 무	312 (95.7)	188,994
전체	326 (100.0)	726,839

〈표 4-9〉 국세청 임대소득 보유여부별 실사자료 실태

(단위: 가구, %, 원)

구분	구성비율	실사자료 평균
국세청 임대소득 유	507 (68.6)	2,181,402
국세청 임대소득 무	232 (31.4)	1,095,127
전체	739 (100.0)	1,840,379

라. 공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에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명예수당, 산재연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유공에 기초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훈처 연금과 명예수당도 공적인 제도로써 안정적인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인 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공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실업급여도 공적 보험이라는 점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적 이전소득의 범주에 의할 경우 각 공적 이전소득이 발생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는 각

공적이전소득이 항목별로 파악되지 않고 집계액만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는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자료의 부정확성이나 불충분성이 없을 것이다.

한편, 실사자료의 경우는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회보험 주체별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 파악되는 보유율보다 매우 높은 반면 각 항목별로 보유율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등도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격과 불일치한다고 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표 4-10〉 자료파악 방법별 공적이전소득

(단위: 가구, %, 원)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복지행정자료		실사자료	
	국민 연금	사학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보훈 연금	명예 수당	산재 연금	실업 급여	합 (A)	공적이전 (B)	A/B (%)	공적 이전 (C)	A/C (%)
빈도(%)	16.5	0.3	2.0	0.8	2.1	0	0.1	0.1	21.1	59.3	35.6	60.7	34.8
평균 (보유자)	158,324	2,482,221	1,799,623	1,596,548	889,604	-	1,630,506	393,348	574,033	270,851	-	247,931	-
평균(전체)	26,189	8,218	36,684	12,334	18,654	-	1,588	204	121,336	160,534	-	150,603	-

2. 재산의 범위

가. 건축물

재산에는 크게 부동산과 동산, 금융재산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동산의 경우 공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어려우며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사의 경우는 가축, 종료입목, 기계기구류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타 연령층과는 달리 노인의 경우 부동산 소유율이 높으며(이현주 외, 2005) 객관적인 경제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행정비용 없이 행정자료만으로 비교적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

다 하겠다. 부동산에는 주택, 건물, 밭, 논, 임야 등의 토지관련 자료 등이 있다.

재산관련 항목 중 건축 관련 자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된다. 반면 토지관련 자료는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만을 파악할 경우 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중 토지만 파악되고 건축은 파악되지 않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축에 관한 정보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없이 획득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건축의 경우 지방세법에 준하고 있으며 주택, 건물, 기타의 3항목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액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방정부 단위에서 파악될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유율이 주택 6.9%, 건물 0.7%, 기타 0.4%이며 이 3가지 항목 중 한개 항목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7.4%이다. 반면 실사자료의 경우는 각각 18.9%, 2.0%, 1.1%이며 이중 한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0.7%로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는 것과 실제 가구방문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행정자료를 통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평균 주택가격이 8,815만4천원인 반면 행정자료를 통하여 파악이 되지 않고 방문조사결과로 파악된 가구의 경우는 건축물의 평균가치가 1억3,559만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방문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파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행정자료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는 많은 부분 그 주택가격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 방문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표 4-11〉 자료파악 방법별 건축 관련 재산실태

(단위: 가구, %, 원)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복지행정자료				실사자료				
	주택	건물	기타	주택	건물	기타	합 (A)	주택	건물	기타	합 (B)	A/B (%)
빈도(%)	×	×	×	6.9	0.7	0.4	7.4	18.9	2.0	1.1	20.7	35.7
평균 (보유자)	×	×	×	86,094,473	68,990,513	42,463,886	89,100,403	118,772,716	115,382,098	94,259,102	124,164,852	-
평균(전체)	×	×	×	5,941,212	492,661	154,374	6,588,247	22,437,588	2,292,062	1,015,776	25,745,426	-

〈표 4-12〉 주택의 방문조사결과와 행정자료 여부별 재산가치 실태

(단위: 가구, %, 원)

구분	구성비율	실사자료 평균
행정자료 건축물_주택 유	1,032 (35.5)	88,153,971
행정자료 건축물_주택 무	1,878 (64.5)	135,598,352
전체	2,910 (100.0)	118,772,716

나. 토지

토지의 경우는 현재 국토정보센터를 통하여 자료가 파악되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통해서 또는 가구방문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자료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에 따르는 제한점이 가장 적은 항목으로 보인다. 노인 가구의 각 토지항목별 보유율을 살펴보면, 논 15.6%, 밭, 15.6%, 임야 8.4%, 기타 26.0%이며, 이러한 항목 중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35.0%이다. 이러한 비율은 실사자료의 경우 논 18.1%, 밭 18.0%, 임야 10.4%, 기타 27.5%이다. 보유자의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오히려 국토정보센터라고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악된 경우가 평균액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방문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정보가 파악되는 경우가 조금 낮은 수준의 토지가격을 보이기 때문으로 이해되며(표 4-13 참조), 지자체에서 파악되는 토지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는 평균가격이 9,116만6천원이며, 지자체 자료가 없는 경우는 9,334만4천원으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보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만 활용하여도 이로 인하여 선정대상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하겠다.

〈표 4-13〉 자료파악 방법별 토지관련 재산실태

(단위: 가구, %, 원)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논	밭	임야	기타	합(A)
빈도(%)	15.6	15.6	8.4	26.0	35.0
평균(보유자)	69,112,176	43,075,303	46,950,023	123,591,458	152,852,490
평균(전체)	10,749,985	6,719,680	3,953,141	32,101,365	53,524,171

	복지행정자료					
	논	밭	임야	기타	합(B)	A/B(%)
빈도(%)	17.1	17.0	9.4	27.3	37.6	93.1
평균(보유자)	59,515,368	36,491,962	36,754,915	93,481,907	120,488,915	-
평균(전체)	10,184,531	6,197,285	3,443,089	25,518,788	45,343,692	-

	실사자료					
	논	밭	임야	기타	합(C)	A/C(%)
빈도(%)	18.1	18.0	10.4	27.5	39.4	88.8
평균(보유자)	62,704,413	39,251,988	39,016,972	99,794,323	126,855,087	-
평균(전체)	11,336,782	7,063,523	4,062,790	27,475,183	49,938,279	-

〈표 4-14〉 자료종류별 유무에 따른 토지 가격

(단위: 가구, %, 원)

구분	실사자료상의 총 토지가격
원시자료에는 없으나 행정자료를 통하여 정보가 획득된 경우(N=836)	91,163,808
실사결과 추가정보가 획득된 경우(N=236)	93,343,722

한편 토지 및 건축 등과 같은 부동산은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하여 자녀에게 상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오히려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저해하고 전체적인 노인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현재 기초보장대상자 선정시 고려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 선박, 항공기는 중앙정부 단위에서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만이 파악이 가능한 항목이다. 반면 자동차는 등록을 통하여 파악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자 방문을 통한 면접결과 파악된 자동차 소유율과는 큰 차이가 없다. 자동차의 경우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파악된 비율이 13.5%인 반면 복지행정자료를 통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율은 오히려 이보다 낮은 13.2%이다.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행정자료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자동차 소유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0.13%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의 자동차의 가격은 1,350만7천원으로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파악된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 가격인 1,321만원에 비하여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방문조사를 통하여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평균자동차 가격은 525만9천원 수준으로 그 가격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공부상의 자료로만 파악하여도 대상자 선정 유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현재 전산망으로는 시가표준액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구득 과정과 활용에 있어서의 보완적 조치가 요구된다.

〈표 4-15〉 자료파악 방법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단위: 가구, %, 원)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복지행정자료				실사자료				
	선박	항공기	자동차 (A)	선박	항공기	자동차 (B)	A/B (%)	선박	항공기	자동차	A/C (%)	B/C (%)
빈도(%)	×	×	13.5	0.1	0	13.2	102.3	0.1	0	14.5	93.1	91.0
평균 (보유자)	×	×	13,210,207	2,500,005	-	12,575,045	-	4,750,003	-	12,087,407	-	-
평균 (전체)	×	×	1,776,912	325	-	1,654,740	-	1,233	-	1,757,716	-	-

〈표 4-16〉 자동차의 정보종류별 파악유형에 따른 평균가격

(단위: 가구, 원)

구분	자동차가액 평균
원시자료에는 정보가 있으나 행정자료상의 정보는 없는 경우(N=211)	(건교부 원시자료 자동차가액) 13,506,649
원시자료에는 정보가 없으나 행정자료상의 정보는 있는 경우(N=317)	(실사자료 자동차가액) 5,258,508

라.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상가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것으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들 항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파악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행정자료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상가나 기타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파악율이 가구방문을 통하여 파악된 것과 시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 것과 거의 비슷하며 보유허도 매우 낮는데 비하여 전월세의 경우는 실사와 행정자료와의 차이가 있다. 즉,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상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있는 노인가구는 3.4%인데 비하여 방문자료에서는 6.2%로 나타났고 실제 보유자의 평균 전월세임차보증금은 1천123만원인데 비하여 방문자료에서는 2천64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방문조사결과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행정자료망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평균액인 3,127만1천원인데 비하여 행정자료망에서도 파악된 경우는 1,147만원으로 약 1/3수준에 불과하다.

〈표 4-17〉 자료파악 방법별 임차보증금

(단위: 가구, %, 원)

	행정기관별 원시자료			복지행정자료				실사자료				
	전월세	상가	기타	전월세	상가	기타	합	전월세	상가	기타	합	행정합/실사합(%)
빈도(%)	×	×	×	3.4	0.1	0.2	3.5	6.2	0.1	0.2	6.4	54.7
평균(보유자)	×	×	×	11,230,201	14,125,000	4,025,386	11,065,832	20,639,275	19,450,000	5,939,755	20,357,154	-
평균(전체)	×	×	×	377,645	7,336	6,533	391,514	1,27,192	25,253	11,568	1,307,013	-

〈표 4-18〉 임차보증금의 자료파악 실태별 가격

(단위: 가구, %, 원)

구분	구성비율	실사자료 평균
행정자료 임차보증금_전월세 유	509 (53.7)	11,469,923
행정자료 임차보증금_전월세 무	439 (46.3)	31,270,711
전체	948 (100.0)	20,639,275

마.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한 정보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상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소유율을 보면 은행예적금이 7.0%, 저축성 보험이 0.2%, 주식이 0.1%, 현금수표어음이 0.1%이며 이중 한개 항목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7.2%이다. 반면 방문조사결과에서는 각각 7.5%, 0.2%, 0.1%, 0.1%, 7.8%로 은행예적금을 제외하고는 보유율에 있어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가구중 실제 행정전산망으로 예적금 보유가 파악되는 비율이 85.6%에 달하고 있어 매우 높은 파악율을 보이고 있다. 방문조사결과 예적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노인가구의 행정전산망상의 정보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두 집단을 비교하며 보면 보유자의 평균 보유액이 각각 4,711만원과 3,054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없이 파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볼 때, 신청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4-19〉 자료파악 방법별 금융재산

(단위: 가구, %, 원)

	실사이전의 복지 DB 행정자료					실사자료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주식	현금수표 어음	합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주식	현금수표 어음	합	행정합/실 사합(%)
빈도(%)	7.0	0.2	0.1	0.1	7.2	7.5	0.2	0.1	0.1	7.8	92.3
평균(보유자)	51,131,163	8,427,524	5,000,000	7,729,112	50,127,148	44,712,622	7,578,582	17,500,000	14,130,217	43,703,964	-
평균(전체)	3,598,168	15,866	325	7,526	3,621,885	3,355,479	16,236	2,272	19,263	3,393,250	-

〈표 4-20〉 예적금의 자료파악 실태별 가격

(단위: 가구, %, 원)

구분	구성비율	실사자료 평균
행정자료상의 예적금 정보가 있는 경우	989 (85.6)	47,105,838
행정자료상의 예적금 정보가 없는 경우	167 (14.4)	30,539,622
전체	1,156 (100.0)	44,712,622

3. 부채

부채의 경우 또한 각 시군구 차원에서의 부가적인 정보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반부채가 0.4%, 의료비 0.1%, 주거비 0.2%이며, 이중 한 개 이상 항목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0.6%이다. 그 규모는 소수이지만 부채의 총액은 5,060만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행정자료로는 부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부채액이 5,937만9천원으로 행정자료가 있는 가구의 3,491만7천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21〉 자료파악 방법별 부채

(단위: 가구, %, 원)

	복지행정자료					실사자료					
	일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합	일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합	행정합/실사합(%)
빈도(%)	0.4	0.1	0	0.2	0.6	0.9	0.1	0	0.8	1.7	35.3
평균(보유자)	32,372,654	30,225,418	-	34,696,863	34,571,261	52,651,526	17,112,709	-	43,840,878	50,595,215	-
평균(전체)	128,196	3,924	-	81,088	213,209	499,034	4,444	-	347,221	850,699	-

4. 재산의 소득환산

노인가구의 다수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된다. 이러한 자산조사에 있어 재산의 고려방법에 참고로 할 수 있는 기존제도로는 기초보장제도가 있다.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재산을 소득환산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소득의 종류별로 상이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즉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한 재산의 소득환산은 노인층이 갖고 있는 특성과 제도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의 변동가능성과 본인의 재산을 최대활용하여도 최저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기초보장제도의 소득환산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평생 동안의 개인적인 근로행위를 통하여 축적된 결과이며 자산가치적인 측면과 더불어 일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기능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의 처분 가능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낮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몇가지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100% 소득환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의 자동차 소유율이 10% 수준이며 자동차가 가처분이 가능한 항목이라기 보다는 노인의 신체적인 기능저하를 고려해 볼 때 이동의 편의성을 위한 필수품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재산과 동일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소득환산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몇가지 검토가능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역모기지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인 8%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주택 원금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감안한 것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준하는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산율은 할인율이 높아 다른 소득이 없어도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역모기지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경우는 6%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역모기지제도에 있어서의 공적 책임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주택담보시 적용하고 있는 금리로 7%이다. 이는 주택담보로 실제 조달 할 수 있는 차입금리라는 의미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주택의 원금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주택가격의 이자만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택할 경우 정기예금 금리인 5%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과 매도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감안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점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실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서는 발표할 소득인정액의 실제적인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소득환산율이 높을수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산이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며 실제 소득인정액의 수준도 높아진다.

위에서 이루어진 소득과 재산의 각 항목별 범위와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관한 논의에 기초해 볼 때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재산(건축,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등,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 부채(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 등)] × 소득환산율(5%, 6%, 7%, 8%)
=
소득인정액

5. 가구형태의 고려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차이가 있다. 물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라도 노인 혼자 1인가구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과 생활하는 경우에도 생활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법의 기본 취지가 노인과 그 배우자를 단위로 한 자산조사에 기초한 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의 동거여부에 따른 생활비의 차이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단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비의 유무만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 지수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균등화 지수에 따라 1인 가구 대비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1대 1.6 내외로 상정하고 있다³⁵⁾. 따라서 동일한 맥락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단독노인과 부부노인의 선정기준을 차등화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실제 한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모두 감안한 것인데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전체 가구원수가 아니라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가 여부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의 경우 영국의 pension credit에서는 단독 대 부부의 경우 1대 1.5로,

35) <2004~2009년 가구균등화 지수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미국 SSI의 경우도 1대 1.5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차등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1대 1.6 또는 1대 1.7 수준에서 결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향후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좀 더 정교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소득인정액 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서 실제 대상자 선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안별로 단독노인과 부부노인의 경우 상이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해본 각 소득환산율에 따라 노인의 60%를 선정할 경우의 소득인정액과 기준을 정리해보면 <표 4-22>과 같다. 이에는 노인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자세한 기준선정의 과정과 세부 내용은 <부표>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도의 지급 대상자 선정에 적용할 소득인정액은 기초노령연금의 하위법령에 의거한 소득 및 재산의 세부정의에 기초하여 노인전체자료를 활용한 면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2> 재산의 소득환산율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균등화지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4년(적용)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2005년	0.3533	0.5883	0.7990	1.0000	1.1466	1.3005
2006년	0.3574	0.5988	0.8030	1.0000	1.1562	1.3178
2007년	0.3616	0.6092	0.8070	1.0000	1.1658	1.3352
2008년	0.3658	0.6196	0.8110	1.0000	1.1754	1.3526
2009년(OECD기준)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자료: 김미곤 외,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위: 원)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5%	6%	7%	8%
단독 노인	140,000	160,000	180,000	200,000
부부 노인	226,800	259,200	291,600	324,000

주: 1대 1.62의 가구균등화 지수 사용

제4절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의 규모

1. 차등지급 여부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역진이 발생할 경우 선정 기준 부근의 비수급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일부 노인들 사이에 소득역진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서도 선정기준 부근의 소득역진 현상 방지를 위한 가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먼저 차등지급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차등지급할 것인가를 모색해보아야 한다. 차등여부는 소득역진 발생가능성과 지급액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등지급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노인들의 불만 방지 중 어떠한 측면에 정책적 우선수위를 두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정책적 결정사항이다. 한편, 차등지급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의 모색이 가능해보인다. 첫째는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A값의 5%)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감액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이론적으로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되는 액수가 최대 A값의 5%에서 최소 1원까지 다양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감액 방법이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기에 앞서 검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맥락에서 감액지급하지 않는 방법, 보충급여 방식의 감액제도, 3구간의 계단식으로 감액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각 안별로 비교함으로써 각 방안이 갖고 있는 실행상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재산의 소득환산율 및 차등지급 방안별 총 소요 예산

<표 4-23>에 재산의 소득환산율별 각 차등지급안별의 경우 차등지급의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규모와 소요예산의 규모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계단식 차등구간의 경우는 3단

계로 감액하며 그 차액에 대하여 절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소득환산율을 5%로 하는 경우 차등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계단식 차등구간의 경우 총 대상자중 13.8%의 규모이며 연간 총 급여액의 규모는 111억7,774만원이며 보충급여 방식으로 차등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차등급여의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는 18.1%로 계단식 차등구간의 경우에 비하여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규모가 7.5%포인트 높다.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의 경우는 94.5%, 보충급여식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는 91%의 규모이며, 두가지 차등지급안을 비교해보면,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 보충급여 방식의 차등구간 방안이 96.3%의 규모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차등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대비 계단식으로 차등구간을 설정할 경우 총 급여액은 94.5%의 규모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비 5.5%의 규모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충급여방식으로 차등지급하는 경우는 9%의 규모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환산율을 6%로 하는 경우 차등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계단식 차등구간의 경우 11.0%의 규모이며 보충급여방식으로 차등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차등급여의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는 15.7%이다. 차등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대비 계단식으로 차등구간을 설정할 경우 총 급여액은 96.7%의 규모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비 3.5%의 규모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충급여방식으로 차등지급하는 경우는 2.4%의 규모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환산율을 7%로 하는 경우 차등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계단식 차등구간의 경우 9.6%, 보충급여방식으로 차등구간을 설정하는 경우는 13.5%가 적용대상이 된다. 차등지급 방법별 급여액을 비교해보면 두개의 차등지급안은 동일금액 지급안에 비하여 각각 95.8%와 93.4%의 규모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득환산율을 8%로 하는 경우 차등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계단식 차등구간의 경우 8.1%, 보충급여방식으로 차등구간을 설정하는 경우는 11.3%가 적용대상이 된다. 차등지급 방법별 급여액을 비교해보면 두개의 차등지급안은 동일금액 지급안에 비하여 각각 96.5%와 94.2%의 규모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차등지급 여부에 따른 실제 소요예산 규모를 위에서 검토된 안 재산의 소득환산율 5%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등구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2조5,943억으로 추계되며, 계단식의 차등구간을 적용할 경우는 2조4,516억, 보충급여식 차등구간을 적용할 경우는 2조3,607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표 4-24 참조).

〈표 4-23〉 차등지급 여부별 소요자원 규모 비교

1.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시¹⁾

(단위: 가구, %, 원)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차등구간 미설정	9,866	0	0.00	11,828,544,000	0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	9,866	1,357 (13.8%)	13.75	11,177,736,000	1,184,760,000
보충급여방식 차등구간 설정	9,866	1,781 (18.1%)	18.05	10,763,423,372	829,922,332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계단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4.5%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1.0%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6.3%	

2. 재산의 소득환산율 6% 적용시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차등구간 미설정	9,907	0	0.00	11,881,296,000	0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	9,907	1,091 (11.0%)	11.01	11,330,688,000	948,960,000
보충급여방식 차등구간 설정	9,907	1,557 (15.7%)	15.72	10,959,312,204	647,836,178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계단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5.4%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2.2%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6.7%	

3. 재산의 소득환산율 7% 적용시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차등구간 미설정	9,940	0	0.00	11,918,592,000	0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	9,940	950 (9.6%)	9.6	11,422,536,000	819,720,000
보충급여방식 차등구간 설정	9,940	1,342(13.5%)	13.50	11,114,359,908	564,430,920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계단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5.8%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3.4%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7.3%	

4. 재산의 소득환산율 8% 적용시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차등구간 미설정	9,945	0	0.00	11,926,992,000	0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	9,945	805 (8.1%)	8.09	11,505,624,000	695,160,000
보충급여방식 차등구간 설정	9,945	1,125(11.3%)	11.31	11,231,506,832	465,225,997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계단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6.5%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4.2%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7.6%	

주: 1) 제시된 액수는 2장에서 보고된 표본조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소요예산은 이 외는 다름.
단지 정책대안 검토에 있어 %만이 의미있음.

- 2) 재산의 소득환산율 각각의 경우 노인의 60%에 가장 근접한 소득인정액 구분별 노인의 수를 기록한 것으로 각 안별로 60%에 근접한 소득군에 속하는 노인의 수에 차이가 있어, 제시된 노인의 실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표 4-24〉 차등지급 방법별 소요자원 추계(재산소득환산율 5% 기준)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11,828,544,000	0
차등구간 미적용	예산 추정치		2,594,326,472,063 (2조 5,943억)
	노인단독		1,422,222,093,635 (1조 4,222억)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139,281,815,481 (1,393억)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1,032,822,562,946 (1조 328억)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11,177,736,000	1,184,760,000
계단방식 차등구간 적용	예산 추정치		2,451,586,298,578 (2조 4,516억)
	노인단독		1,370,488,847,885 (1조 3,705억)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131,338,646,186 (1,313억)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949,758,804,507 (9,498억)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10,763,423,372	829,922,332
보충급여방식 차등구간 적용	예산 추정치		2,360,716,093,565 (2조 3,607억)
	노인단독		1,341,377,351,778 (1조 3,414억)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126,440,513,737 (1,264억)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892,898,228,050 (8,929억)

제5절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1.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관련제도의 발전방안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중하위소득계층 60%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보완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라 그동안 광범위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여러 제도들의 발전적 정비가 필요하다. 제도의 발전적 정비가 필요한 관련 제도로는 교통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가. 교통수당과의 관계 정립

교통수당은 본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목적을 갖고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첫째, 노인의 취약한 경제상황이 교통이용에 있어 장애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교통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둘째, 교통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소득보전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 셋째, 외국에는 교통이용할인 및 무료이용제도는 있지만 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수당제도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통수당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수당이 수행하던 소득보전기능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교통수당의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은 포괄대상에 차이가 있어, 기초노령연금도입으로 교통수당을 완전 흡수·통합하는 데 애로가 있다.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체노인을 수급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60%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통수당 조정 대안을 몇 가지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60%를 제외하고 교통수당을 기존대로 지급하는 방안; 둘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60%와 국민연금 및 공적직역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약15%를 제외하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셋째, 교통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넷째, 교

통수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60%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기존수급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과 국민연금 및 공적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기존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표 4-25〉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과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감안한 추가예산(2007년 기준)
(단위:명, 억)

전국	전체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노인의 60%	기초노령 연금급여 지출(연) -5%소득 환산을 적용시(A)	경로연금 급여지출 (연) (B)	교통수당 지출액(연) (C)	교통수당 지출액* 60%(연) (D)	A-B-C	A-B-D
차등구간 미적용	4,706,936	2,824,162	25,943	3,195.06	6,603	3,962	16,145	18,786
계단식	4,706,936	2,824,162	24,516	3,195.06	6,603	3,962	14,038	17,359
보충 급여식	4,706,936	2,824,162	23,607	3,195.06	6,603	3,962	13,809	16,450

주: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4,341억원의 예산절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순정부지출 증가는 9,468억원~14,445억원 이라 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실행준비단 원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석재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경로우대제도 방향정립: 노인교통수당 및 교통이용지원제도” 노인정책포럼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 관계 정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소득원을 활용한 경우에도 빈곤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최저생활보장수준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소득을 보충해주는 최종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타의 자구적 소득가득활동 혹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급여를 적용한 후에도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큼을 보장해주는 최종안전망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이후에도 빈곤한 경우에 한하여 빈곤한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간 관계를 정립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경로연금과의 관계에서 경로연금을 노인의 추가적인 지출소요에 대한 급여로 인정하여 경로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시킴으로써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경로연금만큼을 생계비에 더하여 추가로 받아왔다. 따라서 경로연금의 확대 연장선상에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 경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노령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경로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시킨 것은 정당성이 없다. 연령계층별 소비지출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추가지출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수당적 사회보장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에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 및 수급자의 수용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입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노인들도 다수 발생하고, 국가로부터의 보장수준도 자연증감분을 제외하면 이전보다 경로연금액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원칙대로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을 정하는 방안; 둘째, 기존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구분하여, 기존수급자는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자연증감분을 합하여 경로연금액만큼을 유지하고, 신규수급자는 원칙대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을 정하는 방안이다.

원칙대로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을 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4,341억원의 예산절감이 발생할 수 있다(2007년 기초수급자 406,488명).

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 발전방안³⁶⁾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중하위소득계층 60%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상당수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연금수급자는 15% 남짓임을 감안할 때, 25%정도는 여전히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즉, 여전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공적소득보장에서 배제된 25%의 노인이, 노인소득실태 조사를 감안할 때, 공적소득보장 없이 최저수준 이상의 소득을 누리는 계층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대간 자원배분에 근거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에서의 배제는 국민 형평성 보장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욱이 앞에서 제기한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지적과 같이, 대상자에 따라 사회보험방식 국민연금과 공공부조방식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최저보증연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간략한 대안적 발전방안 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연금소득이 노후소득상태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금 및 여타 소득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선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연금비수급권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부동산 및 동산) 소유자를 제외시키고, 근로사업임대소득과 금융재산을 연금화한 소득을 합하여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선별하고 감액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소득만 감안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0년 미만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평균소득의 5%(기초노령연금액) 미만인 경우 부족한 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감액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평균소득의 10% 미만인 경우 부족한 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평균소득의 20% 미만인 경우 부족한 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36) 석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향” 2007년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다. 이 경우, 최소소득기준 가입자는 본인 소득을 넘어선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최소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성 있다.

셋째, 연금수급권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수 및 지급액의 규모가 얼마가 될 지 추계결과에 따라 연금 비수급권자의 지급대상자수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총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수가 노인의 60% 수준을 유지토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소득만 조사하여,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비수급권자는 평균소득의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장하고, 연금수급권이 있되 그 수준이 평균소득의 20% 미만인 경우 부족한 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최저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행정적 기반마련 방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성격의 갖는 제도의 성격상 신청한 노인에게 대하여 소득과 재산실태 파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실제 신청자에 대한 방문 없이 공부상의 자료만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조사에 따르는 인력의 대폭적인 증가 없이도 자산조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기초보장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10여개의 행정자료를 담당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하여 확인·조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도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 더불어 현재의 체계로는 자료를 신청하고 회신받는데 3~7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관련 정보시스템을 효율화·체계화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사후관리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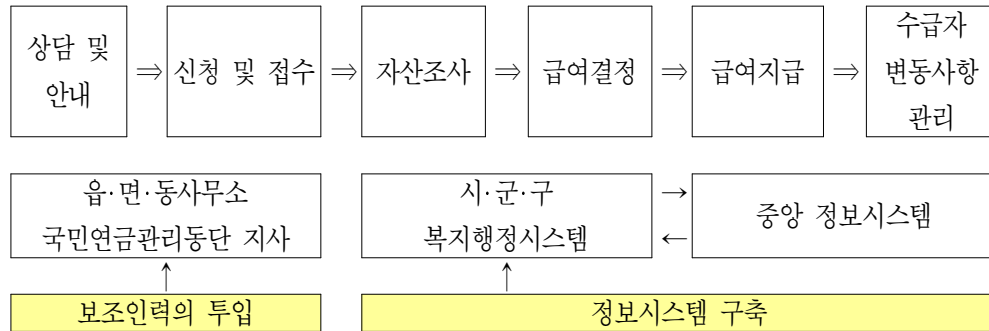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중앙센터를 설치하여 소득·재산관련 원자료를 확보하고 가공하여 시군구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중앙의 정보시스템과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간의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의 신속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단계별 전달체계에 따른 필요조치는 그림 [4-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자산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소

득 및 재산 내용의 변동을 체계적·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 경로연금이 갖고 있는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규모, 분포, 특성 등 기본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통계를 가공·생산·배포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시에는 앞에서 지적된 현재 중앙정부 단위와 지방정부 단위에서 파악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동시에 체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단위)로 파악되어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달체계에 따른 행정적 필요 조치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2008년 시행을 위해서는 그 전에 단기간 내에 신청접수를 받아야 하는 일정을 감안해볼 때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시기에 요구되는 특별한 인적자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19.2%가 문맹상태이며, 20.9%가 문자해독은 가능하지만 정규교육의 경험이 없다는 점(정경희 외, 2005) 등을 감안해볼 때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 작성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재원분담 방안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과 재정여건(표 4-26 참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면밀한 협의와 동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비용 마련과 적극적인 제도 시행준비와 수행 없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원활한 수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수당(정경희 외, 2003)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표 4-26〉 시·군·구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2006년)

(단위: 개, %, 원, 천원)

구분	동·읍·면수(개)				재정 자립도 (%)	지방세 1인당 부담액(원)	노인복지 예산총액 (천원)	노인 1인당 노인 복지 예산 (천원)	노인 1인당 노인 복지 예산 -경로연금 제외 (천원)	노인 복지 기금 (천원)
	계	동	읍	면						
전국	15.3	14.6	1.5	8.5	30.2	605,324	9,112,914	535	528	757,366
도시지역	18.0	18.0	0.0	0.0	42.2	720,137	10,202,408	492	487	907,265
도농복합지역	19.4	9.2	1.6	8.8	32.2	612,483	11,933,243	514	508	775,366
고령화율 14%미만	19.9	10.6	1.7	7.8	39.0	705,299	12,599,632	509	503	975,394
고령화율 14%이상	18.3	5.9	1.3	11.1	17.1	403,646	10,475,516	526	517	337,806
농어촌지역	10.3	0.0	1.5	8.6	16.3	478,454	6,314,627	593	583	586,815
고령화율 20%미만	8.3	0.0	1.8	6.5	22.5	674,195	6,081,211	632	623	867,057
고령화율 20-30%미만	10.7	0.0	1.3	9.4	13.2	394,406	6,107,885	554	543	452,502
고령화율 30%이상	11.9	0.0	1.2	10.7	11.8	303,173	7,466,471	627	616	378,812

자료: 정경희 외,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2007.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5.
- 김성숙, 『기초노령연금 감액방식 검토』, 2007. 내부자료.
- 김수완·조유미,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소득원별 빈곤제거효과 분석」, 연금포럼 제19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05.
- 김수완·김순옥,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전망」,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pp.271-296.
- 김수완·김순옥·안상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05.
- 김영범, 「인구고령화와 복지지출 변동: 선진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pp.115-134.
- 박능후 외,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보건복지부, 『200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 _____,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관리공단, 2003.
- 석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향」, 2007년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 _____,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경로우대제도 방향정립: 노인교통수당 및 교통이용지원 제도」, 노인정책포럼발표자료, 2007.
- _____,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제53호, 2003.
- _____,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제50호, 2002.

- _____,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2001.
- _____, 「노인의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2000.
- 석재은·정경희 외,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석재은·김수봉 외, 『OECD국가의 기초보장과 공적연금 체계 비교연구(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석재은·김태완,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오근식,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통권 제 7 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 원종욱,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다원화와 사각지대해소방안」, 연금포럼 제13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4.
- 원종학,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재정포럼 통권 제11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윤석명·이정우·김대철,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04.
- 이근홍,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2006.
- 정경희,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정경희 외,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_____,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정경희·오영희 외 4인,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각년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Department for Social Development(DSD)(2004), 「Your Guide To Our Service」 .
<http://www.thepensionservice.gov.uk>

Department and Work and Pension(DWP) a(2004), 「a guide to Pension Credit」 .
<http://www.thepensionservice.gov.uk>

_____ b(2004), 「a guide to State Pension」 .
<http://www.dss.gov.uk>

_____ c(2004), 「State pensions for carers and
 parents」 . <http://www.dss.gov.uk>

_____ d(2004), 「Pensions for women」 .
<http://www.dss.gov.uk>

Emmerson, Carl and Johnson, Paul(2001), "Pension Provision in the United Kingdom", Pension system and retirement incomes across OECD countries, edited by Disney, Richard and Johnson, Paul. Edward Elgar Publishing, Inc. Massachusetts, pp296~333.

Hancock, Ruth and Pudney, Stephen and Holly Sutherland(2001), "THE PENSION CREDIT PROPOSALS:DEPENDENCY ON MEANS-TESTED INCOME AND THE WELFARE OF PENSIONS". <http://www.le.ac.uk>

National Statistics a(2004), "Income Support Statistics 2004".
<http://www.statistics.gov.uk>

_____ b(2004), "State Pension's Statistics,2004".
<http://www.statistics.gov.uk>

_____ c(2004), "Pension Credit Statistics 2004".
<http://www.statistics.gov.uk>

【부 록】

부록 1. 기초노령연금 도입과정

부록 2. 기초노령연금법

부록 3. 부표

부록 1. 기초노령연금 도입 과정

1. 국민연금 개혁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 각 당 입장 비교

구 분		당초 정부안 (‘03.10)	복지부 신개혁안 (‘06.6)	복지위 여당안 (‘06.9)	민노당안 (‘06.10)	한나라당안 (‘04.12)	
국 민 연 금	개혁방향	현행틀 유지				완전소득비례	
	보험료율	9%→ 15.9%(‘30)	9%→ 12.9%(‘17)	9% 유지	9% 유지	9%→ 7%	
	급여수준	60% →50%(‘08)	60% →50%(‘08) →40%(‘28)	60%→ 50%(‘08)	60%→ 40%(‘23) *5년마다5%인 하	60%→20%	
	기금고갈 시기(2070 년 적립률)	2070년 이후 (2.5배)	2070년 이후 (5배)	2052년 -	2058년 -	2070년 이후 (13배)	
기 초 (노 령) 연 금	지원대상 (‘07년 기준)	-	노인 45% (2,170천명)	노인 60% (2,893천명) *기초·차상위 : 864 *일반: 2,029	노인 80% (3,857천명)	노인 100% (4,822천명)	
	급여수준 (‘07년 기준)	-	월 8만원	월 7~10만원 *기초·차상위 : 10만원 *일반: 7만원	가입자평균소 득 (3년간) 5%(08년8만원) →15%(28년24 만원)	전년도 가입자평균소득 10%(08년 15만원)→20%(28 년 30만원)	
	소요 재원 (경상 가)	‘07	-	2.1조원	2.7조원	4.6조원(‘08년)	12.7조원
		‘10	-	2.3조원	3.1조원	6.6조원	18.6조원
		‘20	-	4.1조원	5.8조원	30.5조원	65.9조원
‘30		-	7.3조원	10.7조원	103.4조원	191.8조원	

2.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추진경과

일시	제목
'06.6.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개혁방안 발표(복지부)
'06.6.12	기초노령연금제도 모형 구축회의
'06.6.30	기초노령연금 세부실행모형 보고
'06.8.14	기초노령연금 도입 검토를 위한 소득·재산 실태조사 실시('06.8.14~9.8)
'06.9.22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 관계부처 회의
'06.9.26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 경제상황 점검회의
'06.9.29	기초노령연금법(안) 발의(강기정의원 등 78인)
'06.10.18	기초노령연금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06.10.18	기초노령연금 도입방안 관련 장관 주재 정책토론회
'06.10.19	기초노령연금 도입방안 관련 차관 보고
'06.10.20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06.10.27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 열린우리당 보좌진 설명회
'06.11.6	기초노령연금 관련 1차 법안소위
'06.11.9	2차 법안소위 대비 차관보고
'06.11.9	법안소위 대비 주요 쟁점사항 수석전문위원 보고
'06.11.15	기초노령연금 관련 2차 법안소위
'06.11.20	기초노령연금 관련 3차 법안소위
'06.11.22	기초노령연금 관련 4차 법안소위
'06.11.23	기초노령연금 관련 5차 법안소위
'06.11.30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안 전체회의 심의
'06.12.4	기초노령연금 관련 6차 법안소위
'06.12.7	기초노령연금 상임위 통과
'06.12.21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법안심사 2소위 회부)
'07.1.5	노인 3법 등 현안법률 추진계획 BH 수석 보고
'07.1.17	노인 3법 국회 통과를 위한 홍보회의
'07.1.25	기초노령연금 현안사항 점검회의
'07.1.30	기초노령연금 국고차등지원방안 관련 연구용역회의
'07.1.31	기초노령연금관련 노년시대 기획기사 송고
'07.2.1	행자부 정보화시스템 구축 협조요청
'07.2.5	기초노령연금 등 홍보 포스터 배포관련 노인회 협조요청
'07.3.29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 통과
'07.3.30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07.4.2	국회 본회의 통과

부록 2.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7. 4. 25 법률 제8385호], 시행일 2008. 1.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 (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제4조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연금액)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한다.

제6조 (연금의 신청) 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연금의 신청권자·신청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조사·질문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미지급의 연금) ①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1조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2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①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 (병급의 조정) 수급자에게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신청) ①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효)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17조 (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계산에 있어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22조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신청의 접수
2.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4.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85호, 2007.4.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연금의 지급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3.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

②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3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 및 경로연금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된 65세 이상의 자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로서 이 법 시행 후 2008년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이 된 자는 각각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날 또는 65세가 된 날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록 3. 부표

〈부표 3-1〉 재산의 소득환산률 5% 적용시 노인의 가구형태별 소득인정액 분포

구분		노인단독					
노인단독(원)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4,594	4,594	56.27	56.27	29.82	29.82
1	20,000	475	5,069	5.82	62.09	3.08	32.91
20,001	40,000	313	5,382	3.83	65.92	2.03	34.94
40,001	60,000	248	5,630	3.04	68.96	1.61	36.55
60,001	80,000	224	5,854	2.74	71.71	1.45	38.00
80,001	100,000	269	6,123	3.29	75.00	1.75	39.75
100,001	120,000	183	6,306	2.24	77.24	1.19	40.94
120,001	140,000	127	6,433	1.56	78.80	0.82	41.76
140,001	160,000	112	6,545	1.37	80.17	0.73	42.49
160,001	180,000	89	6,634	1.09	81.26	0.58	43.07
180,001	200,000	67	6,701	0.82	82.08	0.43	43.50
200,001	220,000	73	6,774	0.89	82.97	0.47	43.98
220,001	240,000	70	6,844	0.86	83.83	0.45	44.43
240,001	260,000	62	6,906	0.76	84.59	0.40	44.83
260,001	280,000	50	6,956	0.61	85.20	0.32	45.16
280,001	300,000	56	7,012	0.69	85.89	0.36	45.52
300,001	320,000	43	7,055	0.53	86.42	0.28	45.80
320,001	340,000	37	7,092	0.45	86.87	0.24	46.04
340,001	360,000	35	7,127	0.43	87.30	0.23	46.27
360,001	380,000	35	7,162	0.43	87.73	0.23	46.49
380,001	400,000	31	7,193	0.38	88.11	0.20	46.70
400,001	420,000	32	7,225	0.39	88.50	0.21	46.90
420,001	440,000	26	7,251	0.32	88.82	0.17	47.07
440,001	460,000	22	7,273	0.27	89.09	0.14	47.22
460,001	480,000	26	7,299	0.32	89.40	0.17	47.38
480,001	500,000	27	7,326	0.33	89.74	0.18	47.56
500,001	520,000	17	7,343	0.21	89.94	0.11	47.67
520,001	540,000	6	7,349	0.07	90.02	0.04	47.71
540,001	560,000	18	7,367	0.22	90.24	0.12	47.83
560,001	580,000	12	7,379	0.15	90.38	0.08	47.90
580,001	600,000	11	7,390	0.13	90.52	0.07	47.97

구분		노인단독					
노인단독(원)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600,001	620,000	14	7,404	0.17	90.69	0.09	48.07
620,001	640,000	16	7,420	0.20	90.89	0.10	48.17
640,001	660,000	18	7,438	0.22	91.11	0.12	48.29
660,001	680,000	10	7,448	0.12	91.23	0.06	48.35
680,001	700,000	12	7,460	0.15	91.38	0.08	48.43
700,001	720,000	12	7,472	0.15	91.52	0.08	48.51
720,001	740,000	14	7,486	0.17	91.70	0.09	48.60
740,001	760,000	11	7,497	0.13	91.83	0.07	48.67
760,001	780,000	16	7,513	0.20	92.03	0.10	48.77
780,001	800,000	26	7,539	0.32	92.34	0.17	48.94
800,001	820,000	16	7,555	0.20	92.54	0.10	49.05
820,001	840,000	21	7,576	0.26	92.80	0.14	49.18
840,001	860,000	11	7,587	0.13	92.93	0.07	49.25
860,001	880,000	43	7,630	0.53	93.46	0.28	49.53
880,001	900,000	6	7,636	0.07	93.53	0.04	49.57
900,001	920,000	13	7,649	0.16	93.69	0.08	49.66
920,001	940,000	7	7,656	0.09	93.78	0.05	49.70
940,001	960,000	10	7,666	0.12	93.90	0.06	49.77
960,001	980,000	12	7,678	0.15	94.05	0.08	49.84
980,001	1,000,000	15	7,693	0.18	94.23	0.10	49.94
1,000,001	1,050,000	23	7,716	0.28	94.51	0.15	50.09
1,050,001	1,100,000	22	7,738	0.27	94.78	0.14	50.23
1,100,001	1,150,000	24	7,762	0.29	95.08	0.16	50.39
1,150,001	1,200,000	13	7,775	0.16	95.24	0.08	50.47
1,200,001	1,250,000	16	7,791	0.20	95.43	0.10	50.58
1,250,001	1,300,000	16	7,807	0.20	95.63	0.10	50.68
1,300,001	1,350,000	22	7,829	0.27	95.90	0.14	50.82
1,350,001	1,400,000	17	7,846	0.21	96.10	0.11	50.93
1,400,000 초과		318	8,164	3.90	100.00	2.06	53.00
전체		8,164		100.00		53.00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기준(%)	누적(%)	전가구기준(%)	누적(%)
0		255	255	14.69	14.69	1.66	1.66
1	32,400	64	319	3.69	18.38	0.42	2.07
32,401	64,800	61	380	3.51	21.89	0.40	2.47
64,801	97,200	41	421	2.36	24.25	0.27	2.73
97,201	129,600	57	478	3.28	27.53	0.37	3.10
129,601	162,000	54	532	3.11	30.65	0.35	3.45
162,001	194,400	58	590	3.34	33.99	0.38	3.83
194,401	226,800	40	630	2.30	36.29	0.26	4.09
226,801	259,200	40	670	2.30	38.59	0.26	4.35
259,201	291,600	40	710	2.30	40.90	0.26	4.61
291,601	324,000	40	750	2.30	43.20	0.26	4.87
324,001	356,400	43	793	2.48	45.68	0.28	5.15
356,401	388,800	24	817	1.38	47.06	0.16	5.30
388,801	421,200	29	846	1.67	48.73	0.19	5.49
421,201	453,600	34	880	1.96	50.69	0.22	5.71
453,601	486,000	24	904	1.38	52.07	0.16	5.87
486,001	518,400	21	925	1.21	53.28	0.14	6.00
518,401	550,800	21	946	1.21	54.49	0.14	6.14
550,801	583,200	17	963	0.98	55.47	0.11	6.25
583,201	615,600	25	988	1.44	56.91	0.16	6.41
615,601	648,000	22	1,010	1.27	58.18	0.14	6.56
648,001	680,400	19	1,029	1.09	59.27	0.12	6.68
680,401	712,800	22	1,051	1.27	60.54	0.14	6.82
712,801	745,200	16	1,067	0.92	61.46	0.10	6.93
745,201	777,600	19	1,086	1.09	62.56	0.12	7.05
777,601	810,000	16	1,102	0.92	63.48	0.10	7.15
810,001	842,400	15	1,117	0.86	64.34	0.10	7.25
842,401	874,800	18	1,135	1.04	65.38	0.12	7.37
874,801	907,200	13	1,148	0.75	66.13	0.08	7.45
907,201	939,600	11	1,159	0.63	66.76	0.07	7.52
939,601	972,000	12	1,171	0.69	67.45	0.08	7.60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기준(%)	누적(%)	전가구기준(%)	누적(%)
972,001	1,004,400	22	1,193	1.27	68.72	0.14	7.74
1,004,401	1,036,800	14	1,207	0.81	69.53	0.09	7.84
1,036,801	1,069,200	10	1,217	0.58	70.10	0.06	7.90
1,069,201	1,101,600	16	1,233	0.92	71.03	0.10	8.00
1,101,601	1,134,000	13	1,246	0.75	71.77	0.08	8.09
1,134,001	1,166,400	8	1,254	0.46	72.24	0.05	8.14
1,166,401	1,198,800	11	1,265	0.63	72.87	0.07	8.21
1,198,801	1,231,200	14	1,279	0.81	73.68	0.09	8.30
1,231,201	1,263,600	10	1,289	0.58	74.25	0.06	8.37
1,263,601	1,296,000	9	1,298	0.52	74.77	0.06	8.43
1,296,001	1,328,400	9	1,307	0.52	75.29	0.06	8.48
1,328,401	1,360,800	9	1,316	0.52	75.81	0.06	8.54
1,360,801	1,393,200	9	1,325	0.52	76.32	0.06	8.60
1,393,201	1,425,600	7	1,332	0.40	76.73	0.05	8.65
1,425,601	1,458,000	8	1,340	0.46	77.19	0.05	8.70
1,458,001	1,490,400	9	1,349	0.52	77.71	0.06	8.76
1,490,401	1,522,800	12	1,361	0.69	78.40	0.08	8.84
1,522,801	1,555,200	11	1,372	0.63	79.03	0.07	8.91
1,555,201	1,587,600	9	1,381	0.52	79.55	0.06	8.97
1,587,601	1,620,000	8	1,389	0.46	80.01	0.05	9.02
1,620,001	1,701,000	16	1,405	0.92	80.93	0.10	9.12
1,701,001	1,782,000	18	1,423	1.04	81.97	0.12	9.24
1,782,001	1,863,000	19	1,442	1.09	83.06	0.12	9.36
1,863,001	1,944,000	11	1,453	0.63	83.70	0.07	9.43
1,944,001	2,025,000	10	1,463	0.58	84.27	0.06	9.50
2,025,001	2,106,000	11	1,474	0.63	84.91	0.07	9.57
2,106,001	2,187,000	12	1,486	0.69	85.60	0.08	9.65
2,187,001	2,268,000	20	1,506	1.15	86.75	0.13	9.78
2,268,000 초과		230	1,736	13.25	100.00	1.49	11.27
전체		1,736		100.00		11.27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기준(%)	누적(%)	전가구기준(%)	누적(%)
0		1,245	1,245	22.62	22.62	8.08	8.08
1	32,400	348	1,593	6.32	28.94	2.26	10.34
32,401	64,800	253	1,846	4.60	33.54	1.64	11.98
64,801	97,200	196	2,042	3.56	37.10	1.27	13.26
97,201	129,600	230	2,272	4.18	41.28	1.49	14.75
129,601	162,000	203	2,475	3.69	44.97	1.32	16.07
162,001	194,400	180	2,655	3.27	48.24	1.17	17.24
194,401	226,800	148	2,803	2.69	50.93	0.96	18.20
226,801	259,200	135	2,938	2.45	53.38	0.88	19.07
259,201	291,600	154	3,092	2.80	56.18	1.00	20.07
291,601	324,000	124	3,216	2.25	58.43	0.80	20.88
324,001	356,400	108	3,324	1.96	60.39	0.70	21.58
356,401	388,800	102	3,426	1.85	62.25	0.66	22.24
388,801	421,200	93	3,519	1.69	63.94	0.60	22.84
421,201	453,600	86	3,605	1.56	65.50	0.56	23.40
453,601	486,000	58	3,663	1.05	66.55	0.38	23.78
486,001	518,400	75	3,738	1.36	67.91	0.49	24.27
518,401	550,800	63	3,801	1.14	69.06	0.41	24.68
550,801	583,200	54	3,855	0.98	70.04	0.35	25.03
583,201	615,600	49	3,904	0.89	70.93	0.32	25.34
615,601	648,000	43	3,947	0.78	71.71	0.28	25.62
648,001	680,400	50	3,997	0.91	72.62	0.32	25.95
680,401	712,800	50	4,047	0.91	73.53	0.32	26.27
712,801	745,200	45	4,092	0.82	74.35	0.29	26.56
745,201	777,600	41	4,133	0.74	75.09	0.27	26.83
777,601	810,000	39	4,172	0.71	75.80	0.25	27.08
810,001	842,400	41	4,213	0.74	76.54	0.27	27.35
842,401	874,800	47	4,260	0.85	77.40	0.31	27.66
874,801	907,200	38	4,298	0.69	78.09	0.25	27.90
907,201	939,600	39	4,337	0.71	78.80	0.25	28.16
939,601	972,000	30	4,367	0.55	79.34	0.19	28.35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기준(%)	누적(%)	전기가구기준(%)	누적(%)
972,001	1,004,400	36	4,403	0.65	80.00	0.23	28.58
1,004,401	1,036,800	25	4,428	0.45	80.45	0.16	28.75
1,036,801	1,069,200	31	4,459	0.56	81.01	0.20	28.95
1,069,201	1,101,600	19	4,478	0.35	81.36	0.12	29.07
1,101,601	1,134,000	21	4,499	0.38	81.74	0.14	29.21
1,134,001	1,166,400	30	4,529	0.55	82.29	0.19	29.40
1,166,401	1,198,800	20	4,549	0.36	82.65	0.13	29.53
1,198,801	1,231,200	23	4,572	0.42	83.07	0.15	29.68
1,231,201	1,263,600	21	4,593	0.38	83.45	0.14	29.82
1,263,601	1,296,000	24	4,617	0.44	83.88	0.16	29.97
1,296,001	1,328,400	21	4,638	0.38	84.27	0.14	30.11
1,328,401	1,360,800	19	4,657	0.35	84.61	0.12	30.23
1,360,801	1,393,200	12	4,669	0.22	84.83	0.08	30.31
1,393,201	1,425,600	17	4,686	0.31	85.14	0.11	30.42
1,425,601	1,458,000	20	4,706	0.36	85.50	0.13	30.55
1,458,001	1,490,400	18	4,724	0.33	85.83	0.12	30.67
1,490,401	1,522,800	18	4,742	0.33	86.16	0.12	30.78
1,522,801	1,555,200	19	4,761	0.35	86.50	0.12	30.91
1,555,201	1,587,600	13	4,774	0.24	86.74	0.08	30.99
1,587,601	1,620,000	8	4,782	0.15	86.88	0.05	31.04
1,620,001	1,701,000	30	4,812	0.55	87.43	0.19	31.24
1,701,001	1,782,000	29	4,841	0.53	87.95	0.19	31.43
1,782,001	1,863,000	22	4,863	0.40	88.35	0.14	31.57
1,863,001	1,944,000	23	4,886	0.42	88.77	0.15	31.72
1,944,001	2,025,000	28	4,914	0.51	89.28	0.18	31.90
2,025,001	2,106,000	23	4,937	0.42	89.70	0.15	32.05
2,106,001	2,187,000	18	4,955	0.33	90.03	0.12	32.17
2,187,001	2,268,000	26	4,981	0.47	90.50	0.17	32.34
2,268,000 초과		523	5,504	9.50	100.00	3.40	35.73
전체		5,504		100.00		35.73	

구분				전체			
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전 가구가중(%)	누적(%)
0		0		6,094	6,094	39.56	39.56
1	20,000	1	32,400	887	6,981	5.76	45.32
20,001	40,000	32,401	64,800	627	7,608	4.07	49.39
40,001	60,000	64,801	97,200	485	8,093	3.15	52.54
60,001	80,000	97,201	129,600	511	8,604	3.32	55.86
80,001	100,000	129,601	162,000	526	9,130	3.41	59.27
100,001	120,000	162,001	194,400	421	9,551	2.73	62.00
120,001	140,000	194,401	226,800	315	9,866	2.04	64.05
140,001	160,000	226,801	259,200	287	10,153	1.86	65.91
160,001	180,000	259,201	291,600	283	10,436	1.84	67.75
180,001	200,000	291,601	324,000	231	10,667	1.50	69.25
200,001	220,000	324,001	356,400	224	10,891	1.45	70.70
220,001	240,000	356,401	388,800	196	11,087	1.27	71.97
240,001	260,000	388,801	421,200	184	11,271	1.19	73.17
260,001	280,000	421,201	453,600	170	11,441	1.10	74.27
280,001	300,000	453,601	486,000	138	11,579	0.90	75.17
300,001	320,000	486,001	518,400	139	11,718	0.90	76.07
320,001	340,000	518,401	550,800	121	11,839	0.79	76.86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06	11,945	0.69	77.54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09	12,054	0.71	78.25
380,001	400,000	615,601	648,000	96	12,150	0.62	78.88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01	12,251	0.66	79.53
420,001	440,000	680,401	712,800	98	12,349	0.64	80.17
440,001	460,000	712,801	745,200	83	12,432	0.54	80.71
460,001	480,000	745,201	777,600	86	12,518	0.56	81.26
480,001	500,000	777,601	810,000	82	12,600	0.53	81.80
500,001	520,000	810,001	842,400	73	12,673	0.47	82.27
520,001	540,000	842,401	874,800	71	12,744	0.46	82.73
540,001	560,000	874,801	907,200	69	12,813	0.45	83.18
560,001	580,000	907,201	939,600	62	12,875	0.40	83.58
580,001	600,000	939,601	972,000	53	12,928	0.34	83.93

구분				전체			
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기준(%)	누적(%)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72	13,000	0.47	84.39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55	13,055	0.36	84.75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59	13,114	0.38	85.13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45	13,159	0.29	85.43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46	13,205	0.30	85.72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50	13,255	0.32	86.05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45	13,300	0.29	86.34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48	13,348	0.31	86.65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47	13,395	0.31	86.96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59	13,454	0.38	87.34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46	13,500	0.30	87.64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49	13,549	0.32	87.96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32	13,581	0.21	88.17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67	13,648	0.43	88.60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34	13,682	0.22	88.82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40	13,722	0.26	89.08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37	13,759	0.24	89.32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40	13,799	0.26	89.58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34	13,833	0.22	89.80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31	13,864	0.20	90.00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69	13,933	0.45	90.45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69	14,002	0.45	90.90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65	14,067	0.42	91.32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47	14,114	0.31	91.63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54	14,168	0.35	91.98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50	14,218	0.32	92.30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52	14,270	0.34	92.64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63	14,333	0.41	93.05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1,071	15,404	6.95	100.00
전체		전체		15,404		100.00	

구분				가구원수	누적 가구원수	단독가구 노인	누적단독 가구노인	부부가구 노인	누적부부 가구노인	부부가구 (A)노인	누적 부부가구 (A)노인	부부가구 (B)노인	누적 부부가구 (B)노인
노인단독		노인부부											
0		0		7,594	7,594	4,594	4,594	2,745	2,745	255	255	2,490	2,490
1	20,000	1	32,400	1,299	8,893	475	5,069	760	3,505	64	319	696	3,186
20,001	40,000	32,401	64,800	941	9,834	313	5,382	567	4,072	61	380	506	3,692
40,001	60,000	64,801	97,200	722	10,556	248	5,630	433	4,505	41	421	392	4,084
60,001	80,000	97,201	129,600	798	11,354	224	5,854	517	5,022	57	478	460	4,544
80,001	100,000	129,601	162,000	783	12,137	269	6,123	460	5,482	54	532	406	4,950
100,001	120,000	162,001	194,400	659	12,796	183	6,306	418	5,900	58	590	360	5,310
120,001	140,000	194,401	226,800	503	13,299	127	6,433	336	6,236	40	630	296	5,606
140,001	160,000	226,801	259,200	462	13,761	112	6,545	310	6,546	40	670	270	5,876
160,001	180,000	259,201	291,600	477	14,238	89	6,634	348	6,894	40	710	308	6,184
180,001	200,000	291,601	324,000	395	14,633	67	6,701	288	7,182	40	750	248	6,432
200,001	220,000	324,001	356,400	375	15,008	73	6,774	259	7,441	43	793	216	6,648
220,001	240,000	356,401	388,800	322	15,330	70	6,844	228	7,669	24	817	204	6,852
240,001	260,000	388,801	421,200	306	15,636	62	6,906	215	7,884	29	846	186	7,038
260,001	280,000	421,201	453,600	290	15,926	50	6,956	206	8,090	34	880	172	7,210
280,001	300,000	453,601	486,000	220	16,146	56	7,012	140	8,230	24	904	116	7,326
300,001	320,000	486,001	518,400	235	16,381	43	7,055	171	8,401	21	925	150	7,476
320,001	340,000	518,401	550,800	205	16,586	37	7,092	147	8,548	21	946	126	7,602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77	16,763	35	7,127	125	8,673	17	963	108	7,710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83	16,946	35	7,162	123	8,796	25	988	98	7,808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61	17,107	31	7,193	108	8,904	22	1,010	86	7,894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70	17,277	32	7,225	119	9,023	19	1,029	100	7,994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70	17,447	26	7,251	122	9,145	22	1,051	100	8,094
440,001	460,000	712,801	745,200	144	17,591	22	7,273	106	9,251	16	1,067	90	8,184
460,001	480,000	745,201	777,600	146	17,737	26	7,299	101	9,352	19	1,086	82	8,266
480,001	500,000	777,601	810,000	137	17,874	27	7,326	94	9,446	16	1,102	78	8,344
500,001	520,000	810,001	842,400	129	18,003	17	7,343	97	9,543	15	1,117	82	8,426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36	18,139	6	7,349	112	9,655	18	1,135	94	8,520
540,001	560,000	874,801	907,200	120	18,259	18	7,367	89	9,744	13	1,148	76	8,596
560,001	580,000	907,201	939,600	112	18,371	12	7,379	89	9,833	11	1,159	78	8,674
580,001	600,000	939,601	972,000	95	18,466	11	7,390	72	9,905	12	1,171	60	8,734

구분				가구원수	누적 가구원수	단독가구 노인	누적단독 가구노인	부부가구 노인	누적부부 가구노인	부부가구 (A)노인	누적 부부가구 (A)노인	부부가구 (B)노인	누적 부부가구 (B)노인
노인단독		노인부부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130	18,596	14	7,404	94	9,999	22	1,193	72	8,806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94	18,690	16	7,420	64	10,063	14	1,207	50	8,856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100	18,790	18	7,438	72	10,135	10	1,217	62	8,918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80	18,870	10	7,448	54	10,189	16	1,233	38	8,956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80	18,950	12	7,460	55	10,244	13	1,246	42	8,998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88	19,038	12	7,472	68	10,312	8	1,254	60	9,058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76	19,114	14	7,486	51	10,363	11	1,265	40	9,098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85	19,199	11	7,497	60	10,423	14	1,279	46	9,144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78	19,277	16	7,513	52	10,475	10	1,289	42	9,186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92	19,369	26	7,539	57	10,532	9	1,298	48	9,234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76	19,445	16	7,555	51	10,583	9	1,307	42	9,276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77	19,522	21	7,576	47	10,630	9	1,316	38	9,314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53	19,575	11	7,587	33	10,663	9	1,325	24	9,338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91	19,666	43	7,630	41	10,704	7	1,332	34	9,372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62	19,728	6	7,636	48	10,752	8	1,340	40	9,412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67	19,795	13	7,649	45	10,797	9	1,349	36	9,448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67	19,862	7	7,656	48	10,845	12	1,361	36	9,484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70	19,932	10	7,666	49	10,894	11	1,372	38	9,522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56	19,988	12	7,678	35	10,929	9	1,381	26	9,548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47	20,035	15	7,693	24	10,953	8	1,389	16	9,564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115	20,150	23	7,716	76	11,029	16	1,405	60	9,624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116	20,266	22	7,738	76	11,105	18	1,423	58	9,682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106	20,372	24	7,762	63	11,168	19	1,442	44	9,726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81	20,453	13	7,775	57	11,225	11	1,453	46	9,772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92	20,545	16	7,791	66	11,291	10	1,463	56	9,828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84	20,629	16	7,807	57	11,348	11	1,474	46	9,874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82	20,711	22	7,829	48	11,396	12	1,486	36	9,910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109	20,820	17	7,846	72	11,468	20	1,506	52	9,962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1,824	22,644	318	8,164	1,276	12,744	230	1,736	1,046	11,008
전체		전체		22,644		8,164		12,744		1,736		11,008	

구분				노인수	누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누적(%)
노인단독		노인부부					
0		0		7,339	7,339	35.10	35.10
1	20,000	1	32,400	1,235	8,574	5.91	41.01
20,001	40,000	32,401	64,800	880	9,454	4.21	45.22
40,001	60,000	64,801	97,200	681	10,135	3.26	48.47
60,001	80,000	97,201	129,600	741	10,876	3.54	52.02
80,001	100,000	129,601	162,000	729	11,605	3.49	55.51
100,001	120,000	162,001	194,400	601	12,206	2.87	58.38
120,001	140,000	194,401	226,800	463	12,669	2.21	60.59
140,001	160,000	226,801	259,200	422	13,091	2.02	62.61
160,001	180,000	259,201	291,600	437	13,528	2.09	64.70
180,001	200,000	291,601	324,000	355	13,883	1.70	66.40
200,001	220,000	324,001	356,400	332	14,215	1.59	67.99
220,001	240,000	356,401	388,800	298	14,513	1.43	69.41
240,001	260,000	388,801	421,200	277	14,790	1.32	70.74
260,001	280,000	421,201	453,600	256	15,046	1.22	71.96
280,001	300,000	453,601	486,000	196	15,242	0.94	72.90
300,001	320,000	486,001	518,400	214	15,456	1.02	73.92
320,001	340,000	518,401	550,800	184	15,640	0.88	74.80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60	15,800	0.77	75.57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58	15,958	0.76	76.32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39	16,097	0.66	76.99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51	16,248	0.72	77.71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48	16,396	0.71	78.42
440,001	460,000	712,801	745,200	128	16,524	0.61	79.03
460,001	480,000	745,201	777,600	127	16,651	0.61	79.64
480,001	500,000	777,601	810,000	121	16,772	0.58	80.22
500,001	520,000	810,001	842,400	114	16,886	0.55	80.76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18	17,004	0.56	81.33
540,001	560,000	874,801	907,200	107	17,111	0.51	81.84
560,001	580,000	907,201	939,600	101	17,212	0.48	82.32
580,001	600,000	939,601	972,000	83	17,295	0.40	82.72

구분				노인수	누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누적(%)
노인단독		노인부부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108	17,403	0.52	83.24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80	17,483	0.38	83.62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90	17,573	0.43	84.05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64	17,637	0.31	84.36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67	17,704	0.32	84.68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80	17,784	0.38	85.06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65	17,849	0.31	85.37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71	17,920	0.34	85.71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68	17,988	0.33	86.03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83	18,071	0.40	86.43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67	18,138	0.32	86.75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68	18,206	0.33	87.08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44	18,250	0.21	87.29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84	18,334	0.40	87.69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54	18,388	0.26	87.95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58	18,446	0.28	88.22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55	18,501	0.26	88.49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59	18,560	0.28	88.77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47	18,607	0.22	88.99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39	18,646	0.19	89.18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99	18,745	0.47	89.65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98	18,843	0.47	90.12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87	18,930	0.42	90.54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70	19,000	0.33	90.87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82	19,082	0.39	91.27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73	19,155	0.35	91.62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70	19,225	0.33	91.95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89	19,314	0.43	92.38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1,594	20,908	7.62	100.00
전체		전체		20,908		100.00	

〈부표 3-2〉 재산의 소득환산률 6% 적용시 노인의 가구형태별 소득인정액 분포

구분		노인단독					
노인단독(원)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4,594	4,594	56.27	56.27	29.82	29.82
1	20,000	439	5,033	5.38	61.65	2.85	32.67
20,001	40,000	287	5,320	3.52	65.16	1.86	34.54
40,001	60,000	230	5,550	2.82	67.98	1.49	36.03
60,001	80,000	192	5,742	2.35	70.33	1.25	37.28
80,001	100,000	287	6,029	3.52	73.85	1.86	39.14
100,001	120,000	169	6,198	2.07	75.92	1.10	40.24
120,001	140,000	151	6,349	1.85	77.77	0.98	41.22
140,001	160,000	100	6,449	1.22	78.99	0.65	41.87
160,001	180,000	95	6,544	1.16	80.16	0.62	42.48
180,001	200,000	74	6,618	0.91	81.06	0.48	42.96
200,001	220,000	71	6,689	0.87	81.93	0.46	43.42
220,001	240,000	55	6,744	0.67	82.61	0.36	43.78
240,001	260,000	60	6,804	0.73	83.34	0.39	44.17
260,001	280,000	54	6,858	0.66	84.00	0.35	44.52
280,001	300,000	55	6,913	0.67	84.68	0.36	44.88
300,001	320,000	50	6,963	0.61	85.29	0.32	45.20
320,001	340,000	41	7,004	0.50	85.79	0.27	45.47
340,001	360,000	44	7,048	0.54	86.33	0.29	45.75
360,001	380,000	36	7,084	0.44	86.77	0.23	45.99
380,001	400,000	34	7,118	0.42	87.19	0.22	46.21
400,001	420,000	30	7,148	0.37	87.56	0.19	46.40
420,001	440,000	21	7,169	0.26	87.81	0.14	46.54
440,001	460,000	24	7,193	0.29	88.11	0.16	46.70
460,001	480,000	25	7,218	0.31	88.41	0.16	46.86
480,001	500,000	32	7,250	0.39	88.80	0.21	47.07
500,001	520,000	19	7,269	0.23	89.04	0.12	47.19
520,001	540,000	17	7,286	0.21	89.25	0.11	47.30
540,001	560,000	18	7,304	0.22	89.47	0.12	47.42
560,001	580,000	18	7,322	0.22	89.69	0.12	47.53
580,001	600,000	19	7,341	0.23	89.92	0.12	47.66

구분		노인단독					
노인단독(원)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600,001	620,000	13	7,354	0.16	90.08	0.08	47.74
620,001	640,000	12	7,366	0.15	90.23	0.08	47.82
640,001	660,000	17	7,383	0.21	90.43	0.11	47.93
660,001	680,000	14	7,397	0.17	90.61	0.09	48.02
680,001	700,000	12	7,409	0.15	90.75	0.08	48.10
700,001	720,000	8	7,417	0.10	90.85	0.05	48.15
720,001	740,000	22	7,439	0.27	91.12	0.14	48.29
740,001	760,000	16	7,455	0.20	91.32	0.10	48.40
760,001	780,000	12	7,467	0.15	91.46	0.08	48.47
780,001	800,000	23	7,490	0.28	91.74	0.15	48.62
800,001	820,000	7	7,497	0.09	91.83	0.05	48.67
820,001	840,000	14	7,511	0.17	92.00	0.09	48.76
840,001	860,000	13	7,524	0.16	92.16	0.08	48.84
860,001	880,000	47	7,571	0.58	92.74	0.31	49.15
880,001	900,000	14	7,585	0.17	92.91	0.09	49.24
900,001	920,000	16	7,601	0.20	93.10	0.10	49.34
920,001	940,000	12	7,613	0.15	93.25	0.08	49.42
940,001	960,000	11	7,624	0.13	93.39	0.07	49.49
960,001	980,000	18	7,642	0.22	93.61	0.12	49.61
980,001	1,000,000	14	7,656	0.17	93.78	0.09	49.70
1,000,001	1,050,000	21	7,677	0.26	94.03	0.14	49.84
1,050,001	1,100,000	25	7,702	0.31	94.34	0.16	50.00
1,100,001	1,150,000	19	7,721	0.23	94.57	0.12	50.12
1,150,001	1,200,000	20	7,741	0.24	94.82	0.13	50.25
1,200,001	1,250,000	15	7,756	0.18	95.00	0.10	50.35
1,250,001	1,300,000	15	7,771	0.18	95.19	0.10	50.45
1,300,001	1,350,000	13	7,784	0.16	95.35	0.08	50.53
1,350,001	1,400,000	21	7,805	0.26	95.60	0.14	50.67
1,400,000 초과		359	8,164	4.40	100.00	2.33	53.00
전체		8,164		100.00		53.00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255	255	14.69	14.69	1.66	1.66
1	32,400	58	313	3.34	18.03	0.38	2.03
32,401	64,800	48	361	2.76	20.79	0.31	2.34
64,801	97,200	47	408	2.71	23.50	0.31	2.65
97,201	129,600	52	460	3.00	26.50	0.34	2.99
129,601	162,000	53	513	3.05	29.55	0.34	3.33
162,001	194,400	42	555	2.42	31.97	0.27	3.60
194,401	226,800	46	601	2.65	34.62	0.30	3.90
226,801	259,200	37	638	2.13	36.75	0.24	4.14
259,201	291,600	30	668	1.73	38.48	0.19	4.34
291,601	324,000	41	709	2.36	40.84	0.27	4.60
324,001	356,400	35	744	2.02	42.86	0.23	4.83
356,401	388,800	35	779	2.02	44.87	0.23	5.06
388,801	421,200	32	811	1.84	46.72	0.21	5.26
421,201	453,600	18	829	1.04	47.75	0.12	5.38
453,601	486,000	30	859	1.73	49.48	0.19	5.58
486,001	518,400	27	886	1.56	51.04	0.18	5.75
518,401	550,800	18	904	1.04	52.07	0.12	5.87
550,801	583,200	20	924	1.15	53.23	0.13	6.00
583,201	615,600	20	944	1.15	54.38	0.13	6.13
615,601	648,000	26	970	1.50	55.88	0.17	6.30
648,001	680,400	14	984	0.81	56.68	0.09	6.39
680,401	712,800	28	1,012	1.61	58.29	0.18	6.57
712,801	745,200	17	1,029	0.98	59.27	0.11	6.68
745,201	777,600	20	1,049	1.15	60.43	0.13	6.81
777,601	810,000	15	1,064	0.86	61.29	0.10	6.91
810,001	842,400	17	1,081	0.98	62.27	0.11	7.02
842,401	874,800	19	1,100	1.09	63.36	0.12	7.14
874,801	907,200	10	1,110	0.58	63.94	0.06	7.21
907,201	939,600	11	1,121	0.63	64.57	0.07	7.28
939,601	972,000	20	1,141	1.15	65.73	0.13	7.41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972,001	1,004,400	15	1,156	0.86	66.59	0.10	7.50
1,004,401	1,036,800	18	1,174	1.04	67.63	0.12	7.62
1,036,801	1,069,200	10	1,184	0.58	68.20	0.06	7.69
1,069,201	1,101,600	18	1,202	1.04	69.24	0.12	7.80
1,101,601	1,134,000	14	1,216	0.81	70.05	0.09	7.89
1,134,001	1,166,400	4	1,220	0.23	70.28	0.03	7.92
1,166,401	1,198,800	13	1,233	0.75	71.03	0.08	8.00
1,198,801	1,231,200	16	1,249	0.92	71.95	0.10	8.11
1,231,201	1,263,600	10	1,259	0.58	72.52	0.06	8.17
1,263,601	1,296,000	16	1,275	0.92	73.44	0.10	8.28
1,296,001	1,328,400	10	1,285	0.58	74.02	0.06	8.34
1,328,401	1,360,800	11	1,296	0.63	74.65	0.07	8.41
1,360,801	1,393,200	5	1,301	0.29	74.94	0.03	8.45
1,393,201	1,425,600	7	1,308	0.40	75.35	0.05	8.49
1,425,601	1,458,000	8	1,316	0.46	75.81	0.05	8.54
1,458,001	1,490,400	5	1,321	0.29	76.09	0.03	8.58
1,490,401	1,522,800	5	1,326	0.29	76.38	0.03	8.61
1,522,801	1,555,200	10	1,336	0.58	76.96	0.06	8.67
1,555,201	1,587,600	15	1,351	0.86	77.82	0.10	8.77
1,587,601	1,620,000	7	1,358	0.40	78.23	0.05	8.82
1,620,001	1,701,000	17	1,375	0.98	79.21	0.11	8.93
1,701,001	1,782,000	19	1,394	1.09	80.30	0.12	9.05
1,782,001	1,863,000	21	1,415	1.21	81.51	0.14	9.19
1,863,001	1,944,000	16	1,431	0.92	82.43	0.10	9.29
1,944,001	2,025,000	13	1,444	0.75	83.18	0.08	9.37
2,025,001	2,106,000	15	1,459	0.86	84.04	0.10	9.47
2,106,001	2,187,000	13	1,472	0.75	84.79	0.08	9.56
2,187,001	2,268,000	5	1,477	0.29	85.08	0.03	9.59
2,268,000 초과		259	1,736	14.92	100.00	1.68	11.27
전체		1,736		100.00		11.27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1,246	1,246	22.64	22.64	8.09	8.09
1	32,400	313	1,559	5.69	28.32	2.03	10.12
32,401	64,800	209	1,768	3.80	32.12	1.36	11.48
64,801	97,200	183	1,951	3.32	35.45	1.19	12.67
97,201	129,600	217	2,168	3.94	39.39	1.41	14.07
129,601	162,000	182	2,350	3.31	42.70	1.18	15.26
162,001	194,400	173	2,523	3.14	45.84	1.12	16.38
194,401	226,800	148	2,671	2.69	48.53	0.96	17.34
226,801	259,200	149	2,820	2.71	51.24	0.97	18.31
259,201	291,600	113	2,933	2.05	53.29	0.73	19.04
291,601	324,000	123	3,056	2.23	55.52	0.80	19.84
324,001	356,400	118	3,174	2.14	57.67	0.77	20.61
356,401	388,800	87	3,261	1.58	59.25	0.56	21.17
388,801	421,200	93	3,354	1.69	60.94	0.60	21.77
421,201	453,600	99	3,453	1.80	62.74	0.64	22.42
453,601	486,000	68	3,521	1.24	63.97	0.44	22.86
486,001	518,400	73	3,594	1.33	65.30	0.47	23.33
518,401	550,800	67	3,661	1.22	66.52	0.43	23.77
550,801	583,200	51	3,712	0.93	67.44	0.33	24.10
583,201	615,600	50	3,762	0.91	68.35	0.32	24.42
615,601	648,000	60	3,822	1.09	69.44	0.39	24.81
648,001	680,400	45	3,867	0.82	70.26	0.29	25.10
680,401	712,800	49	3,916	0.89	71.15	0.32	25.42
712,801	745,200	43	3,959	0.78	71.93	0.28	25.70
745,201	777,600	41	4,000	0.74	72.67	0.27	25.97
777,601	810,000	49	4,049	0.89	73.56	0.32	26.29
810,001	842,400	40	4,089	0.73	74.29	0.26	26.55
842,401	874,800	51	4,140	0.93	75.22	0.33	26.88
874,801	907,200	33	4,173	0.60	75.82	0.21	27.09
907,201	939,600	42	4,215	0.76	76.58	0.27	27.36
939,601	972,000	26	4,241	0.47	77.05	0.17	27.53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972,001	1,004,400	42	4,283	0.76	77.82	0.27	27.80
1,004,401	1,036,800	36	4,319	0.65	78.47	0.23	28.04
1,036,801	1,069,200	35	4,354	0.64	79.11	0.23	28.27
1,069,201	1,101,600	37	4,391	0.67	79.78	0.24	28.51
1,101,601	1,134,000	25	4,416	0.45	80.23	0.16	28.67
1,134,001	1,166,400	27	4,443	0.49	80.72	0.18	28.84
1,166,401	1,198,800	20	4,463	0.36	81.09	0.13	28.97
1,198,801	1,231,200	25	4,488	0.45	81.54	0.16	29.14
1,231,201	1,263,600	28	4,516	0.51	82.05	0.18	29.32
1,263,601	1,296,000	22	4,538	0.40	82.45	0.14	29.46
1,296,001	1,328,400	19	4,557	0.35	82.79	0.12	29.58
1,328,401	1,360,800	21	4,578	0.38	83.18	0.14	29.72
1,360,801	1,393,200	18	4,596	0.33	83.50	0.12	29.84
1,393,201	1,425,600	17	4,613	0.31	83.81	0.11	29.95
1,425,601	1,458,000	19	4,632	0.35	84.16	0.12	30.07
1,458,001	1,490,400	10	4,642	0.18	84.34	0.06	30.14
1,490,401	1,522,800	21	4,663	0.38	84.72	0.14	30.27
1,522,801	1,555,200	26	4,689	0.47	85.19	0.17	30.44
1,555,201	1,587,600	18	4,707	0.33	85.52	0.12	30.56
1,587,601	1,620,000	10	4,717	0.18	85.70	0.06	30.62
1,620,001	1,701,000	34	4,751	0.62	86.32	0.22	30.84
1,701,001	1,782,000	36	4,787	0.65	86.97	0.23	31.08
1,782,001	1,863,000	26	4,813	0.47	87.45	0.17	31.25
1,863,001	1,944,000	38	4,851	0.69	88.14	0.25	31.49
1,944,001	2,025,000	26	4,877	0.47	88.61	0.17	31.66
2,025,001	2,106,000	20	4,897	0.36	88.97	0.13	31.79
2,106,001	2,187,000	18	4,915	0.33	89.30	0.12	31.91
2,187,001	2,268,000	20	4,935	0.36	89.66	0.13	32.04
2,268,000 초과		569	5,504	10.34	100.00	3.69	35.73
전체		5,504		100.00		35.73	

구분				전체			
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전 가구기준(%)	누적(%)
0		0		6,095	6,095	39.57	39.57
1	20,000	1	32,400	810	6,905	5.26	44.83
20,001	40,000	32,401	64,800	544	7,449	3.53	48.36
40,001	60,000	64,801	97,200	460	7,909	2.99	51.34
60,001	80,000	97,201	129,600	461	8,370	2.99	54.34
80,001	100,000	129,601	162,000	522	8,892	3.39	57.73
100,001	120,000	162,001	194,400	384	9,276	2.49	60.22
120,001	140,000	194,401	226,800	345	9,621	2.24	62.46
140,001	160,000	226,801	259,200	286	9,907	1.86	64.31
160,001	180,000	259,201	291,600	238	10,145	1.55	65.86
180,001	200,000	291,601	324,000	238	10,383	1.55	67.40
200,001	220,000	324,001	356,400	224	10,607	1.45	68.86
220,001	240,000	356,401	388,800	177	10,784	1.15	70.01
240,001	260,000	388,801	421,200	185	10,969	1.20	71.21
260,001	280,000	421,201	453,600	171	11,140	1.11	72.32
280,001	300,000	453,601	486,000	153	11,293	0.99	73.31
300,001	320,000	486,001	518,400	150	11,443	0.97	74.29
320,001	340,000	518,401	550,800	126	11,569	0.82	75.10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15	11,684	0.75	75.85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06	11,790	0.69	76.54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20	11,910	0.78	77.32
400,001	420,000	648,001	680,400	89	11,999	0.58	77.90
420,001	440,000	680,401	712,800	98	12,097	0.64	78.53
440,001	460,000	712,801	745,200	84	12,181	0.55	79.08
460,001	480,000	745,201	777,600	86	12,267	0.56	79.64
480,001	500,000	777,601	810,000	96	12,363	0.62	80.26
500,001	520,000	810,001	842,400	76	12,439	0.49	80.75
520,001	540,000	842,401	874,800	87	12,526	0.56	81.32
540,001	560,000	874,801	907,200	61	12,587	0.40	81.71
560,001	580,000	907,201	939,600	71	12,658	0.46	82.17
580,001	600,000	939,601	972,000	65	12,723	0.42	82.60

구분				전체			
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70	12,793	0.45	83.05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66	12,859	0.43	83.48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62	12,921	0.40	83.88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69	12,990	0.45	84.33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51	13,041	0.33	84.66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39	13,080	0.25	84.91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55	13,135	0.36	85.27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57	13,192	0.37	85.64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50	13,242	0.32	85.96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61	13,303	0.40	86.36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36	13,339	0.23	86.59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46	13,385	0.30	86.89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36	13,421	0.23	87.13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71	13,492	0.46	87.59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41	13,533	0.27	87.85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31	13,564	0.20	88.06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38	13,602	0.25	88.30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47	13,649	0.31	88.61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51	13,700	0.33	88.94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31	13,731	0.20	89.14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72	13,803	0.47	89.61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80	13,883	0.52	90.13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66	13,949	0.43	90.55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74	14,023	0.48	91.03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54	14,077	0.35	91.39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50	14,127	0.32	91.71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44	14,171	0.29	92.00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46	14,217	0.30	92.29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1,187	15,404	7.71	100.00
전체		전체		15,404		100.00	

구분				가구원수	누적 가구원수	단독가구 노인	누적단독 가구노인	부부가구 노인	누적부부 가구노인	부부가구 (A)노인	누적 부부가구 (A)노인	부부가구 (B)노인	누적 부부가구 (B)노인
노인단독		노인부부											
0		0		7,596	7,596	4,594	4,594	2,747	2,747	255	255	2,492	2,492
1	20,000	1	32,400	1,181	8,777	439	5,033	684	3,431	58	313	626	3,118
20,001	40,000	32,401	64,800	801	9,578	287	5,320	466	3,897	48	361	418	3,536
40,001	60,000	64,801	97,200	690	10,268	230	5,550	413	4,310	47	408	366	3,902
60,001	80,000	97,201	129,600	730	10,998	192	5,742	486	4,796	52	460	434	4,336
80,001	100,000	129,601	162,000	757	11,755	287	6,029	417	5,213	53	513	364	4,700
100,001	120,000	162,001	194,400	599	12,354	169	6,198	388	5,601	42	555	346	5,046
120,001	140,000	194,401	226,800	539	12,893	151	6,349	342	5,943	46	601	296	5,342
140,001	160,000	226,801	259,200	472	13,365	100	6,449	335	6,278	37	638	298	5,640
160,001	180,000	259,201	291,600	381	13,746	95	6,544	256	6,534	30	668	226	5,866
180,001	200,000	291,601	324,000	402	14,148	74	6,618	287	6,821	41	709	246	6,112
200,001	220,000	324,001	356,400	377	14,525	71	6,689	271	7,092	35	744	236	6,348
220,001	240,000	356,401	388,800	299	14,824	55	6,744	209	7,301	35	779	174	6,522
240,001	260,000	388,801	421,200	310	15,134	60	6,804	218	7,519	32	811	186	6,708
260,001	280,000	421,201	453,600	288	15,422	54	6,858	216	7,735	18	829	198	6,906
280,001	300,000	453,601	486,000	251	15,673	55	6,913	166	7,901	30	859	136	7,042
300,001	320,000	486,001	518,400	250	15,923	50	6,963	173	8,074	27	886	146	7,188
320,001	340,000	518,401	550,800	211	16,134	41	7,004	152	8,226	18	904	134	7,322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86	16,320	44	7,048	122	8,348	20	924	102	7,424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76	16,496	36	7,084	120	8,468	20	944	100	7,524
380,001	400,000	615,601	648,000	206	16,702	34	7,118	146	8,614	26	970	120	7,644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48	16,850	30	7,148	104	8,718	14	984	90	7,734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75	17,025	21	7,169	126	8,844	28	1,012	98	7,832
440,001	460,000	712,801	745,200	144	17,169	24	7,193	103	8,947	17	1,029	86	7,918
460,001	480,000	745,201	777,600	147	17,316	25	7,218	102	9,049	20	1,049	82	8,000
480,001	500,000	777,601	810,000	160	17,476	32	7,250	113	9,162	15	1,064	98	8,098
500,001	520,000	810,001	842,400	133	17,609	19	7,269	97	9,259	17	1,081	80	8,178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57	17,766	17	7,286	121	9,380	19	1,100	102	8,280
540,001	560,000	874,801	907,200	104	17,870	18	7,304	76	9,456	10	1,110	66	8,346
560,001	580,000	907,201	939,600	124	17,994	18	7,322	95	9,551	11	1,121	84	8,430
580,001	600,000	939,601	972,000	111	18,105	19	7,341	72	9,623	20	1,141	52	8,482

구분				가구원 수	누적 가구원 수	단독가구 노인	누적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노인	누적 부부가구 노인	부부가구 (A)노인	누적 부부가구 (A)노인	부부가구 (B)노인	누적 부부가구 (B)노인
노인단독		노인부부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127	18,232	13	7,354	99	9,722	15	1,156	84	8,566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120	18,352	12	7,366	90	9,812	18	1,174	72	8,638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107	18,459	17	7,383	80	9,892	10	1,184	70	8,708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124	18,583	14	7,397	92	9,984	18	1,202	74	8,782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90	18,673	12	7,409	64	10,048	14	1,216	50	8,832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70	18,743	8	7,417	58	10,106	4	1,220	54	8,886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88	18,831	22	7,439	53	10,159	13	1,233	40	8,926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98	18,929	16	7,455	66	10,225	16	1,249	50	8,976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88	19,017	12	7,467	66	10,291	10	1,259	56	9,032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99	19,116	23	7,490	60	10,351	16	1,275	44	9,076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65	19,181	7	7,497	48	10,399	10	1,285	38	9,114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78	19,259	14	7,511	53	10,452	11	1,296	42	9,156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59	19,318	13	7,524	41	10,493	5	1,301	36	9,192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95	19,413	47	7,571	41	10,534	7	1,308	34	9,226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68	19,481	14	7,585	46	10,580	8	1,316	38	9,264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46	19,527	16	7,601	25	10,605	5	1,321	20	9,284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64	19,591	12	7,613	47	10,652	5	1,326	42	9,326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83	19,674	11	7,624	62	10,714	10	1,336	52	9,378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84	19,758	18	7,642	51	10,765	15	1,351	36	9,414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48	19,806	14	7,656	27	10,792	7	1,358	20	9,434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123	19,929	21	7,677	85	10,877	17	1,375	68	9,502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135	20,064	25	7,702	91	10,968	19	1,394	72	9,574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113	20,177	19	7,721	73	11,041	21	1,415	52	9,626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128	20,305	20	7,741	92	11,133	16	1,431	76	9,702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93	20,398	15	7,756	65	11,198	13	1,444	52	9,754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85	20,483	15	7,771	55	11,253	15	1,459	40	9,794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75	20,558	13	7,784	49	11,302	13	1,472	36	9,830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71	20,629	21	7,805	45	11,347	5	1,477	40	9,870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2,015	22,644	359	8,164	1,397	12,744	259	1,736	1,138	11,008
전체		전체		22,644		8,164		12,744		1,736		11,008	

구분				노인수	누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누적(%)
노인단독		노인부부					
0		0		7,341	7,341	35.11	35.11
1	20,000	1	32,400	1,123	8,464	5.37	40.48
20,001	40,000	32,401	64,800	753	9,217	3.60	44.08
40,001	60,000	64,801	97,200	643	9,860	3.08	47.16
60,001	80,000	97,201	129,600	678	10,538	3.24	50.40
80,001	100,000	129,601	162,000	704	11,242	3.37	53.77
100,001	120,000	162,001	194,400	557	11,799	2.66	56.43
120,001	140,000	194,401	226,800	493	12,292	2.36	58.79
140,001	160,000	226,801	259,200	435	12,727	2.08	60.87
160,001	180,000	259,201	291,600	351	13,078	1.68	62.55
180,001	200,000	291,601	324,000	361	13,439	1.73	64.28
200,001	220,000	324,001	356,400	342	13,781	1.64	65.91
220,001	240,000	356,401	388,800	264	14,045	1.26	67.18
240,001	260,000	388,801	421,200	278	14,323	1.33	68.50
260,001	280,000	421,201	453,600	270	14,593	1.29	69.80
280,001	300,000	453,601	486,000	221	14,814	1.06	70.85
300,001	320,000	486,001	518,400	223	15,037	1.07	71.92
320,001	340,000	518,401	550,800	193	15,230	0.92	72.84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66	15,396	0.79	73.64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56	15,552	0.75	74.38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80	15,732	0.86	75.24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34	15,866	0.64	75.88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47	16,013	0.70	76.59
440,001	460,000	712,801	745,200	127	16,140	0.61	77.20
460,001	480,000	745,201	777,600	127	16,267	0.61	77.80
480,001	500,000	777,601	810,000	145	16,412	0.69	78.50
500,001	520,000	810,001	842,400	116	16,528	0.55	79.05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38	16,666	0.66	79.71
540,001	560,000	874,801	907,200	94	16,760	0.45	80.16
560,001	580,000	907,201	939,600	113	16,873	0.54	80.70
580,001	600,000	939,601	972,000	91	16,964	0.44	81.14

구분				노인수	누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누적(%)
노인단독		노인부부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112	17,076	0.54	81.67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102	17,178	0.49	82.16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97	17,275	0.46	82.62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106	17,381	0.51	83.13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76	17,457	0.36	83.49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66	17,523	0.32	83.81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75	17,598	0.36	84.17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82	17,680	0.39	84.56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78	17,758	0.37	84.93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83	17,841	0.40	85.33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55	17,896	0.26	85.59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67	17,963	0.32	85.91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54	18,017	0.26	86.17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88	18,105	0.42	86.59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60	18,165	0.29	86.88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41	18,206	0.20	87.08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59	18,265	0.28	87.36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73	18,338	0.35	87.71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69	18,407	0.33	88.04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41	18,448	0.20	88.23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106	18,554	0.51	88.74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116	18,670	0.55	89.30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92	18,762	0.44	89.74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112	18,874	0.54	90.27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80	18,954	0.38	90.65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70	19,024	0.33	90.99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62	19,086	0.30	91.29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66	19,152	0.32	91.60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1,756	20,908	8.40	100.00
전체		전체		20,908		100.00	

〈부표 3-3〉 재산의 소득환산률 7% 적용시 노인의 가구형태별 소득인정액 분포

구분		노인단독					
노인단독(원)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4,594	4,594	56.27	56.27	29.82	29.82
1	20,000	404	4,998	4.95	61.22	2.62	32.45
20,001	40,000	249	5,247	3.05	64.27	1.62	34.06
40,001	60,000	220	5,467	2.69	66.96	1.43	35.49
60,001	80,000	183	5,650	2.24	69.21	1.19	36.68
80,001	100,000	257	5,907	3.15	72.35	1.67	38.35
100,001	120,000	214	6,121	2.62	74.98	1.39	39.74
120,001	140,000	124	6,245	1.52	76.49	0.80	40.54
140,001	160,000	130	6,375	1.59	78.09	0.84	41.39
160,001	180,000	98	6,473	1.20	79.29	0.64	42.02
180,001	200,000	55	6,528	0.67	79.96	0.36	42.38
200,001	220,000	79	6,607	0.97	80.93	0.51	42.89
220,001	240,000	67	6,674	0.82	81.75	0.43	43.33
240,001	260,000	53	6,727	0.65	82.40	0.34	43.67
260,001	280,000	47	6,774	0.58	82.97	0.31	43.98
280,001	300,000	54	6,828	0.66	83.64	0.35	44.33
300,001	320,000	43	6,871	0.53	84.16	0.28	44.61
320,001	340,000	44	6,915	0.54	84.70	0.29	44.89
340,001	360,000	53	6,968	0.65	85.35	0.34	45.24
360,001	380,000	44	7,012	0.54	85.89	0.29	45.52
380,001	400,000	33	7,045	0.40	86.29	0.21	45.73
400,001	420,000	34	7,079	0.42	86.71	0.22	45.96
420,001	440,000	31	7,110	0.38	87.09	0.20	46.16
440,001	460,000	18	7,128	0.22	87.31	0.12	46.27
460,001	480,000	24	7,152	0.29	87.60	0.16	46.43
480,001	500,000	24	7,176	0.29	87.90	0.16	46.59
500,001	520,000	20	7,196	0.24	88.14	0.13	46.72
520,001	540,000	18	7,214	0.22	88.36	0.12	46.83
540,001	560,000	22	7,236	0.27	88.63	0.14	46.97
560,001	580,000	19	7,255	0.23	88.87	0.12	47.10
580,001	600,000	24	7,279	0.29	89.16	0.16	47.25

구분		노인단독					
노인단독(원)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600,001	620,000	12	7,291	0.15	89.31	0.08	47.33
620,001	640,000	18	7,309	0.22	89.53	0.12	47.45
640,001	660,000	24	7,333	0.29	89.82	0.16	47.60
660,001	680,000	13	7,346	0.16	89.98	0.08	47.69
680,001	700,000	20	7,366	0.24	90.23	0.13	47.82
700,001	720,000	11	7,377	0.13	90.36	0.07	47.89
720,001	740,000	15	7,392	0.18	90.54	0.10	47.99
740,001	760,000	13	7,405	0.16	90.70	0.08	48.07
760,001	780,000	15	7,420	0.18	90.89	0.10	48.17
780,001	800,000	26	7,446	0.32	91.21	0.17	48.34
800,001	820,000	10	7,456	0.12	91.33	0.06	48.40
820,001	840,000	13	7,469	0.16	91.49	0.08	48.49
840,001	860,000	17	7,486	0.21	91.70	0.11	48.60
860,001	880,000	48	7,534	0.59	92.28	0.31	48.91
880,001	900,000	9	7,543	0.11	92.39	0.06	48.97
900,001	920,000	10	7,553	0.12	92.52	0.06	49.03
920,001	940,000	12	7,565	0.15	92.66	0.08	49.11
940,001	960,000	11	7,576	0.13	92.80	0.07	49.18
960,001	980,000	14	7,590	0.17	92.97	0.09	49.27
980,001	1,000,000	15	7,605	0.18	93.15	0.10	49.37
1,000,001	1,050,000	24	7,629	0.29	93.45	0.16	49.53
1,050,001	1,100,000	34	7,663	0.42	93.86	0.22	49.75
1,100,001	1,150,000	23	7,686	0.28	94.15	0.15	49.90
1,150,001	1,200,000	22	7,708	0.27	94.41	0.14	50.04
1,200,001	1,250,000	14	7,722	0.17	94.59	0.09	50.13
1,250,001	1,300,000	20	7,742	0.24	94.83	0.13	50.26
1,300,001	1,350,000	15	7,757	0.18	95.01	0.10	50.36
1,350,001	1,400,000	16	7,773	0.20	95.21	0.10	50.46
1,400,000 초과		391	8,164	4.79	100.00	2.54	53.00
전체		8,164		100.00		53.00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255	255	14.69	14.69	1.66	1.66
1	32,400	51	306	2.94	17.63	0.33	1.99
32,401	64,800	43	349	2.48	20.10	0.28	2.27
64,801	97,200	45	394	2.59	22.70	0.29	2.56
97,201	129,600	50	444	2.88	25.58	0.32	2.88
129,601	162,000	47	491	2.71	28.28	0.31	3.19
162,001	194,400	40	531	2.30	30.59	0.26	3.45
194,401	226,800	36	567	2.07	32.66	0.23	3.68
226,801	259,200	47	614	2.71	35.37	0.31	3.99
259,201	291,600	27	641	1.56	36.92	0.18	4.16
291,601	324,000	37	678	2.13	39.06	0.24	4.40
324,001	356,400	35	713	2.02	41.07	0.23	4.63
356,401	388,800	29	742	1.67	42.74	0.19	4.82
388,801	421,200	26	768	1.50	44.24	0.17	4.99
421,201	453,600	31	799	1.79	46.03	0.20	5.19
453,601	486,000	25	824	1.44	47.47	0.16	5.35
486,001	518,400	17	841	0.98	48.44	0.11	5.46
518,401	550,800	26	867	1.50	49.94	0.17	5.63
550,801	583,200	24	891	1.38	51.32	0.16	5.78
583,201	615,600	17	908	0.98	52.30	0.11	5.89
615,601	648,000	20	928	1.15	53.46	0.13	6.02
648,001	680,400	18	946	1.04	54.49	0.12	6.14
680,401	712,800	27	973	1.56	56.05	0.18	6.32
712,801	745,200	20	993	1.15	57.20	0.13	6.45
745,201	777,600	19	1,012	1.09	58.29	0.12	6.57
777,601	810,000	20	1,032	1.15	59.45	0.13	6.70
810,001	842,400	15	1,047	0.86	60.31	0.10	6.80
842,401	874,800	17	1,064	0.98	61.29	0.11	6.91
874,801	907,200	14	1,078	0.81	62.10	0.09	7.00
907,201	939,600	18	1,096	1.04	63.13	0.12	7.12
939,601	972,000	16	1,112	0.92	64.06	0.10	7.22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972,001	1,004,400	17	1,129	0.98	65.03	0.11	7.33
1,004,401	1,036,800	11	1,140	0.63	65.67	0.07	7.40
1,036,801	1,069,200	11	1,151	0.63	66.30	0.07	7.47
1,069,201	1,101,600	17	1,168	0.98	67.28	0.11	7.58
1,101,601	1,134,000	14	1,182	0.81	68.09	0.09	7.67
1,134,001	1,166,400	14	1,196	0.81	68.89	0.09	7.76
1,166,401	1,198,800	11	1,207	0.63	69.53	0.07	7.84
1,198,801	1,231,200	16	1,223	0.92	70.45	0.10	7.94
1,231,201	1,263,600	14	1,237	0.81	71.26	0.09	8.03
1,263,601	1,296,000	5	1,242	0.29	71.54	0.03	8.06
1,296,001	1,328,400	8	1,250	0.46	72.00	0.05	8.11
1,328,401	1,360,800	10	1,260	0.58	72.58	0.06	8.18
1,360,801	1,393,200	9	1,269	0.52	73.10	0.06	8.24
1,393,201	1,425,600	17	1,286	0.98	74.08	0.11	8.35
1,425,601	1,458,000	9	1,295	0.52	74.60	0.06	8.41
1,458,001	1,490,400	13	1,308	0.75	75.35	0.08	8.49
1,490,401	1,522,800	2	1,310	0.12	75.46	0.01	8.50
1,522,801	1,555,200	8	1,318	0.46	75.92	0.05	8.56
1,555,201	1,587,600	9	1,327	0.52	76.44	0.06	8.61
1,587,601	1,620,000	2	1,329	0.12	76.56	0.01	8.63
1,620,001	1,701,000	23	1,352	1.32	77.88	0.15	8.78
1,701,001	1,782,000	22	1,374	1.27	79.15	0.14	8.92
1,782,001	1,863,000	12	1,386	0.69	79.84	0.08	9.00
1,863,001	1,944,000	14	1,400	0.81	80.65	0.09	9.09
1,944,001	2,025,000	16	1,416	0.92	81.57	0.10	9.19
2,025,001	2,106,000	16	1,432	0.92	82.49	0.10	9.30
2,106,001	2,187,000	16	1,448	0.92	83.41	0.10	9.40
2,187,001	2,268,000	14	1,462	0.81	84.22	0.09	9.49
2,268,000 초과		274	1,736	15.78	100.00	1.78	11.27
전 체		1,736		100.00		11.27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1,248	1,248	22.67	22.67	8.10	8.10
1	32,400	284	1,532	5.16	27.83	1.84	9.95
32,401	64,800	186	1,718	3.38	31.21	1.21	11.15
64,801	97,200	181	1,899	3.29	34.50	1.18	12.33
97,201	129,600	204	2,103	3.71	38.21	1.32	13.65
129,601	162,000	150	2,253	2.73	40.93	0.97	14.63
162,001	194,400	163	2,416	2.96	43.90	1.06	15.68
194,401	226,800	137	2,553	2.49	46.38	0.89	16.57
226,801	259,200	137	2,690	2.49	48.87	0.89	17.46
259,201	291,600	136	2,826	2.47	51.34	0.88	18.35
291,601	324,000	107	2,933	1.94	53.29	0.69	19.04
324,001	356,400	93	3,026	1.69	54.98	0.60	19.64
356,401	388,800	93	3,119	1.69	56.67	0.60	20.25
388,801	421,200	103	3,222	1.87	58.54	0.67	20.92
421,201	453,600	82	3,304	1.49	60.03	0.53	21.45
453,601	486,000	77	3,381	1.40	61.43	0.50	21.95
486,001	518,400	80	3,461	1.45	62.88	0.52	22.47
518,401	550,800	60	3,521	1.09	63.97	0.39	22.86
550,801	583,200	78	3,599	1.42	65.39	0.51	23.36
583,201	615,600	53	3,652	0.96	66.35	0.34	23.71
615,601	648,000	55	3,707	1.00	67.35	0.36	24.07
648,001	680,400	38	3,745	0.69	68.04	0.25	24.31
680,401	712,800	51	3,796	0.93	68.97	0.33	24.64
712,801	745,200	54	3,850	0.98	69.95	0.35	24.99
745,201	777,600	45	3,895	0.82	70.77	0.29	25.29
777,601	810,000	41	3,936	0.74	71.51	0.27	25.55
810,001	842,400	42	3,978	0.76	72.27	0.27	25.82
842,401	874,800	43	4,021	0.78	73.06	0.28	26.10
874,801	907,200	38	4,059	0.69	73.75	0.25	26.35
907,201	939,600	44	4,103	0.80	74.55	0.29	26.64
939,601	972,000	36	4,139	0.65	75.20	0.23	26.87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972,001	1,004,400	32	4,171	0.58	75.78	0.21	27.08
1,004,401	1,036,800	36	4,207	0.65	76.44	0.23	27.31
1,036,801	1,069,200	43	4,250	0.78	77.22	0.28	27.59
1,069,201	1,101,600	27	4,277	0.49	77.71	0.18	27.77
1,101,601	1,134,000	26	4,303	0.47	78.18	0.17	27.93
1,134,001	1,166,400	36	4,339	0.65	78.83	0.23	28.17
1,166,401	1,198,800	30	4,369	0.55	79.38	0.19	28.36
1,198,801	1,231,200	25	4,394	0.45	79.83	0.16	28.53
1,231,201	1,263,600	34	4,428	0.62	80.45	0.22	28.75
1,263,601	1,296,000	29	4,457	0.53	80.98	0.19	28.93
1,296,001	1,328,400	28	4,485	0.51	81.49	0.18	29.12
1,328,401	1,360,800	21	4,506	0.38	81.87	0.14	29.25
1,360,801	1,393,200	17	4,523	0.31	82.18	0.11	29.36
1,393,201	1,425,600	16	4,539	0.29	82.47	0.10	29.47
1,425,601	1,458,000	19	4,558	0.35	82.81	0.12	29.59
1,458,001	1,490,400	17	4,575	0.31	83.12	0.11	29.70
1,490,401	1,522,800	15	4,590	0.27	83.39	0.10	29.80
1,522,801	1,555,200	20	4,610	0.36	83.76	0.13	29.93
1,555,201	1,587,600	16	4,626	0.29	84.05	0.10	30.03
1,587,601	1,620,000	17	4,643	0.31	84.36	0.11	30.14
1,620,001	1,701,000	43	4,686	0.78	85.14	0.28	30.42
1,701,001	1,782,000	40	4,726	0.73	85.86	0.26	30.68
1,782,001	1,863,000	30	4,756	0.55	86.41	0.19	30.88
1,863,001	1,944,000	30	4,786	0.55	86.95	0.19	31.07
1,944,001	2,025,000	41	4,827	0.74	87.70	0.27	31.34
2,025,001	2,106,000	24	4,851	0.44	88.14	0.16	31.49
2,106,001	2,187,000	26	4,877	0.47	88.61	0.17	31.66
2,187,001	2,268,000	21	4,898	0.38	88.99	0.14	31.80
2,268,000 초과		606	5,504	11.01	100.00	3.93	35.73
전체		5,504		100.00		35.73	

구분				전체			
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전 가구기준(%)	누적(%)
0		0		6,097	6,097	39.58	39.58
1	20,000	1	32,400	739	6,836	4.80	44.38
20,001	40,000	32,401	64,800	478	7,314	3.10	47.48
40,001	60,000	64,801	97,200	446	7,760	2.90	50.38
60,001	80,000	97,201	129,600	437	8,197	2.84	53.21
80,001	100,000	129,601	162,000	454	8,651	2.95	56.16
100,001	120,000	162,001	194,400	417	9,068	2.71	58.87
120,001	140,000	194,401	226,800	297	9,365	1.93	60.80
140,001	160,000	226,801	259,200	314	9,679	2.04	62.83
160,001	180,000	259,201	291,600	261	9,940	1.69	64.53
180,001	200,000	291,601	324,000	199	10,139	1.29	65.82
200,001	220,000	324,001	356,400	207	10,346	1.34	67.16
220,001	240,000	356,401	388,800	189	10,535	1.23	68.39
240,001	260,000	388,801	421,200	182	10,717	1.18	69.57
260,001	280,000	421,201	453,600	160	10,877	1.04	70.61
280,001	300,000	453,601	486,000	156	11,033	1.01	71.62
300,001	320,000	486,001	518,400	140	11,173	0.91	72.53
320,001	340,000	518,401	550,800	130	11,303	0.84	73.38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55	11,458	1.01	74.38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14	11,572	0.74	75.12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08	11,680	0.70	75.82
400,001	420,000	648,001	680,400	90	11,770	0.58	76.41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09	11,879	0.71	77.12
440,001	460,000	712,801	745,200	92	11,971	0.60	77.71
460,001	480,000	745,201	777,600	88	12,059	0.57	78.28
480,001	500,000	777,601	810,000	85	12,144	0.55	78.84
500,001	520,000	810,001	842,400	77	12,221	0.50	79.34
520,001	540,000	842,401	874,800	78	12,299	0.51	79.84
540,001	560,000	874,801	907,200	74	12,373	0.48	80.32
560,001	580,000	907,201	939,600	81	12,454	0.53	80.85
580,001	600,000	939,601	972,000	76	12,530	0.49	81.34

구분				전체			
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61	12,591	0.40	81.74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65	12,656	0.42	82.16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78	12,734	0.51	82.67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57	12,791	0.37	83.04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60	12,851	0.39	83.43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61	12,912	0.40	83.82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56	12,968	0.36	84.19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54	13,022	0.35	84.54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63	13,085	0.41	84.95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60	13,145	0.39	85.33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46	13,191	0.30	85.63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44	13,235	0.29	85.92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43	13,278	0.28	86.20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81	13,359	0.53	86.72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37	13,396	0.24	86.96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40	13,436	0.26	87.22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29	13,465	0.19	87.41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39	13,504	0.25	87.67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39	13,543	0.25	87.92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34	13,577	0.22	88.14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90	13,667	0.58	88.72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96	13,763	0.62	89.35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65	13,828	0.42	89.77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66	13,894	0.43	90.20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71	13,965	0.46	90.66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60	14,025	0.39	91.05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57	14,082	0.37	91.42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51	14,133	0.33	91.75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1,271	15,404	8.25	100.00
전체		전체		15,404		100.00	

구분				가구원수	누적 가구원수	단독가구 노인	누적단독 가구노인	부부가구 노인	누적부부 가구노인	부부가구 (A)노인	누적 부부가구 (A)노인	부부가구 (B)노인	누적 부부가구 (B)노인
노인단독		노인부부											
0		0		7,600	7,600	4,594	4,594	2,751	2,751	255	255	2,496	2,496
1	20,000	1	32,400	1,074	8,674	404	4,998	619	3,370	51	306	568	3,064
20,001	40,000	32,401	64,800	707	9,381	249	5,247	415	3,785	43	349	372	3,436
40,001	60,000	64,801	97,200	672	10,053	220	5,467	407	4,192	45	394	362	3,798
60,001	80,000	97,201	129,600	691	10,744	183	5,650	458	4,650	50	444	408	4,206
80,001	100,000	129,601	162,000	651	11,395	257	5,907	347	4,997	47	491	300	4,506
100,001	120,000	162,001	194,400	620	12,015	214	6,121	366	5,363	40	531	326	4,832
120,001	140,000	194,401	226,800	470	12,485	124	6,245	310	5,673	36	567	274	5,106
140,001	160,000	226,801	259,200	498	12,983	130	6,375	321	5,994	47	614	274	5,380
160,001	180,000	259,201	291,600	424	13,407	98	6,473	299	6,293	27	641	272	5,652
180,001	200,000	291,601	324,000	343	13,750	55	6,528	251	6,544	37	678	214	5,866
200,001	220,000	324,001	356,400	335	14,085	79	6,607	221	6,765	35	713	186	6,052
220,001	240,000	356,401	388,800	311	14,396	67	6,674	215	6,980	29	742	186	6,238
240,001	260,000	388,801	421,200	311	14,707	53	6,727	232	7,212	26	768	206	6,444
260,001	280,000	421,201	453,600	273	14,980	47	6,774	195	7,407	31	799	164	6,608
280,001	300,000	453,601	486,000	258	15,238	54	6,828	179	7,586	25	824	154	6,762
300,001	320,000	486,001	518,400	237	15,475	43	6,871	177	7,763	17	841	160	6,922
320,001	340,000	518,401	550,800	216	15,691	44	6,915	146	7,909	26	867	120	7,042
340,001	360,000	550,801	583,200	257	15,948	53	6,968	180	8,089	24	891	156	7,198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84	16,132	44	7,012	123	8,212	17	908	106	7,304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83	16,315	33	7,045	130	8,342	20	928	110	7,414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46	16,461	34	7,079	94	8,436	18	946	76	7,490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87	16,648	31	7,110	129	8,565	27	973	102	7,592
440,001	460,000	712,801	745,200	166	16,814	18	7,128	128	8,693	20	993	108	7,700
460,001	480,000	745,201	777,600	152	16,966	24	7,152	109	8,802	19	1,012	90	7,790
480,001	500,000	777,601	810,000	146	17,112	24	7,176	102	8,904	20	1,032	82	7,872
500,001	520,000	810,001	842,400	134	17,246	20	7,196	99	9,003	15	1,047	84	7,956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38	17,384	18	7,214	103	9,106	17	1,064	86	8,042
540,001	560,000	874,801	907,200	126	17,510	22	7,236	90	9,196	14	1,078	76	8,118
560,001	580,000	907,201	939,600	143	17,653	19	7,255	106	9,302	18	1,096	88	8,206
580,001	600,000	939,601	972,000	128	17,781	24	7,279	88	9,390	16	1,112	72	8,278

구분				가구원 수	누적 가구원 수	단독가구 노인	누적단 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노인	누적 부부가구 노인	부부가구 (A)노인	누적 부부가구 (A)노인	부부가구 (B)노인	누적 부부가구 (B)노인
노인단독		노인부부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110	17,891	12	7,291	81	9,471	17	1,129	64	8,342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112	18,003	18	7,309	83	9,554	11	1,140	72	8,414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132	18,135	24	7,333	97	9,651	11	1,151	86	8,500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101	18,236	13	7,346	71	9,722	17	1,168	54	8,554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100	18,336	20	7,366	66	9,788	14	1,182	52	8,606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111	18,447	11	7,377	86	9,874	14	1,196	72	8,678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97	18,544	15	7,392	71	9,945	11	1,207	60	8,738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95	18,639	13	7,405	66	10,011	16	1,223	50	8,788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111	18,750	15	7,420	82	10,093	14	1,237	68	8,856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94	18,844	26	7,446	63	10,156	5	1,242	58	8,914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82	18,926	10	7,456	64	10,220	8	1,250	56	8,970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75	19,001	13	7,469	52	10,272	10	1,260	42	9,012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69	19,070	17	7,486	43	10,315	9	1,269	34	9,046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114	19,184	48	7,534	49	10,364	17	1,286	32	9,078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65	19,249	9	7,543	47	10,411	9	1,295	38	9,116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70	19,319	10	7,553	47	10,458	13	1,308	34	9,150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46	19,365	12	7,565	32	10,490	2	1,310	30	9,180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67	19,432	11	7,576	48	10,538	8	1,318	40	9,220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64	19,496	14	7,590	41	10,579	9	1,327	32	9,252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53	19,549	15	7,605	36	10,615	2	1,329	34	9,286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156	19,705	24	7,629	109	10,724	23	1,352	86	9,372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158	19,863	34	7,663	102	10,826	22	1,374	80	9,452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107	19,970	23	7,686	72	10,898	12	1,386	60	9,512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110	20,080	22	7,708	74	10,972	14	1,400	60	9,572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128	20,208	14	7,722	98	11,070	16	1,416	82	9,654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100	20,308	20	7,742	64	11,134	16	1,432	48	9,702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99	20,407	15	7,757	68	11,202	16	1,448	52	9,754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86	20,493	16	7,773	56	11,258	14	1,462	42	9,796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2,151	22,644	391	8,164	1,486	12,744	274	1,736	1,212	11,008
전체		전체		22,644		8,164		12,744		1,736		11,008	

구분				노인수	누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누적(%)
노인단독		노인부부					
0		0		7,345	7,345	35.13	35.13
1	20,000	1	32,400	1,023	8,368	4.89	40.02
20,001	40,000	32,401	64,800	664	9,032	3.18	43.20
40,001	60,000	64,801	97,200	627	9,659	3.00	46.20
60,001	80,000	97,201	129,600	641	10,300	3.07	49.26
80,001	100,000	129,601	162,000	604	10,904	2.89	52.15
100,001	120,000	162,001	194,400	580	11,484	2.77	54.93
120,001	140,000	194,401	226,800	434	11,918	2.08	57.00
140,001	160,000	226,801	259,200	451	12,369	2.16	59.16
160,001	180,000	259,201	291,600	397	12,766	1.90	61.06
180,001	200,000	291,601	324,000	306	13,072	1.46	62.52
200,001	220,000	324,001	356,400	300	13,372	1.43	63.96
220,001	240,000	356,401	388,800	282	13,654	1.35	65.31
240,001	260,000	388,801	421,200	285	13,939	1.36	66.67
260,001	280,000	421,201	453,600	242	14,181	1.16	67.83
280,001	300,000	453,601	486,000	233	14,414	1.11	68.94
300,001	320,000	486,001	518,400	220	14,634	1.05	69.99
320,001	340,000	518,401	550,800	190	14,824	0.91	70.90
340,001	360,000	550,801	583,200	233	15,057	1.11	72.02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67	15,224	0.80	72.81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63	15,387	0.78	73.59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28	15,515	0.61	74.21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60	15,675	0.77	74.97
440,001	460,000	712,801	745,200	146	15,821	0.70	75.67
460,001	480,000	745,201	777,600	133	15,954	0.64	76.31
480,001	500,000	777,601	810,000	126	16,080	0.60	76.91
500,001	520,000	810,001	842,400	119	16,199	0.57	77.48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21	16,320	0.58	78.06
540,001	560,000	874,801	907,200	112	16,432	0.54	78.59
560,001	580,000	907,201	939,600	125	16,557	0.60	79.19
580,001	600,000	939,601	972,000	112	16,669	0.54	79.73

구분				노인수	누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누적(%)
노인단독		노인부부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93	16,762	0.44	80.17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101	16,863	0.48	80.65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121	16,984	0.58	81.23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84	17,068	0.40	81.63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86	17,154	0.41	82.05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97	17,251	0.46	82.51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86	17,337	0.41	82.92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79	17,416	0.38	83.30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97	17,513	0.46	83.76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89	17,602	0.43	84.19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74	17,676	0.35	84.54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65	17,741	0.31	84.85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60	17,801	0.29	85.14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97	17,898	0.46	85.60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56	17,954	0.27	85.87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57	18,011	0.27	86.14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44	18,055	0.21	86.35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59	18,114	0.28	86.64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55	18,169	0.26	86.90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51	18,220	0.24	87.14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133	18,353	0.64	87.78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136	18,489	0.65	88.43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95	18,584	0.45	88.88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96	18,680	0.46	89.34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112	18,792	0.54	89.88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84	18,876	0.40	90.28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83	18,959	0.40	90.68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72	19,031	0.34	91.02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1,877	20,908	8.98	100.00
전체		전체		20,908		100.00	

〈부표 3-4〉 재산의 소득환산률 8% 적용시 노인의 가구형태별 소득인정액 분포

구분		노인단독					
노인단독(원)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4,594	4,594	56.27	56.27	29.82	29.82
1	20,000	347	4,941	4.25	60.52	2.25	32.08
20,001	40,000	253	5,194	3.10	63.62	1.64	33.72
40,001	60,000	172	5,366	2.11	65.73	1.12	34.84
60,001	80,000	207	5,573	2.54	68.26	1.34	36.18
80,001	100,000	234	5,807	2.87	71.13	1.52	37.70
100,001	120,000	202	6,009	2.47	73.60	1.31	39.01
120,001	140,000	164	6,173	2.01	75.61	1.06	40.07
140,001	160,000	106	6,279	1.30	76.91	0.69	40.76
160,001	180,000	119	6,398	1.46	78.37	0.77	41.53
180,001	200,000	66	6,464	0.81	79.18	0.43	41.96
200,001	220,000	66	6,530	0.81	79.99	0.43	42.39
220,001	240,000	67	6,597	0.82	80.81	0.43	42.83
240,001	260,000	61	6,658	0.75	81.55	0.40	43.22
260,001	280,000	55	6,713	0.67	82.23	0.36	43.58
280,001	300,000	42	6,755	0.51	82.74	0.27	43.85
300,001	320,000	40	6,795	0.49	83.23	0.26	44.11
320,001	340,000	45	6,840	0.55	83.78	0.29	44.40
340,001	360,000	39	6,879	0.48	84.26	0.25	44.66
360,001	380,000	46	6,925	0.56	84.82	0.30	44.96
380,001	400,000	45	6,970	0.55	85.37	0.29	45.25
400,001	420,000	44	7,014	0.54	85.91	0.29	45.53
420,001	440,000	24	7,038	0.29	86.21	0.16	45.69
440,001	460,000	26	7,064	0.32	86.53	0.17	45.86
460,001	480,000	34	7,098	0.42	86.94	0.22	46.08
480,001	500,000	20	7,118	0.24	87.19	0.13	46.21
500,001	520,000	15	7,133	0.18	87.37	0.10	46.31
520,001	540,000	23	7,156	0.28	87.65	0.15	46.46
540,001	560,000	21	7,177	0.26	87.91	0.14	46.59
560,001	580,000	21	7,198	0.26	88.17	0.14	46.73
580,001	600,000	14	7,212	0.17	88.34	0.09	46.82

구분		노인단독					
노인단독(원)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600,001	620,000	18	7,230	0.22	88.56	0.12	46.94
620,001	640,000	22	7,252	0.27	88.83	0.14	47.08
640,001	660,000	19	7,271	0.23	89.06	0.12	47.20
660,001	680,000	23	7,294	0.28	89.34	0.15	47.35
680,001	700,000	16	7,310	0.20	89.54	0.10	47.46
700,001	720,000	10	7,320	0.12	89.66	0.06	47.52
720,001	740,000	25	7,345	0.31	89.97	0.16	47.68
740,001	760,000	15	7,360	0.18	90.15	0.10	47.78
760,001	780,000	13	7,373	0.16	90.31	0.08	47.86
780,001	800,000	30	7,403	0.37	90.68	0.19	48.06
800,001	820,000	14	7,417	0.17	90.85	0.09	48.15
820,001	840,000	12	7,429	0.15	91.00	0.08	48.23
840,001	860,000	9	7,438	0.11	91.11	0.06	48.29
860,001	880,000	49	7,487	0.60	91.71	0.32	48.60
880,001	900,000	17	7,504	0.21	91.92	0.11	48.71
900,001	920,000	14	7,518	0.17	92.09	0.09	48.81
920,001	940,000	7	7,525	0.09	92.17	0.05	48.85
940,001	960,000	13	7,538	0.16	92.33	0.08	48.94
960,001	980,000	17	7,555	0.21	92.54	0.11	49.05
980,001	1,000,000	12	7,567	0.15	92.69	0.08	49.12
1,000,001	1,050,000	23	7,590	0.28	92.97	0.15	49.27
1,050,001	1,100,000	28	7,618	0.34	93.31	0.18	49.45
1,100,001	1,150,000	30	7,648	0.37	93.68	0.19	49.65
1,150,001	1,200,000	19	7,667	0.23	93.91	0.12	49.77
1,200,001	1,250,000	17	7,684	0.21	94.12	0.11	49.88
1,250,001	1,300,000	24	7,708	0.29	94.41	0.16	50.04
1,300,001	1,350,000	23	7,731	0.28	94.70	0.15	50.19
1,350,001	1,400,000	11	7,742	0.13	94.83	0.07	50.26
1,400,000 초과		422	8,164	5.17	100.00	2.74	53.00
전체		8,164		100.00		53.00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256	256	14.75	14.75	1.66	1.66
1	32,400	44	300	2.53	17.28	0.29	1.95
32,401	64,800	39	339	2.25	19.53	0.25	2.20
64,801	97,200	44	383	2.53	22.06	0.29	2.49
97,201	129,600	52	435	3.00	25.06	0.34	2.82
129,601	162,000	41	476	2.36	27.42	0.27	3.09
162,001	194,400	33	509	1.90	29.32	0.21	3.30
194,401	226,800	41	550	2.36	31.68	0.27	3.57
226,801	259,200	34	584	1.96	33.64	0.22	3.79
259,201	291,600	37	621	2.13	35.77	0.24	4.03
291,601	324,000	29	650	1.67	37.44	0.19	4.22
324,001	356,400	34	684	1.96	39.40	0.22	4.44
356,401	388,800	28	712	1.61	41.01	0.18	4.62
388,801	421,200	34	746	1.96	42.97	0.22	4.84
421,201	453,600	14	760	0.81	43.78	0.09	4.93
453,601	486,000	35	795	2.02	45.79	0.23	5.16
486,001	518,400	19	814	1.09	46.89	0.12	5.28
518,401	550,800	19	833	1.09	47.98	0.12	5.41
550,801	583,200	19	852	1.09	49.08	0.12	5.53
583,201	615,600	21	873	1.21	50.29	0.14	5.67
615,601	648,000	25	898	1.44	51.73	0.16	5.83
648,001	680,400	17	915	0.98	52.71	0.11	5.94
680,401	712,800	23	938	1.32	54.03	0.15	6.09
712,801	745,200	15	953	0.86	54.90	0.10	6.19
745,201	777,600	24	977	1.38	56.28	0.16	6.34
777,601	810,000	17	994	0.98	57.26	0.11	6.45
810,001	842,400	18	1,012	1.04	58.29	0.12	6.57
842,401	874,800	27	1,039	1.56	59.85	0.18	6.75
874,801	907,200	13	1,052	0.75	60.60	0.08	6.83
907,201	939,600	11	1,063	0.63	61.23	0.07	6.90
939,601	972,000	16	1,079	0.92	62.15	0.10	7.00

구분		노인부부: 배우자가 64세 이하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972,001	1,004,400	18	1,097	1.04	63.19	0.12	7.12
1,004,401	1,036,800	14	1,111	0.81	64.00	0.09	7.21
1,036,801	1,069,200	14	1,125	0.81	64.80	0.09	7.30
1,069,201	1,101,600	21	1,146	1.21	66.01	0.14	7.44
1,101,601	1,134,000	10	1,156	0.58	66.59	0.06	7.50
1,134,001	1,166,400	8	1,164	0.46	67.05	0.05	7.56
1,166,401	1,198,800	11	1,175	0.63	67.68	0.07	7.63
1,198,801	1,231,200	16	1,191	0.92	68.61	0.10	7.73
1,231,201	1,263,600	13	1,204	0.75	69.35	0.08	7.82
1,263,601	1,296,000	13	1,217	0.75	70.10	0.08	7.90
1,296,001	1,328,400	12	1,229	0.69	70.79	0.08	7.98
1,328,401	1,360,800	7	1,236	0.40	71.20	0.05	8.02
1,360,801	1,393,200	8	1,244	0.46	71.66	0.05	8.08
1,393,201	1,425,600	11	1,255	0.63	72.29	0.07	8.15
1,425,601	1,458,000	10	1,265	0.58	72.87	0.06	8.21
1,458,001	1,490,400	11	1,276	0.63	73.50	0.07	8.28
1,490,401	1,522,800	9	1,285	0.52	74.02	0.06	8.34
1,522,801	1,555,200	7	1,292	0.40	74.42	0.05	8.39
1,555,201	1,587,600	14	1,306	0.81	75.23	0.09	8.48
1,587,601	1,620,000	8	1,314	0.46	75.69	0.05	8.53
1,620,001	1,701,000	19	1,333	1.09	76.79	0.12	8.65
1,701,001	1,782,000	20	1,353	1.15	77.94	0.13	8.78
1,782,001	1,863,000	11	1,364	0.63	78.57	0.07	8.85
1,863,001	1,944,000	15	1,379	0.86	79.44	0.10	8.95
1,944,001	2,025,000	15	1,394	0.86	80.30	0.10	9.05
2,025,001	2,106,000	17	1,411	0.98	81.28	0.11	9.16
2,106,001	2,187,000	12	1,423	0.69	81.97	0.08	9.24
2,187,001	2,268,000	12	1,435	0.69	82.66	0.08	9.32
2,268,000 초과		301	1,736	17.34	100.00	1.95	11.27
전체		1,736		100.00		11.27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0		1,248	1,248	22.67	22.67	8.10	8.10
1	32,400	249	1,497	4.52	27.20	1.62	9.72
32,401	64,800	168	1,665	3.05	30.25	1.09	10.81
64,801	97,200	180	1,845	3.27	33.52	1.17	11.98
97,201	129,600	186	2,031	3.38	36.90	1.21	13.18
129,601	162,000	158	2,189	2.87	39.77	1.03	14.21
162,001	194,400	128	2,317	2.33	42.10	0.83	15.04
194,401	226,800	137	2,454	2.49	44.59	0.89	15.93
226,801	259,200	133	2,587	2.42	47.00	0.86	16.79
259,201	291,600	118	2,705	2.14	49.15	0.77	17.56
291,601	324,000	126	2,831	2.29	51.44	0.82	18.38
324,001	356,400	91	2,922	1.65	53.09	0.59	18.97
356,401	388,800	86	3,008	1.56	54.65	0.56	19.53
388,801	421,200	89	3,097	1.62	56.27	0.58	20.11
421,201	453,600	86	3,183	1.56	57.83	0.56	20.66
453,601	486,000	73	3,256	1.33	59.16	0.47	21.14
486,001	518,400	84	3,340	1.53	60.68	0.55	21.68
518,401	550,800	67	3,407	1.22	61.90	0.43	22.12
550,801	583,200	62	3,469	1.13	63.03	0.40	22.52
583,201	615,600	62	3,531	1.13	64.15	0.40	22.92
615,601	648,000	61	3,592	1.11	65.26	0.40	23.32
648,001	680,400	55	3,647	1.00	66.26	0.36	23.68
680,401	712,800	50	3,697	0.91	67.17	0.32	24.00
712,801	745,200	45	3,742	0.82	67.99	0.29	24.29
745,201	777,600	35	3,777	0.64	68.62	0.23	24.52
777,601	810,000	58	3,835	1.05	69.68	0.38	24.90
810,001	842,400	43	3,878	0.78	70.46	0.28	25.18
842,401	874,800	52	3,930	0.94	71.40	0.34	25.51
874,801	907,200	37	3,967	0.67	72.07	0.24	25.75
907,201	939,600	37	4,004	0.67	72.75	0.24	25.99
939,601	972,000	30	4,034	0.55	73.29	0.19	26.19

구분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전가구 기준(%)	누적(%)
972,001	1,004,400	41	4,075	0.74	74.04	0.27	26.45
1,004,401	1,036,800	25	4,100	0.45	74.49	0.16	26.62
1,036,801	1,069,200	41	4,141	0.74	75.24	0.27	26.88
1,069,201	1,101,600	49	4,190	0.89	76.13	0.32	27.20
1,101,601	1,134,000	30	4,220	0.55	76.67	0.19	27.40
1,134,001	1,166,400	23	4,243	0.42	77.09	0.15	27.54
1,166,401	1,198,800	28	4,271	0.51	77.60	0.18	27.73
1,198,801	1,231,200	30	4,301	0.55	78.14	0.19	27.92
1,231,201	1,263,600	23	4,324	0.42	78.56	0.15	28.07
1,263,601	1,296,000	29	4,353	0.53	79.09	0.19	28.26
1,296,001	1,328,400	38	4,391	0.69	79.78	0.25	28.51
1,328,401	1,360,800	26	4,417	0.47	80.25	0.17	28.67
1,360,801	1,393,200	23	4,440	0.42	80.67	0.15	28.82
1,393,201	1,425,600	27	4,467	0.49	81.16	0.18	29.00
1,425,601	1,458,000	25	4,492	0.45	81.61	0.16	29.16
1,458,001	1,490,400	13	4,505	0.24	81.85	0.08	29.25
1,490,401	1,522,800	19	4,524	0.35	82.19	0.12	29.37
1,522,801	1,555,200	18	4,542	0.33	82.52	0.12	29.49
1,555,201	1,587,600	16	4,558	0.29	82.81	0.10	29.59
1,587,601	1,620,000	14	4,572	0.25	83.07	0.09	29.68
1,620,001	1,701,000	45	4,617	0.82	83.88	0.29	29.97
1,701,001	1,782,000	46	4,663	0.84	84.72	0.30	30.27
1,782,001	1,863,000	29	4,692	0.53	85.25	0.19	30.46
1,863,001	1,944,000	44	4,736	0.80	86.05	0.29	30.75
1,944,001	2,025,000	37	4,773	0.67	86.72	0.24	30.99
2,025,001	2,106,000	23	4,796	0.42	87.14	0.15	31.13
2,106,001	2,187,000	23	4,819	0.42	87.55	0.15	31.28
2,187,001	2,268,000	30	4,849	0.55	88.10	0.19	31.48
2,268,000 초과		655	5,504	11.90	100.00	4.25	35.73
전체		5,504		100.00		35.73	

구분				전체			
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전 가구기준(%)	누적(%)
0		0		6,098	6,098	39.59	39.59
1	20,000	1	32,400	640	6,738	4.15	43.74
20,001	40,000	32,401	64,800	460	7,198	2.99	46.73
40,001	60,000	64,801	97,200	396	7,594	2.57	49.30
60,001	80,000	97,201	129,600	445	8,039	2.89	52.19
80,001	100,000	129,601	162,000	433	8,472	2.81	55.00
100,001	120,000	162,001	194,400	363	8,835	2.36	57.36
120,001	140,000	194,401	226,800	342	9,177	2.22	59.58
140,001	160,000	226,801	259,200	273	9,450	1.77	61.35
160,001	180,000	259,201	291,600	274	9,724	1.78	63.13
180,001	200,000	291,601	324,000	221	9,945	1.43	64.56
200,001	220,000	324,001	356,400	191	10,136	1.24	65.80
220,001	240,000	356,401	388,800	181	10,317	1.18	66.98
240,001	260,000	388,801	421,200	184	10,501	1.19	68.17
260,001	280,000	421,201	453,600	155	10,656	1.01	69.18
280,001	300,000	453,601	486,000	150	10,806	0.97	70.15
300,001	320,000	486,001	518,400	143	10,949	0.93	71.08
320,001	340,000	518,401	550,800	131	11,080	0.85	71.93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20	11,200	0.78	72.71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29	11,329	0.84	73.55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31	11,460	0.85	74.40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16	11,576	0.75	75.15
420,001	440,000	680,401	712,800	97	11,673	0.63	75.78
440,001	460,000	712,801	745,200	86	11,759	0.56	76.34
460,001	480,000	745,201	777,600	93	11,852	0.60	76.94
480,001	500,000	777,601	810,000	95	11,947	0.62	77.56
500,001	520,000	810,001	842,400	76	12,023	0.49	78.05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02	12,125	0.66	78.71
540,001	560,000	874,801	907,200	71	12,196	0.46	79.17
560,001	580,000	907,201	939,600	69	12,265	0.45	79.62
580,001	600,000	939,601	972,000	60	12,325	0.39	80.01

구분				전체			
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수	누적가구수	노인단독 기준(%)	누적(%)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77	12,402	0.50	80.51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61	12,463	0.40	80.91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74	12,537	0.48	81.39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93	12,630	0.60	81.99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56	12,686	0.36	82.36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41	12,727	0.27	82.62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64	12,791	0.42	83.04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61	12,852	0.40	83.43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49	12,901	0.32	83.75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72	12,973	0.47	84.22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64	13,037	0.42	84.63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45	13,082	0.29	84.93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40	13,122	0.26	85.19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87	13,209	0.56	85.75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52	13,261	0.34	86.09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38	13,299	0.25	86.33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35	13,334	0.23	86.56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38	13,372	0.25	86.81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47	13,419	0.31	87.11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34	13,453	0.22	87.33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87	13,540	0.56	87.90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94	13,634	0.61	88.51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70	13,704	0.45	88.96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78	13,782	0.51	89.47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69	13,851	0.45	89.92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64	13,915	0.42	90.33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58	13,973	0.38	90.71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53	14,026	0.34	91.05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1,378	15,404	8.95	100.00
전체		전체		15,404		100.00	

구분				가구원수	누적 가구원수	단독가구 노인	누적단독 가구노인	부부가구 노인	누적부부 가구노인	부부가구 (A)노인	누적 부부가구 (A)노인	부부가구 (B)노인	누적 부부가구 (B)노인
노인단독		노인부부											
0		0		7,602	7,602	4,594	4,594	2,752	2,752	256	256	2,496	2,496
1	20,000	1	32,400	933	8,535	347	4,941	542	3,294	44	300	498	2,994
20,001	40,000	32,401	64,800	667	9,202	253	5,194	375	3,669	39	339	336	3,330
40,001	60,000	64,801	97,200	620	9,822	172	5,366	404	4,073	44	383	360	3,690
60,001	80,000	97,201	129,600	683	10,505	207	5,573	424	4,497	52	435	372	4,062
80,001	100,000	129,601	162,000	632	11,137	234	5,807	357	4,854	41	476	316	4,378
100,001	120,000	162,001	194,400	524	11,661	202	6,009	289	5,143	33	509	256	4,634
120,001	140,000	194,401	226,800	520	12,181	164	6,173	315	5,458	41	550	274	4,908
140,001	160,000	226,801	259,200	440	12,621	106	6,279	300	5,758	34	584	266	5,174
160,001	180,000	259,201	291,600	429	13,050	119	6,398	273	6,031	37	621	236	5,410
180,001	200,000	291,601	324,000	376	13,426	66	6,464	281	6,312	29	650	252	5,662
200,001	220,000	324,001	356,400	316	13,742	66	6,530	216	6,528	34	684	182	5,844
220,001	240,000	356,401	388,800	295	14,037	67	6,597	200	6,728	28	712	172	6,016
240,001	260,000	388,801	421,200	307	14,344	61	6,658	212	6,940	34	746	178	6,194
260,001	280,000	421,201	453,600	255	14,599	55	6,713	186	7,126	14	760	172	6,366
280,001	300,000	453,601	486,000	258	14,857	42	6,755	181	7,307	35	795	146	6,512
300,001	320,000	486,001	518,400	246	15,103	40	6,795	187	7,494	19	814	168	6,680
320,001	340,000	518,401	550,800	217	15,320	45	6,840	153	7,647	19	833	134	6,814
340,001	360,000	550,801	583,200	201	15,521	39	6,879	143	7,790	19	852	124	6,938
360,001	380,000	583,201	615,600	212	15,733	46	6,925	145	7,935	21	873	124	7,062
380,001	400,000	615,601	648,000	217	15,950	45	6,970	147	8,082	25	898	122	7,184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88	16,138	44	7,014	127	8,209	17	915	110	7,294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70	16,308	24	7,038	123	8,332	23	938	100	7,394
440,001	460,000	712,801	745,200	146	16,454	26	7,064	105	8,437	15	953	90	7,484
460,001	480,000	745,201	777,600	152	16,606	34	7,098	94	8,531	24	977	70	7,554
480,001	500,000	777,601	810,000	170	16,776	20	7,118	133	8,664	17	994	116	7,670
500,001	520,000	810,001	842,400	137	16,913	15	7,133	104	8,768	18	1,012	86	7,756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81	17,094	23	7,156	131	8,899	27	1,039	104	7,860
540,001	560,000	874,801	907,200	121	17,215	21	7,177	87	8,986	13	1,052	74	7,934
560,001	580,000	907,201	939,600	117	17,332	21	7,198	85	9,071	11	1,063	74	8,008
580,001	600,000	939,601	972,000	106	17,438	14	7,212	76	9,147	16	1,079	60	8,068

구분				가구원 수	누적 가구원 수	단독가구 노인	누적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노인	누적 부부가구 노인	부부가구 (A)노인	누적 부부가구 (A)노인	부부가구 (B)노인	누적 부부가구 (B)노인
노인단독		노인부부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136	17,574	18	7,230	100	9,247	18	1,097	82	8,150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100	17,674	22	7,252	64	9,311	14	1,111	50	8,200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129	17,803	19	7,271	96	9,407	14	1,125	82	8,282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163	17,966	23	7,294	119	9,526	21	1,146	98	8,380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96	18,062	16	7,310	70	9,596	10	1,156	60	8,440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72	18,134	10	7,320	54	9,650	8	1,164	46	8,486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103	18,237	25	7,345	67	9,717	11	1,175	56	8,542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107	18,344	15	7,360	76	9,793	16	1,191	60	8,602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85	18,429	13	7,373	59	9,852	13	1,204	46	8,648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114	18,543	30	7,403	71	9,923	13	1,217	58	8,706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114	18,657	14	7,417	88	10,011	12	1,229	76	8,782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78	18,735	12	7,429	59	10,070	7	1,236	52	8,834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71	18,806	9	7,438	54	10,124	8	1,244	46	8,880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125	18,931	49	7,487	65	10,189	11	1,255	54	8,934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87	19,018	17	7,504	60	10,249	10	1,265	50	8,984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62	19,080	14	7,518	37	10,286	11	1,276	26	9,010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63	19,143	7	7,525	47	10,333	9	1,285	38	9,048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63	19,206	13	7,538	43	10,376	7	1,292	36	9,084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77	19,283	17	7,555	46	10,422	14	1,306	32	9,116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56	19,339	12	7,567	36	10,458	8	1,314	28	9,144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151	19,490	23	7,590	109	10,567	19	1,333	90	9,234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160	19,650	28	7,618	112	10,679	20	1,353	92	9,326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110	19,760	30	7,648	69	10,748	11	1,364	58	9,384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137	19,897	19	7,667	103	10,851	15	1,379	88	9,472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121	20,018	17	7,684	89	10,940	15	1,394	74	9,546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104	20,122	24	7,708	63	11,003	17	1,411	46	9,592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93	20,215	23	7,731	58	11,061	12	1,423	46	9,638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95	20,310	11	7,742	72	11,133	12	1,435	60	9,698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2,334	22,644	422	8,164	1,611	12,744	301	1,736	1,310	11,008
전체		전체		22,644		8,164		12,744		1,736		11,008	

구분				노인수	누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누적(%)
노인단독		노인부부					
0		0		7,346	7,346	35.13	35.13
1	20,000	1	32,400	889	8,235	4.25	39.39
20,001	40,000	32,401	64,800	628	8,863	3.00	42.39
40,001	60,000	64,801	97,200	576	9,439	2.75	45.15
60,001	80,000	97,201	129,600	631	10,070	3.02	48.16
80,001	100,000	129,601	162,000	591	10,661	2.83	50.99
100,001	120,000	162,001	194,400	491	11,152	2.35	53.34
120,001	140,000	194,401	226,800	479	11,631	2.29	55.63
140,001	160,000	226,801	259,200	406	12,037	1.94	57.57
160,001	180,000	259,201	291,600	392	12,429	1.87	59.45
180,001	200,000	291,601	324,000	347	12,776	1.66	61.11
200,001	220,000	324,001	356,400	282	13,058	1.35	62.45
220,001	240,000	356,401	388,800	267	13,325	1.28	63.73
240,001	260,000	388,801	421,200	273	13,598	1.31	65.04
260,001	280,000	421,201	453,600	241	13,839	1.15	66.19
280,001	300,000	453,601	486,000	223	14,062	1.07	67.26
300,001	320,000	486,001	518,400	227	14,289	1.09	68.34
320,001	340,000	518,401	550,800	198	14,487	0.95	69.29
340,001	360,000	550,801	583,200	182	14,669	0.87	70.16
360,001	380,000	583,201	615,600	191	14,860	0.91	71.07
380,001	400,000	615,601	648,000	192	15,052	0.92	71.99
400,001	420,000	648,001	680,400	171	15,223	0.82	72.81
420,001	440,000	680,401	712,800	147	15,370	0.70	73.51
440,001	460,000	712,801	745,200	131	15,501	0.63	74.14
460,001	480,000	745,201	777,600	128	15,629	0.61	74.75
480,001	500,000	777,601	810,000	153	15,782	0.73	75.48
500,001	520,000	810,001	842,400	119	15,901	0.57	76.05
520,001	540,000	842,401	874,800	154	16,055	0.74	76.79
540,001	560,000	874,801	907,200	108	16,163	0.52	77.31
560,001	580,000	907,201	939,600	106	16,269	0.51	77.81
580,001	600,000	939,601	972,000	90	16,359	0.43	78.24

구분				노인수	누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누적(%)
노인단독		노인부부					
600,001	620,000	972,001	1,004,400	118	16,477	0.56	78.81
620,001	640,000	1,004,401	1,036,800	86	16,563	0.41	79.22
640,001	660,000	1,036,801	1,069,200	115	16,678	0.55	79.77
660,001	680,000	1,069,201	1,101,600	142	16,820	0.68	80.45
680,001	700,000	1,101,601	1,134,000	86	16,906	0.41	80.86
700,001	720,000	1,134,001	1,166,400	64	16,970	0.31	81.17
720,001	740,000	1,166,401	1,198,800	92	17,062	0.44	81.61
740,001	760,000	1,198,801	1,231,200	91	17,153	0.44	82.04
760,001	780,000	1,231,201	1,263,600	72	17,225	0.34	82.38
780,001	800,000	1,263,601	1,296,000	101	17,326	0.48	82.87
800,001	820,000	1,296,001	1,328,400	102	17,428	0.49	83.36
820,001	840,000	1,328,401	1,360,800	71	17,499	0.34	83.70
840,001	860,000	1,360,801	1,393,200	63	17,562	0.30	84.00
860,001	880,000	1,393,201	1,425,600	114	17,676	0.55	84.54
880,001	900,000	1,425,601	1,458,000	77	17,753	0.37	84.91
900,001	920,000	1,458,001	1,490,400	51	17,804	0.24	85.15
920,001	940,000	1,490,401	1,522,800	54	17,858	0.26	85.41
940,001	960,000	1,522,801	1,555,200	56	17,914	0.27	85.68
960,001	980,000	1,555,201	1,587,600	63	17,977	0.30	85.98
980,001	1,000,000	1,587,601	1,620,000	48	18,025	0.23	86.21
1,000,001	1,050,000	1,620,001	1,701,000	132	18,157	0.63	86.84
1,050,001	1,100,000	1,701,001	1,782,000	140	18,297	0.67	87.51
1,100,001	1,150,000	1,782,001	1,863,000	99	18,396	0.47	87.99
1,150,001	1,200,000	1,863,001	1,944,000	122	18,518	0.58	88.57
1,200,001	1,250,000	1,944,001	2,025,000	106	18,624	0.51	89.08
1,250,001	1,300,000	2,025,001	2,106,000	87	18,711	0.42	89.49
1,300,001	1,350,000	2,106,001	2,187,000	81	18,792	0.39	89.88
1,350,001	1,400,000	2,187,001	2,268,000	83	18,875	0.40	90.28
1,400,000 초과		2,268,000 초과		2,033	20,908	9.72	100.00
전체		전체		20,908		100.00	

〈부표 3-5〉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시 차등지급 여부별 소요자원 규모 비교

1. 차등구간 미설정

노인 단독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56,000	84,000	5,607	87.16	5,651,856,000
	56,001-80,000	84,000	247	3.84	248,976,000
	80,001-110,000	84,000	387	6.02	390,096,000
	110,001-140,000	84,000	192	2.98	193,536,000
	소계		6,433	100.00	6,484,464,000
	410,000초과		1,731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148,200	84,000	501	79.52	505,008,000
	142,801-166,800	84,000	47	7.46	47,376,000
	166,801-196,800	84,000	47	7.46	47,376,000
	196,801-226,800	84,000	35	5.56	35,280,000
	소계		630	100.00	635,040,000
	226,800초과		1,106		
	전체		1,736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86,800	140,000	1,977	70.53	3,321,360,000
	86,801-106,800	140,000	130	4.64	218,400,000
	106,801-166,800	140,000	402	14.34	675,360,000
	166,801-226,800	140,000	294	10.49	493,920,000
	소계		2,803	100.00	4,709,040,000
	226,800초과		2,701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9,866	0	0.00	11,828,544,000	0

2.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

노인 단독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56,000	84,000	5,607	87.16	5,651,856,000
	56,001-80,000	84,000	247	3.84	248,976,000
	80,001-110,000	60,000	387	6.02	278,640,000
	110,001-140,000	30,000	192	2.98	69,120,000
	소계		6,433	100.00	6,248,592,000
	140,000초과		1,731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148,200	84,000	501	79.52	505,008,000
	142,801-166,800	84,000	47	7.46	47,376,000
	166,801-196,800	60,000	47	7.46	33,840,000
	196,801-226,800	30,000	35	5.56	12,600,000
	소계		630	100.00	598,824,000
	226,800초과		1,106		
	전체		1,736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86,800	140,000	1,977	70.53	3,321,360,000
	86,801-106,800	140,000	130	4.64	218,400,000
	106,801-166,800	120,000	402	14.34	578,880,000
	166,801-226,800	60,000	294	10.49	211,680,000
	소계		2,803	100.00	4,330,320,000
	226,800초과		2,701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가구 총급여액
	9,866	1,357			1,184,760,000

3. 보충급여방식 차등구간 설정

노인 단독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56,000	84,000	5,607	87.16	5,651,856,000
	56,001-80,000	83,999~60,000	247	3.84	212,279,732
	80,001-110,000	59,999~30,000	387	6.02	214,555,173
	110,001-140,000	29,999~0	192	2.98	37,170,455
	소계		6,433	100.00	6,115,861,360
	140,000초과		1,731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148,200	84,000	501	79.52	505,008,000
	142,801-166,800	83,999~60,000	47	7.46	40,177,680
	166,801-196,800	59,999~30,000	47	7.46	25,795,896
	196,801-226,800	29,999~0	35	5.56	5,509,932
	소계		630	100.00	576,491,508
	226,800초과		1,106		
	전체		1,736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86,800	140,000	1,977	70.53	3,321,360,000
	86,801-106,800	139,999~120,000	130	4.64	202,819,628
	106,801-166,800	119,999~60,000	402	14.34	436,715,001
	166,801-226,800	59,999~0	294	10.49	110,175,874
	소계		2,803	100.00	4,071,070,504
	226,800초과		2,701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가구 총급여액
	9,866	1,781			829,922,332

4. 각안의 비교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계단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4.50%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1.00%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6.29%

〈부표 3-6〉 재산의 소득환산율 6% 적용시 차등지급 여부별 소요자원 규모 비교

1. 차등구간 미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노인 단독	0-76,000	84,000	5,708	88.51	5,753,664,000
	76,001-100,000	84,000	321	4.98	323,568,000
	100,001-130,000	84,000	264	4.09	266,112,000
	130,001-160,000	84,000	156	2.42	157,248,000
	소계		6,449	100.00	6,500,592,000
	160,000초과		1,715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175,200	84,000	529	82.92	533,232,000
	175,201-199,200	84,000	33	5.17	33,264,000
	199,201-229,200	84,000	44	6.90	44,352,000
	229,201-259,200	84,000	32	5.02	32,256,000
	소계		638	100.00	643,104,000
	259,200초과		1,098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119,200	140,000	2,113	74.93	3,549,840,000
	119,201-139,200	140,000	112	3.97	188,160,000
	139,201-199,200	140,000	321	11.38	539,280,000
	199,201-259,200	140,000	274	9.72	460,320,000
	소계		2,820	100.00	4,737,600,000
	259,200초과		2,68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9,907	0	0.00	11,881,296,000	0

2.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노인 단독	0-76,000	84,000	5,708	88.51	5,753,664,000
	76,001-100,000	84,000	321	4.98	323,568,000
	100,001-130,000	60,000	264	4.09	190,080,000
	130,001-160,000	30,000	156	2.42	56,160,000
	소계		6,449	100.00	6,323,472,000
	160,000초과		1,715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175,200	84,000	529	82.92	533,232,000
	175,201-199,200	84,000	33	5.17	33,264,000
	199,201-229,200	60,000	44	6.90	31,680,000
	229,201-259,200	30,000	32	5.02	11,520,000
	소계		638	100.00	609,696,000
	259,200초과		1,098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119,200	140,000	2,113	74.93	3,549,840,000
	119,201-139,200	140,000	112	3.97	188,160,000
	139,201-199,200	120,000	321	11.38	462,240,000
	199,201-259,200	60,000	274	9.72	197,280,000
	소계		2,820	100.00	4,397,520,000
	259,200초과		2,684		
전체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가구 총급여액
	9,907	1,091	11.01	11,330,688,000	948,960,000

3. 보충급여방식 차등구간 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노인 단독	0-76,000	84,000	5,708	88.51	5,753,664,000
	76,001-100,000	84,000	321	4.98	272,028,633
	100,001-130,000	84,000	264	4.09	143,094,493
	130,001-160,000	84,000	156	2.42	29,140,116
	소계		6,449	100.00	6,197,927,241
	160,000초과		1,715		
	전체		8,164		
노인 부부 (A)	0-175,200	84,000	529	82.92	533,232,000
	175,201-199,200	84,000	33	5.17	28,411,836
	199,201-229,200	84,000	44	6.90	24,590,160
	229,201-259,200	84,000	32	5.02	5,584,884
	소계		638	100.00	591,818,880
	259,200초과		1,098		
	전체		1,736		
노인 부부 (B)	0-119,200	140,000	2,113	74.93	3,549,840,000
	119,201-139,200	140,000	112	3.97	174,299,557
	139,201-199,200	140,000	321	11.38	348,439,969
	199,201-259,200	140,000	274	9.72	96,986,556
	소계		2,820	100.00	4,169,566,083
	259,200초과		2,684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가구 총급여액
	9,907	1,557	15.72	10,959,312,204	647,836,178

4. 각안의 비교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계단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5.37%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2.24%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6.72%

〈부표 3-7〉 재산의 소득환산율 7% 적용시 차등지급 여부별 소요자원 규모 비교

1. 차등구간 미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노인 단독	0-96,000	84,000	5,847	90.33	5,893,776,000
	96,001-120,000	84,000	274	4.23	276,192,000
	120,001-150,000	84,000	195	3.01	196,560,000
	150,001-180,000	84,000	157	2.43	158,256,000
	소계		6,473	100.00	6,524,784,000
	180,000초과		1,691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207,600	84,000	548	85.49	552,384,000
	207,601-231,600	84,000	28	4.37	28,224,000
	231,601-261,600	84,000	39	6.08	39,312,000
	261,601-291,600	84,000	26	4.06	26,208,000
	소계		641	100.00	646,128,000
	291,600초과		1,095		
	전체		1,736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151,600	140,000	2,203	77.95	3,701,040,000
	151,601-171,600	140,000	90	3.18	151,200,000
	171,601-231,600	140,000	280	9.91	470,400,000
	231,601-291,600	140,000	253	8.95	425,040,000
	소계		2,826	100.00	4,747,680,000
	291,600초과		2,678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9,940	0	0.00	11,918,592,000	0

2.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노인 단독	0-96,000	84,000	5,847	90.33	5,893,776,000
	96,001-120,000	84,000	274	4.23	276,192,000
	120,001-150,000	60,000	195	3.01	140,400,000
	150,001-180,000	30,000	157	2.43	56,520,000
	소계		6,473	100.00	6,366,888,000
	180,000초과		1,691		
	전체		8,164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노인 부부 (A)	0-207,600	84,000	548	85.49	552,384,000
	207,601-231,600	84,000	28	4.37	28,224,000
	231,601-261,600	60,000	39	6.08	28,080,000
	261,601-291,600	30,000	26	4.06	9,360,000
	소계		641	100.00	618,048,000
	291,600초과		1,095		
	전체		1,736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노인 부부 (B)	0-151,600	140,000	2,203	77.95	3,701,040,000
	151,601-171,600	140,000	90	3.18	151,200,000
	171,601-231,600	120,000	280	9.91	403,200,000
	231,601-291,600	60,000	253	8.95	182,160,000
	소계		2,826	100.00	4,437,600,000
	291,600초과		2,678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가구 총급여액
	9,940	950	9.6	11,422,536,000	819,720,000

3. 보충급여방식 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노인 단독	0-96,000	84,000	5,847	90.33	5,893,776,000
	96,001-120,000	84,000	274	4.23	237,902,465
	120,001-150,000	84,000	195	3.01	105,467,015
	150,001-180,000	84,000	157	2.43	30,256,779
	소계		6,473	100.00	6,267,402,258
	180,000초과		1,691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207,600	84,000	548	85.49	552,384,000
	207,601-231,600	84,000	28	4.37	23,983,995
	231,601-261,600	84,000	39	6.08	23,082,505
	261,601-291,600	84,000	26	4.06	4,668,312
	소계		641	100.00	604,118,812
노인 부부 (B)	291,600초과		1,095		
	전체		1,736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0-151,600	140,000	2,203	77.95	3,701,040,000
	151,601-171,600	140,000	90	3.18	140,842,529
	171,601-231,600	140,000	280	9.91	310,290,420
	231,601-291,600	140,000	253	8.95	90,665,888
	소계		2,826	100.00	4,242,838,838
전체	291,600초과		2,678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가구 총급여액
	9,940	1,342	13.50	11,114,359,908	564,430,920

4. 각안의 비교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계단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5.84%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3.25%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7.30%

〈부표 3-8〉 재산의 소득환산율 8% 적용시 차등지급 여부별 소요자원 규모 비교

1. 차등구간 미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노인 단독	0-116,000	84,000	5,976	92.45	6,023,808,000
	116,001-140,000	84,000	197	3.05	198,576,000
	140,001-170,000	84,000	179	2.77	180,432,000
	170,001-200,000	84,000	112	1.73	112,896,000
	소계		6,464	100.00	6,515,712,000
	200,000초과		1,700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240,000	84,000	566	87.08	570,528,000
	240,001-264,000	84,000	24	3.69	24,192,000
	264,001-294,000	84,000	31	4.77	31,248,000
	294,001-324,000	84,000	29	4.46	29,232,000
	소계		650	100.00	655,200,000
	324,000초과		1,086		
	전체		1,736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184,000	140,000	2,278	80.47	3,827,040,000
	184,001-204,000	140,000	99	3.50	166,320,000
	204,001-264,000	140,000	231	8.16	388,080,000
	264,001-324,000	140,000	223	7.88	374,640,000
	소계		2,831	100.00	4,756,080,000
	324,000초과		2,673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9,945	0	0.00	11,926,992,000	0

2. 계단식 차등구간 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노인 단독	0-116,000	84,000	5,976	92.45	6,023,808,000
	116,001-140,000	84,000	197	3.05	198,576,000
	140,001-170,000	60,000	179	2.77	128,880,000
	170,001-200,000	30,000	112	1.73	40,320,000
	소계		6,464	100.00	6,391,584,000
	200,000초과		1,700		
	전체		8,164		
노인 부부 (A)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240,000	84,000	566	87.08	570,528,000
	240,001-264,000	84,000	24	3.69	24,192,000
	264,001-294,000	60,000	31	4.77	22,320,000
	294,001-324,000	30,000	29	4.46	10,440,000
	소계		650	100.00	627,480,000
	324,000초과		1,086		
노인 부부 (B)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0-184,000	140,000	2,278	80.47	3,827,040,000
	184,001-204,000	140,000	99	3.50	166,320,000
	204,001-264,000	120,000	231	8.16	332,640,000
	264,001-324,000	60,000	223	7.88	160,560,000
	소계		2,831	100.00	4,486,560,000
	324,000초과		2,673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가구 총급여액
	9,945	805	8.09	11,505,624,000	695,160,000

3. 보충급여방식 설정

	구분		가구수	비율	연간 급여액
	소득인정액구간	기초노령연금급여액			
노인 단독	0-116,000	84,000	5,976	92.45	6,023,808,000
	116,001-140,000	84,000	197	3.05	171,336,884
	140,001-170,000	84,000	179	2.77	94,736,171
	170,001-200,000	84,000	112	1.73	23,275,882
	소계		6,464	100.00	6,313,156,937
	200,000초과		1,700		
	전체		8,164		
노인 부부 (A)	0-240,000	84,000	566	87.08	570,528,000
	240,001-264,000	84,000	24	3.69	20,976,919
	264,001-294,000	84,000	31	4.77	18,412,576
	294,001-324,000	84,000	29	4.46	4,622,979
	소계		650	100.00	614,540,474
	324,000초과		1,086		
	전체		1,736		
노인 부부 (B)	0-184,000	140,000	2,278	80.47	3,827,040,000
	184,001-204,000	140,000	99	3.50	152,591,031
	204,001-264,000	140,000	231	8.16	245,545,371
	264,001-324,000	140,000	223	7.88	78,633,018
	소계		2,831	100.00	4,303,809,420
	324,000초과		2,673		
	전체		5,504		
전체	수급가구수	차등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가구총급여액
	9,945	1,125	11.31	11,231,506,832	465,225,997

4. 각안의 비교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계단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6.47%
차등구간 미설정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4.17%
계단식 차등구간 대비 보충급여식 차등구간 연간 총급여액 비율	97.62%

〈부표 3-9〉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시 차등지급 방법별 소요액 비교

	수급가구수	차등구간 가구수	비율	연간 총급여액	차등구간가구 총급여액
차등 구간 미적용	9,866	0	0.00	11,828,544,000	0
	예산추정치			2,594,326,472,063 (2조 5,943억)	
	노인단독			1,422,222,093,635 (1조 4,222억)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139,281,815,481 (1,393억)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1,032,822,562,946 (1조 328억)	
계단 방식 차등 구간 적용	9,866	1,357	13.75	11,177,736,000	1,184,760,000
	예산추정치			2,451,586,298,578 (2조 4,516억)	
	노인단독			1,370,488,847,885 (1조 3,705억)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131,338,646,186 (1,313억)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949,758,804,507 (9,498억)	
보충 급여 방식 차등 구간 적용	9,866	1,781	18.05	10,763,423,372	829,922,332
	예산추정치			2,360,716,093,565 (2조 3,607억)	
	노인단독			1,341,377,351,778 (1조 3,414억)	
	노인부부(배우자 64세 이하)			126,440,513,737 (1,264억)	
	노인부부(배우자 65세 이상)			892,898,228,050 (8,929억)	